2020.12.31

국회미래연구원 I 연구보고서 I 20-18호

성평등 이슈와 예측 기반 미래 정책방향 도출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연구보고서 20-18

성평등 이슈와 예측 기반 미래 정책방향 도출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연 구 진

내부연구진

김유빈 연구위원

※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탁연구로 추진되었으며, 내부 연구진은 전체 연구 및 델파이 문항 설계, 성평등 관련 학술 논문 키워드 분석, 거시환경변화와 주요 성평등 이슈 분석에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함

외부연구진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책임자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애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문희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무단 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발 | 간 | 사

성평등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미래 가치입니다.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성평등을 위해 여러 정책을 펼쳐 왔지만, 여전히 관련된 여러 지표들이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본 연구는 지난 20~30년간의 한국 사회의 성평등 추이를 분석하고, 2020년 현재의 성평등 수준 및 2040년 예상되는 성평등 수준의 전망을 한국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장기 정책 과제와 방향을 찾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특히, 공적 의사결정에서의 동등한 영향력,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등 성평등 수준의 비교, 분석 및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체계적인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인구구조, 고령화, 과학기술의 발전,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 미래 사회의 거시적 환경변화들이 성평등의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밝힘으로써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결정직 여성의 대표성 보장, 노동시장 성차별 개선, 돌봄의 재평가, 인공지능의 공정성 증진, 젠더 폭력 처벌 강화 등 단기적으로 신속히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에서부터, 포용 민주주의 제도화, 소득보장제도 재설계, 돌봄 경제에 대한 투자 등 성평등 수준 개선을 위해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장기적인 정책 방향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수행된 성평등 관련 전문가 23명의 델파이 조사 및 전문가 집담회 등은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20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과제 수요 조사를 통해 제안된 과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상임위와 유관 부처에 잘 전달하여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입법·제도화 방안을 공동 모색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 외부 연

발 | 간 | 사

구 책임을 맡아 주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마경희 실장님과 김효정 박사님, 김애라 박사님, 문희영 전문연구원님 등 공동연구진, 반복되는 설문 과정에 성실히 임해주신 성평등 분야 전문가들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0년 12월

국회미래연구원장 김현곤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7

1. 연구 내용 ····· 7
2. 연구 방법 ····· 10

제3절 연구의 흐름 ····· 16

제2장 선행연구 검토 ····· 17

제1절 성평등 관련 학술 논문 키워드 분석 ····· 19

제2절 거시환경변화와 성평등의 미래 ····· 28

1. 인구구조의 변화와 젠더 관계의 재편 ····· 28
2. 과학기술의 발전과 부상하는 젠더 이슈 ····· 39
3. 디지털 전환과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 ····· 48
4. 기후변화와 성별화된 재난 취약성 ····· 52
5. 정치환경의 변화와 여성 세력화 ····· 56

제3장 지난 20년간 성평등 추이 ····· 61

제1절 공적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영향력 ····· 63

1. 정치·정책 결정에서의 대표성 ····· 63
2. 공공부문 및 민간기업 관리직으로의 여성 진출 ····· 66

제2절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 74
1. 노동시장 참여 ····· 74
2.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 ····· 76
3. 고용의 질 ····· 78
4. 성별 소득 격차 ····· 82

제3절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 86
1. 무급노동 시간 ····· 86
2. 육아휴직 사용 ····· 87

제4절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 90
1.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 90
2. 성차별주의 의식 ····· 93

제5절 젠더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 94
1. 강력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 ····· 94
2. 일상생활에서의 범죄 피해 불안 ····· 95

제4장 성평등의 현주소와 2040년 미래 전망: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 97

제1절 전문가 델파이 조사 질문지의 구성 ····· 99
1. 2020년 현재 성평등 진단 ····· 99
2. 거시환경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 100
3. 2040년 미래 성평등 전망 ····· 101

제2절 2020년 현재 성평등 진단 ····· 102
1. 2020년 성평등 수준 평가 ····· 102
2. 영역별 성평등 수준 평가의 논거 ····· 105

제3절 거시환경 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 117
1. 거시환경 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력 ····· 117
2. 거시환경 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의 논거 ····· 122
3. 거시환경변화와 주요 성평등 이슈 ····· 136

제4절 2040년 미래 성평등 전망 ····· 145
1. 2040년 예상되는 성평등 수준 ····· 145
2. 영역별 성평등 전망에 대한 논거 ····· 148

제5절 2040년 달성가능한 성평등 목표 ····· 153

제5장 성평등 미래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 155

제1절 공적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영향력 ····· 157
1. 2020년 현재 진단 및 2040년 전망 ····· 157
2. 단기적 정책 과제와 미래 정책 방향 ····· 159

제2절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 162
1. 2020년 현재 진단 및 2040년 전망 ····· 162
2. 단기적 정책 과제와 미래 정책 방향 ····· 164

제3절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 168
1. 2020년 현재 진단 및 2040년 전망 ····· 168
2. 단기적 정책 과제와 미래 정책 방향 ····· 170

제4절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 174
1. 2020년 현재 진단 및 2040년 전망 ····· 174
2. 단기적 정책 과제와 미래 정책 방향 ····· 176

제5절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 180
1. 2020년 현재 진단 및 2040년 전망 ····· 180
2. 단기적 정책 과제와 미래 정책 방향 ····· 182

참고문헌 ····· 185
1. 문헌 자료 ····· 187
2. 웹 사이트 ····· 197

Abstract ····· 201

〈표 1-1〉 성평등 추이 분석 ····· 7
〈표 1-2〉 2040년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 8
〈표 1-3〉 델파이 조사 참여자 선정 과정 ····· 13
〈표 1-4〉 델파이 조사 참여자의 특성 ····· 14

〈표 2-1〉 1시기의 연결중심성 분석 ····· 21
〈표 2-2〉 2시기의 연결중심성 분석 ····· 23
〈표 2-3〉 3시기의 연결중심성 분석 ····· 26

〈표 3-1〉 법조인 중 여성 비율(2000~2019년) ····· 68
〈표 3-2〉 경찰 중 여성 비율(2005~2019년) ····· 70

〈표 4-1〉 2020년 현재 한국사회한국 사회 성평등 점수 분포 ····· 103
〈표 4-2〉 거시환경변화가 2040년 미래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I) -+ 값의 분포 ····· 119
〈표 4-3〉 거시환경변화가 2040년 미래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II) - 값의 분포 ····· 121
〈표 4-4〉 전문가 설문조사 출현 빈도 기준 상위 20개 키워드 ····· 138
〈표 4-5〉 전문가 설문조사 키워드 중심성 분석 상위 20개 키워드 ····· 140
〈표 4-6〉 2020년 현재 및 2040년 미래 성평등 수준 점수 분포 비교 ····· 147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 ····· 16

[그림 2-1] 연구재단 '성평등' 관련 KCI 문헌 1시기 키워드 네트워크(2005년~2007년) ·· 20
[그림 2-2] 연구재단 '성평등' 관련 KCI 문헌 2시기 키워드 네트워크(2008년~2014년) ·· 22
[그림 2-3] 연구재단 '성평등' 관련 KCI 문헌 3시기 키워드 네트워크(2015~2019년) ····· 25
[그림 2-4]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1970~2018년) ····· 28
[그림 2-5] 연령별 출산율(1993~2018년) ····· 29
[그림 2-6] 조혼인율 및 혼인 연령(2000년, 2019년) ····· 31
[그림 2-7] 남녀 미혼율(2000년, 2015년) ····· 32

[그림 3-1]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1992~2020년) ····· 64
[그림 3-2] OECD 국가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2020.5년) ····· 64
[그림 3-3] 역대 정부 장관 중 여성 비율(1993~2020년) ····· 65
[그림 3-4] OECD 국가 장관 중 여성 비율(2019년) ····· 66
[그림 3-5] 중앙행정기관 3급 이상 및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율(2000~2019년) ···· 67
[그림 3-6] 학교급별 교장 중 여성 비율(1990~2019년) ····· 68
[그림 3-7] 지법 부장판사 이상 판사 중 여성 비율(2012~2017년) ····· 69
[그림 3-8] 검사장 이상 검사 중 여성 비율(2005~2019년) ····· 69
[그림 3-9] 경정, 경위, 경감 이상 경찰 중 여성 비율(2005~2019년) ····· 71
[그림 3-10] 군인 장교, 부사관 중 여성 비율(2007~2017년) ····· 71
[그림 3-11] 민간기업 임원 중 여성 비율(2014~2018년) ····· 72
[그림 3-12] 민간기업 이사 중 여성 비율(2017~2019년) ····· 73
[그림 3-13] 성별 고용률(2000~2019년) ····· 74
[그림 3-14] OECD 국가 여성 고용률(2019년) ····· 75
[그림 3-15]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비교(2000년, 2019년) ····· 75
[그림 3-16] 경력단절 여성 비율(2011~2019년) ····· 76
[그림 3-17] 던칸 지수 추이(2003~2017년) ····· 77
[그림 3-18] 이공계 전공자 중 여성 비율(2000~2019년) ····· 78
[그림 3-19] 성별 임금격차(2000~2019년) ····· 79

[그림 3-20] OECD 국가 성별 임금격차(2018년) ····· 79
[그림 3-21] 성별 저임금 근로자 비중(1992~2019년) ····· 80
[그림 3-22] OECD 국가 성별 저임금 근로자 비중(2018년) ····· 81
[그림 3-23] 성별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중(2003~2020년) ····· 82
[그림 3-24] 성별 상대 빈곤율(2006~2016년) ····· 83
[그림 3-25]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율 추이(2006~2018년) ····· 84
[그림 3-26] 성별 국민연금 가입률(1990~2019년) ····· 84
[그림 3-27] 성별 국민연금 수급액 및 여성 수급액 비중(2000~2019년) ····· 85
[그림 3-28] 맞벌이-홑벌이 부부 가사노동 시간(1999~2019년) ····· 86
[그림 3-29] OECD 국가 성별 무급노동 시간 ····· 87
[그림 3-30] 성별 육아휴직자 수 변화 추이 및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2002~2018년) ···· 88
[그림 3-31] 성별 육아휴직 이용 일수(2009~2018년) ····· 88
[그림 3-32] OECD 국가 남성 육아휴직 비율(2016년) ····· 89
[그림 3-33]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2002~2018년) ····· 91
[그림 3-34]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1998~2019년) ····· 91
[그림 3-35] 성별 연령별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2019년) ····· 92
[그림 3-36] 남성 연령별 성차별주의 의식(2018년) ····· 93
[그림 3-37]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1994~2018년) ····· 94
[그림 3-38] 카메라 이용 촬영 음란죄 신고 건수 및 여성 피해자 비율(2009~2018년) ·· 95
[그림 3-39] 성별 세대별 일상생활에서의 불안(2019) ····· 96

[그림 4-1] 2020년 현재 한국 사회 성평등 수준 ····· 103
[그림 4-2] 영역별 성평등 수준 구간별 빈도 ····· 104
[그림 4-3] 거시환경변화가 2040년 미래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력 ····· 118
[그림 4-4] 거시환경변화가 2040년 미래 성평등에 미치는의 영향력(I) 전문가 응답 -+ 값의 분포 ····· 120
[그림 4-5] 거시환경변화가 2040년 미래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거시환경변화의 영향력(II) 전문가 응답(II) - 값의 분포 ····· 122
[그림 4-6] 전문가 설문조사 키워드에 대한 단어 구름 ····· 137

[그림 4-7] 전문가 설문조사 키워드 네트워크(1-mode) ····· 139
[그림 4-8] '폭력' 관련 세부 네트워크 ····· 141
[그림 4-9] 11개 영향 요인과 키워드 간 네트워크(2-mode) ····· 143
[그림 4-10] 2020년 현재 및 2040년 미래 성평등 수준 비교 ····· 146
[그림 4-11] 2040년 미래 성평등 수준 점수 분포 ····· 147
[그림 4-12] 2020년 현재, 2040년 성평등 전망, 성평등 목표 ····· 153

요 약

1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성평등은 인권과 민주주의, 사회정의의 완전 실현하기 위한 이슈로서 그 자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지만, 인간개발, 경제성장, 인구 재생산 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제**
  - 유엔개발계획(UNDP), 맥킨지 글로벌연구소(Mckinsey Global Institut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글로벌 국제기구는 성차별과 성 격차 해소가 경제성장의 완전한 잠재력을 실현할 기제가 된다고 주장함.
  - 선진 복지국가 비교에 기초한 경험적 연구는 성평등이 출산율 반등 효과를 가져온 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줌.
- **한국은 명시적 성차별은 감소했으나 위계적 젠더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는 지체**
  -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와 돌봄, 경력단절, 의사결정직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 등 자원과 영향력의 불균등한 분배의 결과 세계경제포럼의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는 매년 전 세계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 **느리게 변화하고 있는 성차별적 제도, 문화, 규범, 성차별주의 의식은 우리 사회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함.**
  -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기회비용, 가부장적 가족 제도와 문화로 결혼과 출산을 회피하는 여성 증가, 이는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식됨.
  - 온라인상 여성혐오와 성차별에 저항하면서 201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부상한 페미니즘의 대중화 이후 청년세대 내 젠더 인식 격차 커지면서 성별 갈등을 심화함.

- **이 연구는 향후 거시사회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2040년 한국 사회 성평등 수준을 전망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성평등 정책 과제와 장기적 정책 방안을 제안함.**
  - 이전 세대보다 젠더 인식 격차와 갈등을 크게 경험하고 있는 20~30대 청년이 중장년층이 되는 2040년 성평등 수준을 예측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안함.

❑ 연구 내용

- **지난 20~30년간 한국 사회 성평등 추이 분석**
  - 공적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영향력,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무급 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등 5개 성평등 차원별로 지표를 선정하여 이용가능한 통계자료를 통해 변화의 추이를 분석함.
- **2020년 현재 성평등 수준 평가 및 2040년 전망**
  - 전문가 델파이 조사 기법을 활용하여 성평등 영역별로 현재 성평등 수준을 평가하고, 거시사회환경 변화가 미래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 2040년 성평등 수준을 전망함.
- **미래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와 방향 제안**
  - 5개 성평등 차원별 2020년 현재 진단 및 2040년 전망을 토대로 단기적 정책 과제와 장기적 정책 방향을 도출하여 제안함.

❑ 연구 방법

- **선행연구 검토**
  -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연구의 기획과 방법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및 정책과제를 제안함.
- **국내외 통계자료 분석**
  - 통계청 KOSIS, 부처별 통계, 정책연구 보고서, OECD 국가 통계 등 국내외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시계열적으로 성평등 추이를 분석함.

• **전문가 델파이 조사**

- 조사 참여자: 젠더 전문가 23명
- 조사 기간: 2020. 9. 1.~2020. 10. 21.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에 기반한 서면조사(3회)
- 조사 내용: 2020년 현재 성평등 수준 진단, 거시환경 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2040년 미래 성평등 전망

• **전문가 집담회**

- 연구 및 델파이 조사 기획, 조사 결과 해석,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해 전문가 집담회를 개최함.

2 선행연구 검토

❑ 성평등 관련 학술 논문 키워드 분석

- 2002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연구재단 KCI에 등록된 학술논문을 '성평등'을 키워드로 추출하여 키워드 분석을 함.
- 성희롱, 조직문화, 가사노동, 성역할 태도, 페미니즘, 성 주류화 등 성차별, 성 불평등과 관련된 근본적이고 전통적인 이슈가 매년 공통적인 키워드로 등장함.
- 성 소수자의 인권, 혐오, 젠더 폭력이 지난 3~4년 전부터 의미 있게 가시화함.

❑ 거시환경변화와 성평등의 미래

• **인구구조의 변화와 젠더 관계의 재편**

-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이후 등락을 반복하면서도 장기적으로 하락해 옴. 특히 2010년대 중후반 이후 출산율 하락 폭이 커짐. 증가하는 경향이 있던 30대 여성의 출산율도 감소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는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 및 노동시장 참여 확대로 인한 여성 생애기획에 부합하도록 가족 및 노동시장 환경변화가 따라오지 못한 결과로 이해해야 함.
- 이성애 기반 보편혼의 점진적 쇠퇴와 가족 구조의 다양성은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자 결과이며, 미래 젠더 관계의 재편을 예고함.

● **고령화와 빈곤·돌봄의 여성화**

- 현재 중장년층인 40~50대 여성의 노동시장 내 취약한 지위로 인해 인구고령화는 여성 노인의 빈곤과 경제적 취약성이 문제로 부상할 것임.
- 초고령자의 증가에 따라 노인 여성의 돌봄 수요 및 노인을 돌보는 중장년 여성의 돌봄 부담이 증가할 것임.
- 노인 1인 가구의 증가로 가부장적 생애과정에서 일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 온 남성 노인의 관계 단절과 자살 위험이 증가할 것임.

● **과학기술의 발전과 부상하는 젠더 이슈**

- 과학기술에 대한 접근성에서 누적된 성차별이 과학기술의 젠더 편향을 초래하며, 충분한 성별 데이터의 부족,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견과 차별은 성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은 미래 인간 존재 및 정의 자체에 대한 새로운 윤리적, 철학적 문제와 함께 젠더 범주 및 젠더 관계의 변화 전망을 제기함.
- 자연의 영역이었던 임신·출산이 기술 개입으로 이성애적 성적 결합 없이도 가능해지면서 여성의 삶과 가족, 인구변화에 미칠 영향과 함께 다양한 법적·윤리적 쟁점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함.
-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젠더 폭력은 더욱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며, 여성의 일상적 삶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디지털 전환과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

- 자동화와 로봇 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인 여성 집중 분야 일자리 손실을 초래할 것이며, 과학기술 분야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일자리에서 성별 분리 현상이 관찰되고 있음.

- 플랫폼 노동, 긱 경제의 확대, 유연근무제의 확산은 여성의 노동시장 내 지위를 더욱 취약하게 하며 전통적 성역할을 고착화할 것임.

• **기후변화와 성별화된 재난 취약성**

- 기후변화와 재난의 피해는 주로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특히 여성의 주거, 건강, 안전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전염병의 확산은 취약한 여성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며, 돌봄 부담과 폭력 피해를 가중함으로써 성 불평등을 심화함.

• **정치환경의 변화와 여성 세력화**

-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집단의 정치 참여와 영향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페미니즘 대중화의 배경이나 미래 여성들의 정치 참여에 긍정적인 신호임.
- 성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 정치 참여가 활성화하면서 사회 전반의 인권 및 민주주의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할 것임.

3 지난 20년간 성평등 추이

❑ 공적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영향력

• **국회의원, 장관, 4급 이상 공무원, 초중등학교 교장 등 정치·행정·교육 부문의 의사결정직에서 여성 비율 점진적으로 늘어났으나, OECD 국가 중 하위권**

- 국회의원(1992년 2.7%→2020년 19.0%), 장관(90년대 초반 10% 내외 → 2020년 33.3%), 4급 이상 공무원(2000년 2.1% → 2019년 16.2%), 초중등학교 교장(초등 1990년 2.5% → 2019년 48.5%, 고등 1990년 4.0% → 2019년 12.1%) 등 공공부문 의사결정직에서 여성 비율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옴.

• **판, 검사, 경찰, 군인 등 법 집행 영역에서 여성의 의사결정직 진출은 매우 미흡**

- 판사 중 여성 비율은 2000년 6.8% → 2019년 30.5%로 증가했으나, 지법 부장판사 중 여성 비율은 2017년 12.2%에 불과함.

- 검사 중 여성 비율은 2005년 7.0% → 2019년 31.0%로 증가했으나, 검사장 이상 검사 중 여성 비율 2019년 5.0%에 불과함.
- 경찰 중 여성 비율 2005년 4.6% → 2019년 11.9%로 소폭 증가했으나 경감 이상 경찰 중 여성 비율 2019년 4.7%에 불과함.

❑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 고용률 점진적 증가, M자 커브 완화되었으나 낮은 고용의 질, OECD 하위권

- 여성 고용률은 2000년 50.1%에서 2019년 57.8%,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2006년 60.6%에서 2019년 69.4%로 증가하고, 여성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991년 50.8%에서 2019년 26.1%로 감소했으나 여성의 노동시장 내 지위는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무름.

• 여성 빈곤율 증가

- 남성의 상대 빈곤율은 2006년 13.0%에서 2016년 12.3%로 감소했으나, 여성의 상대 빈곤율은 15.5%에서 16.8%로 소폭 증가함.
- 여성 가구주 가구 빈곤율 역시 2006년 28.7%에서 2018년 36.7%로 증가하여 일반 가구 증가율(2006년 16.3% → 2018년 20.3%)에 비해 높음.

❑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 성별 무급노동 시간 격차 지속

- 1999년 맞벌이 아내 가사노동시간 3시간 42분, 남편 27분으로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은 남편의 8.2배였으나 2019년 맞벌이 아내 3시간 7분, 남편 54분으로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은 남편의 3.4배로 지난 20년간 격차가 감소함. 그러나 이러한 격차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임.

•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 증가했으나, 여전히 절대다수가 여성

-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입어 육아휴직 이용자 중 남성의 비중은 2002년 2.1%에서 2018년 27.8%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절대다수는 여성임.

❑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 **여성에 대한 성역할 규범 완화하였으나 신전통적 성별 분업 부상**
  - 가정일에 관계없이 여성이 취업해야 한다는 인식은 1998년 30.4% → 2019년 62.5%, 남성 23.1% → 60.3%로 남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성별 인식 격차가 감소함.
  - 이에 비해 가사 분담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은 여성 2002년 35.9% → 2018년 62.9%, 남성 25.2% → 54.0%로 남녀 모두 증가했으나, 남성의 속도 지체로 인해 성별 인식 격차가 지속함.

❑ 젠더 폭력으로부터의 안전할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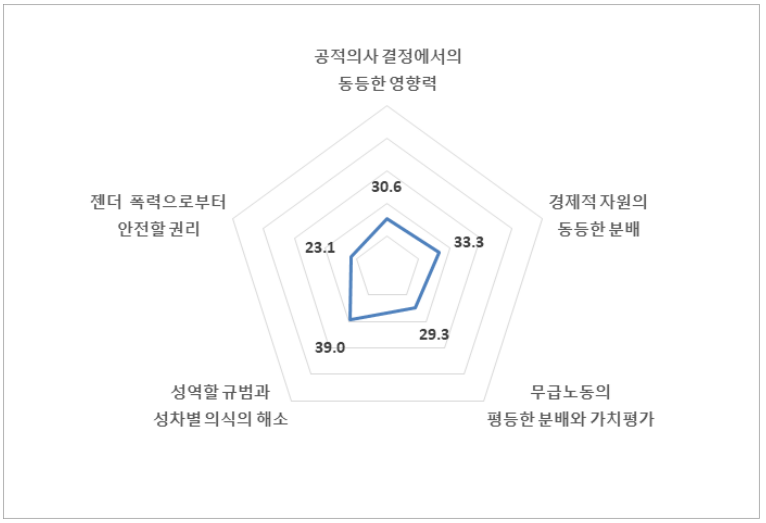
-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서 여성 피해자 증가**
  -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의 비중은 1994년 69.4%에서 2018년 83.1%로 크게 증가함.
- **카메라 이용 촬영 음란죄 증가**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음란죄는 2009년 834건에서 2018년 6,085건으로 10년 새 7.3배 증가함.
-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2019)**
  - 청년 여성 중 53.4%(남성 중 19.6%)가 살인, 폭력, 강간 등 피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청년 여성 중 60.4%(남성 중 18.9%)는 불법촬영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

4 성평등의 현주소와 2020년 미래 전망: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 2020년 현재 성평등 진단

- **성평등 영역별 평가**
  - 5개 성평등 영역 전체 평균 31.1점으로 '약간 낮음' 수준으로 평가됨.

-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39.0점)가 가장 높고,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23.1점)가 가장 낮음.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33.3점), 공적 의사결정에서의 동등한 영향력(30.6점),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평가(29.3점) 순임.



• 성평등 영역별 평가의 논거

- 의사결정에서의 동등한 영향력: 공공부문 의사결정직에서 여성의 양적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여전히 30% 임계치에 미달하고 있으며, 성평등한 방향으로의 조직 변화를 가져오는 실질적 대표성(substantial representation)은 미흡한 수준임.
-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고용률, 성별 임금격차, 저임금 여성 근로자의 비중 등의 측면에서 점진적 개선이 있고, 여성 취업 분야가 과거에 비해 확대되어 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그러나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 여성 집중, 노동시장 내 성차별이 지속하고, 여성 고용이 양극화됨.
- 무급노동의 동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격차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며, 남성의 돌봄 참여는 제한적이고,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은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로 고착화함.
-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청년층 중심으로 전통적 성역할 규범이 균열하고 있으나, 여성 취업이 확대한 만큼 남성의 돌봄 참여가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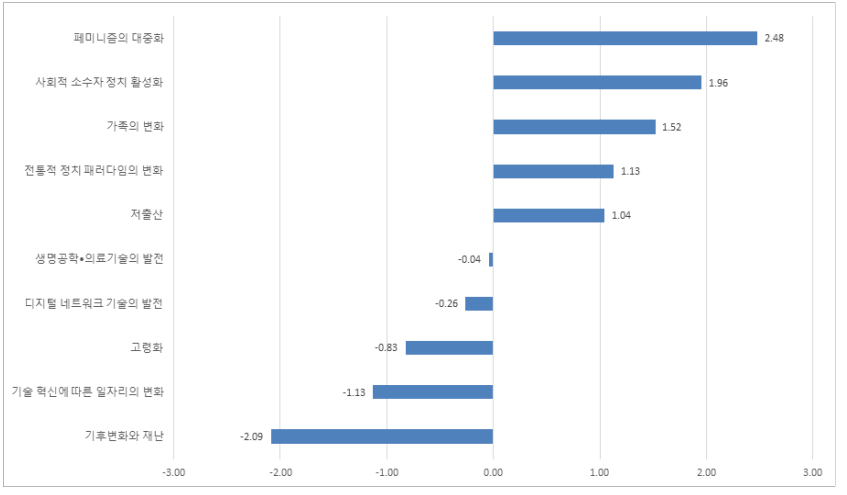
가하지 못하여 신전통적 성별 분업이 등장하고 있음. 젠더 문제에 대한 인식의 성별, 세대별 격차가 크고 여성혐오를 노골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점이 우려됨.

-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디지털 기반 젠더 폭력이 일상화되어 여성들의 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크지만, 젠더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의식 및 법·제도적 변화가 지체되어 범죄 피해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침해함.

❑ 거시환경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 거시환경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력

- 정치 영역(전통적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페미니즘의 대중화, 사회적 소수자 정치의 활성화)과 사회 영역(가족의 변화, 저출산)은 대체로 성평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환경 영역(기후변화와 재난)과 경제 영역(저성장의 장기화와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 그리고 고령화는 성평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생명공학·의료기술의 발전,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은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이 엇갈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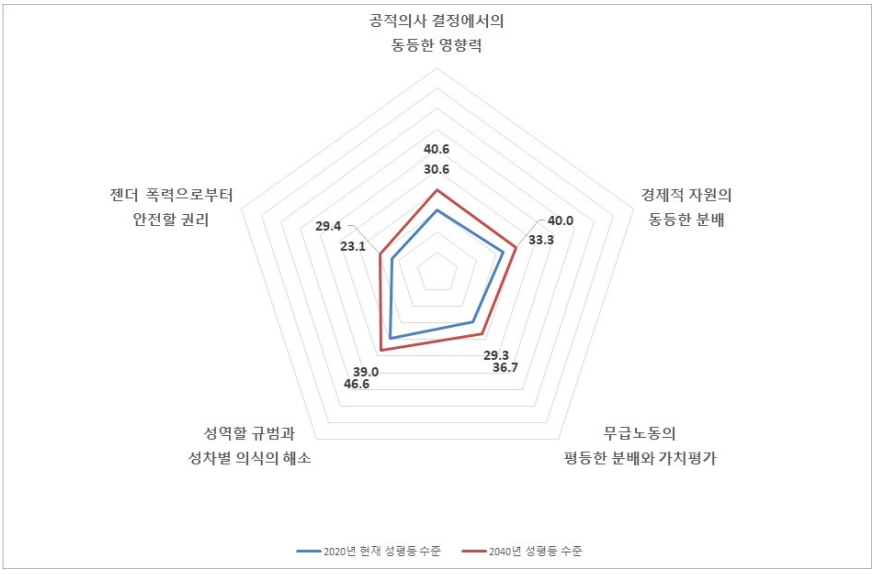
● **거시환경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의 논거**

영역	요소	긍정적 전망	부정적 전망
사회	저출산	◆ 여성의 전통적 역할 해소 및 가족 관계의 평등성 증가	◆ 여성 혐오와 젠더 폭력 증가
	고령화	◆ 없음	◆ 여성의 돌봄 부담 증가, ◆ 성별에 따라 다른 노인 삶의 질 저하
	가족의 변화	◆ 여성의 다양한 독립적 삶의 기회 확대,	◆ 친밀한 관계에서의 젠더 폭력 위험
기술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 감소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	◆ 여성 가사노동 기술 활용의 계층화 ◆ 여성의 돌봄 부담 증가 ◆ 남성 중심 디지털 기술의 활용과 젠더 폭력 증가
	생명공학·의료기술의 발전	◆ 성역할 고정관념, 규범의 쇠퇴	◆ 생명공학기술의 남성 중심성
경제	저성장의 장기화와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	◆ 없음	◆ 여성의 경제적 불안정성 증가, 여성 내부 계층 격차 심화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	◆ 고부가가치 산업에 여성 진출 확대	◆ 여성고용의 질적 수준 악화 ◆ 기술혁신 분야 수직적 성별 분리 심화 ◆ 여성의 이중 부담 증가
환경	기후변화와 재난	◆ 여성 환경 리더십의 부각	◆ 여성의 돌봄 부담 심화 ◆ 성평등 의제의 주변화
정치	전통적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 여성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 확대	◆ 극우 선동주의 정치의 지배
	페미니즘의 대중화	◆ 성평등 사회로의 진전을 위한 구심점으로서 페미니즘	◆ 성평등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왜곡
	사회적 소수자 정치의 활성화	◆ 위계를 정당화하는 '정상성'에 도전	◆ 소수자 정치와 페미니즘의 갈등

❑ 2040년 미래 성평등 전망

• 2040년 예상되는 성평등 수준

- 2020년 전체 평균값인 31.1점과 비교할 때 약간 증가했지만, 그 폭이 미미하여, 2020년 현재의 낮은 성평등 수준이 향후 20년간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함.
- 전체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50점 미만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예상함. 2020년 현재 대비 가장 빠른 속도로 진전할 영역은 공적 의사결정에서의 동등한 영향력이며,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는 가장 변화가 느린 영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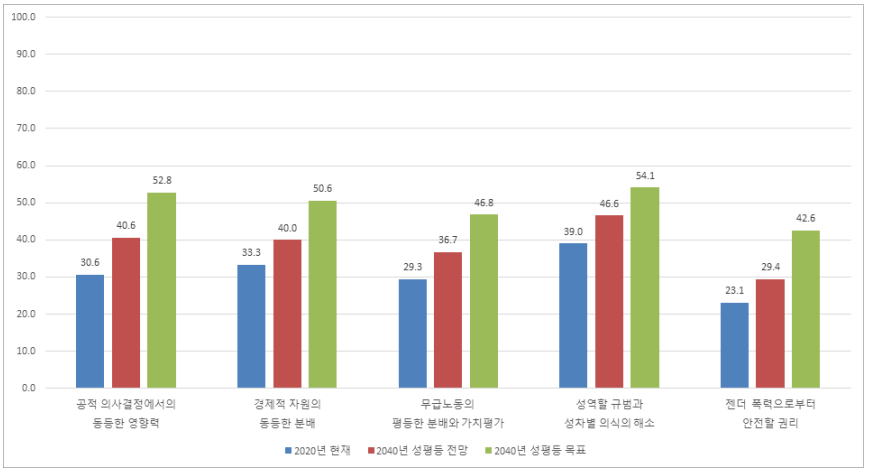
• 2040년 예상되는 성평등 수준에 대한 논거

- 공적 의사결정에서의 동등한 영향력: 디지털 기술 기반 정치 활성화, 페미니즘 대중화, 사회적 소수자 정치 활성화는 공적 의사결정에 대한 여성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임. 한편으로 저성장의 장기화, 기후변화와 재난 등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위기가 지속하면서 당면한 긴박한 위기 자체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성평등 의제는 주변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저출산과 가족의 변화는 성별분업에 기반한 이성애 중심 핵가족 기능을 약화함으로써 여성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이에 따라 여성노동력 수요와 공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그러나 기술 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과학기술분야 일자리에서 여성 주변화는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를 취약하게 할 것으로 전망함.
- 무급노동의 동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소자녀화 및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가족의 부상, 로봇 기술의 발전은 여성이 집중적으로 수행하던 가사와 자녀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그러나 노인 인구의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일상화로 여성의 돌봄 부담이 가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페미니즘의 대중화, 인간 증강기술의 발전은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을 빠르게 해체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의 젠더 편향으로 성차별주의를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
-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젠더 폭력이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 산업의 재료가 되는 한 디지털 공간에서의 젠더 폭력 위험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40년 달성가능한 성평등 목표

- **정치, 경제, 규범적 수준에서의 평등은 어느 정도 달성하지만, 여성의 역할로 전가된 무급노동의 분배나 젠더 폭력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전**
  -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54.1점, 공적 의사결정에서의 동등한 영향력은 52.8점,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50.6점으로 50점 이상의 “약간 높음” 수준,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46.8점,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42.6점으로 50점이 채 못되어 여전히 “약간 낮음” 수준임.



5 성평등 미래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 성평등을 위한 단기적 정책과제와 장기적 정책 방향

	단기적 정책과제	장기적 정책 방향
공적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영향력	◆ 다양한 영역의 의사결정직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도입 ◆ 여성의 실질적 대표성 보장	◆ 포용 민주주의(inclusive democracy)의 제도화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강화 ◆ 일·생활 균형의 탈성별화, 탈계층화 ◆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성별 격차 해소	◆ 전통적 고용관계 기반 소득보장제도 재설계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 필수노동으로서 돌봄의 재평가 ◆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공적 돌봄 체계 정착	◆ 돌봄경제(care economy)에 대한 투자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 보편적 성평등 교육 ◆ 가족 구성권 보장 ◆ 차별금지법 제정	◆ 과학기술의 젠더 편향 해소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 젠더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 디지털 플랫폼 규제 강화 ◆ 인간대체물의 인격권과 로봇 규제 원칙 확립 ◆ 재생산 기술 이용에 대한 윤리적·법적 근거 마련	◆ 젠더 폭력에 대한 포괄적 접근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흐름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성평등은 인권과 민주주의, 사회정의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이슈로서 그 자체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지만, 인간개발, 경제성장, 인구 재생산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UNDP(유엔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인간개발보고서는 인류 절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성 불평등을 인간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로 보면서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가 인간발전에서 중심적 어젠다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UNDP, 2019). 20세기 동안 건강, 교육, 노동시장과 정치 참여 등 기본적 역량(basic capabilities)에서 성 불평등이 크게 감소했으나, 권력관계를 변화시키고 인간의 주체성(agency)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역량(enhanced capabilities) 측면에서는 유리천장으로 인해 성평등의 속도가 점차로 느려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나아가 성평등을 위한 국가적 노력은 경제를 더 생산적으로 만들며,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더 평화롭고 탄력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다.

맥킨지 보고서(Mckinsey Global Institute, 2015)는 성평등이 미래의 경제성장에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양적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성 격차(gender gap)가 감소할 때 발생할 경제적 효과를 통상유지(BAU, Business-as-Usual), 최대역량(FP, Full-Potential), 역내최선(BIR, Best-in-Region) 등 세 가지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예측했다. 여성이 남성과 유사한 수준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FP 시나리오의 경우 BAU 시나리오에 비해 총 28조 달러(26%)의 추가 GDP 증가 효과가 2025년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BIR Scenario시나리오는 2025년 전체적으로 총 4.5조 달러(12%), 한국은 1,600억 달러(9%)의 GDP 증가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측하였다(Mckinsey Global Institute, 2018).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는 성평등을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전제로 보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성 격차 감소가 GDP 성장률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분석했다

(OECD, 2017). 이 보고서는 한국에서 현재 수준의 노동시장 성 격차를 유지할 경우 2013~2025년 사이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은 2.82%이지만, 노동시장 성 격차가 25% 감소하면 연평균 3.01%, 50% 감소하면 3.3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멕시코, 터키와 함께 노동시장 성 격차 감소로 인한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로 분석하였다.

다른 한편 국가 비교 연구에 따르면, 성평등은 선진 복지국가에서 출산율 반등 효과를 가져온 요인이다. 출산율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한 맥도날드의 연구(McDonald, 2006)는 여성의 일차적 역할을 양육자/전업주부로 제한하지 않고, 평생 노동시장 참여가 가능한 방식으로 국가 정책이 설계되고, 가족 관계가 성평등해지면 출산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실증했다. 에스핑 앤더슨과 빌라리(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역시 성평등이 사회 전반에 보편적으로 확산되면, 출산율이 반등하는 효과가 있음을 경험적 자료를 활용하여 보여주었다. 출산율도, 부부관계의 안정성도 새로운 여성의 역할과 선호에 사회제도와 남성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저출산 현상은 이러한 방식의 대처에 실패한 결과라고 보았다.

한국은 과거에 비해 명시적 성차별은 감소했으나, 위계적 젠더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남아선호 경향이 쇠퇴하고, 교육 수준에서의 성별 격차도 대부분 해소되었으며, 남성 중심 전문 직종으로 여성 진출이 늘어나는 등 명시적 수준에서 성차별은 점차로 감소해 왔으나 UNDP의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사회 전반의 성별화된, 다시 말해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위계적 권력관계는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경제, 정치, 교육, 건강 등 여성과 남성의 권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을 중심으로 측정한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는 오랫동안 세계 하위권(2020년 108위)에 머물러 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터키와 일본, 다음으로 하위권에 속한다. 이는 주로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와 돌봄, 이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성별 직종분리, 높은 성별 임금격차, 국회, 행정부 등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 등 자원과 영향력을 불평등하게 분배한 결과이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여성혐오와 차별에 저항하는 청년 여성들의 분노가 폭발적으로 분출하고, 2018년 미투 운동을 거치면서 구조화된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응을 요구하는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였다. 시민의 의사를 대표하지 못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촛불을 든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지만, 여전히 제도 정치와 정책에서 여성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는 제한적이다. 최근 미투 운동, 불법 촬영물 편파수사에 항의하는 이른바 '혜화시위', 낙태죄 폐지 운동, 그리고 n번방 성 착취 사건 등을 거치면서 시민사회 속 여성들의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분출한 것은 제도화된 정치, 정책 과정에서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현실을 보여준다.

성평등한 사회로의 변화 요구에 대한 근본적 대응은 그 자체 인권과 정의, 민주주의 가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느리게 변화하고 있는 성차별적 제도, 문화, 규범, 성차별주의 의식이 우리 사회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기회비용 부담과 가부장적 가족 제도와 문화의 압력으로 결혼과 출산을 회피하는 청년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지적한다(김은지 외, 2020). 19세~34세 미혼 청년 여성 중 37.6%만 결혼 의향이 있으며, 30%는 결혼 의향이 없다(남성 중에는 각각 54.6%, 15.9%임). 결혼 의향이 없는 청년 여성 중 25.5%가 가부장적 가족 제도를 그 이유로 꼽았으며, 남성 중에는 26.4%가 가족에 대한 생계 부양 부담을 이유로 선택했다(마경희 외, 2020).

또한 여성혐오, 위계적 관계에 기반한 성희롱·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청년층 내에서 젠더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으나, 청년층 내에서 인식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지고 이는 '젠더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난다(마경희 외, 2020). 청년 여성은 페미니즘 운동과 실천을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 문제에 도전하고 있으나, 청년 여성들의 이러한 활동에 대해 적지 않은 청년 남성들이 비난하거나 반발하면서 청년층 내부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마경희 외, 2020).

이처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생존의 문제로서 성평등이 가지는 중요성이 적지 않음에도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장기적 전망 하에서 성평등을 위한 선제적인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은 인식되지 못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30여 년간 성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법, 제도, 정책을 도입·시행한 결과 노골적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명시적 성차별은 상당히 완화되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였

고, ‘성인지 감수성’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에 등장할 정도로 성차별적 의식과 규범도 완화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 노동시장, 가족, 학교 등 사회 대부분의 영역에서 불평등은 지속하고, 성별, 세대별 인식 격차가 크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래 세대인 청년 여성은 기성세대 여성에 비해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에 상당히 민감하며, 기성세대 여성과 달리 이를 더 이상 당연시하지 않고 있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의 주인공이 가부장적 가족 제도하에서 경험한 억울한 삶에 대한 청년 여성과 기성세대 여성의 공감 수준의 차이는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청년 남성은 청년 여성은 물론이고, 기성세대 남성에 비해서도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낮고, 이미 성평등한 사회 이거나 오히려 남성에게 불평등한 사회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사회의 성 불평등 수준에 대한 청년층 내 성별 인식 격차는 변화하는 젠더 질서를 반영함과 동시에 기성세대와 다른 청년세대 젠더 관계의 변화를 예고한다.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 구분을 유지할 물질적, 이념적 기반이 와해된 사회 질서 속에서 청년세대는 새로운 젠더 관계 규범의 형성을 위한 요구와 흐름이 형성한다. 그러나 느리게 변화하고 있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제도, 규범, 관행은 청년세대 내 대안적 젠더 관계 형성을 제약하고, 이는 젠더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 불평등과 위계적 젠더 관계를 강요하고 있는 사회 전반의 질서가 보다 급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현재 나타나는 청년세대 내의 젠더 갈등은 이후 세대에서 보다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성평등이 사회정의와 인권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제라는 인식에 기반한다면 성평등 사회로의 진전을 위한 선제적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향후 거시사회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2040년 한국 사회 성평등 수준이 어떠할 것인지를 델파이 조사기법을 통해 전망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성평등 정책 과제와 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전 세대보다 젠더 인식 격차와 갈등을 크게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20~30대 청년세대가 중장년층이 되는 2040년 성평등 수준은 어떠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보다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선제적인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 결과는 20년 후 성평등의 미래에 대한 전문가의 통찰력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새로운 방식으로 전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성평등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연구 내용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한국 사회 성평등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기 위해 지난 20~30년간 한국 사회의 성평등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성 불평등의 유지와 재생산 기제에 대한 젠더 연구를 이론적 자원으로 하여 성평등을 5가지 차원 - 공적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영향력,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 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각 차원별 성평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도출하여 이용가능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지난 20~30년간 변화의 추이를 분석했다[1].

〈표 1-1〉 성평등 추이 분석

차원	정의	지표
공적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영향력	◆ 정치, 행정, 경제 등 우리 사회의 주요 공적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	◆ 국회의원, 장관, 3/4급 이상 공무원, 교장·교감 등 주요 의사결정직에서 여성 비율 등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 노동시장 참여, 소득 수준 등 경제적 자원이 성별에 따라 동등하게 분배되는 정도	◆ 성별 고용률, 성별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율, 성별 저임금 근로자 비율, 성별 임금격차 등

1) 성평등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에 기반하여 변화의 추이를 분석하는 데는 상당한 제한점이 있다. 자료의 이용가능성의 문제이다. 차원별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도출한 지표의 수위는 상당히 불균등하다. 공적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영향력이나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차원을 제외하면 지난 20~30년간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는 빈약하다. 신뢰할만한 통계 원자료 자체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평가는 가사노동시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역할의 성별 분업 실태,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의식의 해소는 성평등 의식과 성차별주의 등의 개념을 측정한 횡단면 혹은 종단면 자료 자체가 생산되지 않고 있어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표를 선정하여 분석했다.

차원	정의	지표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 무급으로 이루어지는 가사와 돌봄노동의 여성 집중과 평가 절하의 해소	◆ 부부 가사노동시간 분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성별 육아휴직 이용일수 등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 전통적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적인 관행, 여성에 대한 편견과 비하, 적대적 태도의 해소	◆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남성의 성차별주의 의식 등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보장되는 정도	◆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 디지털 성범죄 추이,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 중 여성 피해자 비율,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등

자료: 연구진 구성

둘째, 젠더 전문가가 참여하는 델파이 조사에 기반하여 2020년 현재 한국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평가하고, 20년 후인 2040년 성평등 수준을 전망했다. 2020년 성평등 수준에 대한 평가는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이자 2040년 성평등 수준을 전망하기 위한 하나의 준거점으로 활용했다. 2040년 성평등 수준에 대한 전망은 미래 연구에서 활용하는 STEEP(Social, Technological, Economic, Ecological, Political) 분류 체계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11개 거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내용을 도출하고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각 영역별 변화의 양상을 구체화한 후 이러한 변화가 미칠 영향을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파악했다.

〈표 1-2〉 2040년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영역	변화 요인	내용
사회(Social)	저출산	◆ 합계출산율의 지속적 하락과 출생아 수 감소 ◆ 평균 출산 연령의 증가
	고령화	◆ 고령, 초고령 인구의 증가 ◆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 가중
	가족의 변화	◆ 보편혼의 쇠퇴와 1인가구 증가 ◆ 새로운 친밀성의 부상과 가족 구성권 요구 증가

영역	변화 요인	내용
기술 (Technological)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 비대면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의 일상화 ◆ 초연결(Hyper-Connection) 사회로의 진입 ◆ 디지털 기술 발전의 양면성
	생명공학·의료기술의 발전	◆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증강하는 기술의 발전 ◆ 트랜스 휴머니즘 운동과 과학기술을 통한 인간 변형 반대론의 등장 ◆ 법·제도적 논쟁의 부상 ◆ 재생산 의료기술의 발전
경제 (Economic)	저성장의 장기화와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	◆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불황의 장기화 ◆ 소득분배구조의 지속적인 악화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	◆ 기술 혁신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관론과 낙관론 ◆ 전통적 고용 형태의 변화와 새로운 불안정 노동 증가 ◆ 근무 방식의 변화
환경 (Ecological)	기후변화와 재난	◆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의 증가 ◆ 에너지·식량·수자원 부족의 심화 ◆ 팬데믹 취약성 증가
정치(Political)	전통적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 디지털 분권화, 국가-중앙정부의 통제력 약화 ◆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집단의 정치 참여 확대와 영향력 증가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알고리즘 민주주의로의 전환 ◆ 정치적 공론장의 침해 우려
	페미니즘의 대중화	◆ 성차별, 불평등에 민감한 세대의 출현과 확대 ◆ 온라인 페미니즘 운동의 확장 ◆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의 다변화 및 페미니스트 주체의 다양화 ◆ 청년세대 내 젠더 이슈를 둘러싼 성별 인식 격차와 청년 여성의 페미니즘 실천의 대중화
	사회적 소수자 정치의 활성화	◆ 성 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 정치의 활성화

자료: 연구진 구성

거시환경 변화와 성평등은 상호결합하는 양상에 따라 복잡하게 전개한다. 돌발변수의 출현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그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다. 이러한 높은 불확실성과 복잡성은 미래 연구에 대한 접근 방식과도 관련 있다. 미래는 여러 환경 요인들의 결합 양상에 따라 복잡한 방식으로 전개할 수 있어 불확실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미래 연구의 목적은 환경 요인들의 결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미래의 여러 가능성들을 다면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이슈를 발굴하여 더 나은 미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려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김유빈 편, 2018, pp. 2~6). 거시환경 변화가 미래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도, 거시환경 변화의 영향을 정확히 예상만 하기보다는 주요 거시환경과 성평등과의 연관성을 구성하는 사회구조적 맥락과 조건에 대한 의미를 식별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셋째, 2040년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와 장기적 방향을 제시했다. 델파이 조사로부터 도출된 거시환경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전망에 기초하여 5개 성평등 차원별로 단기적 정책 과제와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2 연구 방법

가. 선행연구 검토

우선 성평등 관련 연구 동향과 주요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의 KCI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했다. '성평등'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관련 논문을 추출한 후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연관 키워드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과거부터 지속해 온 성평등 이슈 및 최근 부상한 성평등 이슈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다음으로 성평등 개념과 측정, 미래 거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미래 연구 방법론, 부상하는 정책 이슈 등 이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연구의 기획과 방법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 과제 제안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했다.

나. 국내외 통계자료 분석

성평등의 5개 차원별로 변화의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했다. 통계청 KOSIS를 비

롯하여 교육부,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에서 연간 생산하는 각종 통계, 조사통계, 정책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된 가공 통계 등 국내 통계자료를 시계열적으로 정리한 후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난 20년간 성평등 수준의 변화를 분석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국제적 수준에서 파악하기 위해 OECD 국가 비교 통계자료도 활용했다.

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

1) 조사 방법 및 절차

2020년 성평등 수준 진단 및 2040년 전망을 도출하기 위한 주요 연구 방법으로 델파이 조사를 활용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선행연구 자료가 부족하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가장 중요한 자료일 때 주로 사용하는 연구 방법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견해를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기반하여 반복 수렴하여 내부 간 합의와 공동의 견해를 이끌어낸다. 델파이 조사방법은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전문가들의 집단적 지성과 합의에 기반하여 도출할 수 있어 미래연구에 활용하기 적합한 방법론이다(김유빈 편, 2018). 본 연구에서도 전문가의 통찰과 합의에 기반하여 현재와 미래 한국 사회 성평등 수준을 전망하고 관련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델파이 조사방법을 적용하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서면으로 실시했으며, 조사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이다. 조사 절차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주목해서 살펴볼 성평등 영역과 거시환경 요인을 선정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연구진 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주요 성평등 영역으로 공적 의사결정에서의 동등한 영향력,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성차별적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등 5개 영역을 선정하였다. 거시환경 요인은 STEEP(Social, Technological, Economic, Ecological, Political) 분류 체계에 근거하여 총 11개의 요인을 선정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총 2단계에 걸쳐 진행하였다. 2020년 현재 한국 사회 성평등 수준과 거시환경 변화의 영향은 1단계 델파이 조사를 통해, 2040년 미래 한국 사회 성평등 수준(BAU)과 정책 대응을 통해 실현 가능한 미래 성평등 수준의 목표치 및 새로운 젠더 이슈는 2단계 델파이 조사를 통해 측정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각 단계별 델파이 조사

는 2회에 걸쳐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1단계 조사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통해 2단계 조사의 횟수는 조절 가능하도록 하였다. 1단계 조사는 2차례에 걸쳐 진행하였고, 현재 성평등 수준과 거시환경 변화의 영향력에 관한 전문가들 사이의 의견이 계량적, 정성적 측면에서 모두 수렴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2단계 조사에서는 미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전망과 정책적 대응 방향을 조사했다. 1차 조사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집하였다고 판단하여 1차 조사로 마무리한 후, 내부 연구진 및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하는 집담회를 개최하여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하고 최종 결론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2) 조사 참여자의 선정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 선정은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누가 전문가인지를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문제 인식과 분석의 방향이 정해진다(Judd, 1972). 전문가 선정의 원칙으로 성평등 및 성인지 연구 분야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과 전문가적 식견의 포괄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주요 성평등 분야 및 거시 환경 변화의 영역을 고려하여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였고, 현재와 미래의 성평등 수준 변화에 대한 선도적인 전망을 제출해야 하는 본 연구 주제의 특성상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성 불평등이 유지, 재생산, 강화되는 구조적 기제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젠더 전문가"를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선정했다.

우선 전문가를 학계, 정책연구자, 여성단체 활동가로 구분하고 각 영역 내에서 조사 참여 후보자의 풀을 만들었다. 학계 전문가는 구글 스콜라(google scholar)에서 "여성", "성평등", "젠더"를 키워드로 최근 5년 이내의 연구물을 검색한 후 여성 노동, 돌봄, 가족, 섹슈얼리티, 여성 폭력 등 주요 젠더 이슈 및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구물을 선별한 후 제목과 논문초록을 검토했다. 단순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거나 연구물이 제한적인 저자는 제외하고, 성별을 축으로 한 사회불평등의 유지와 재생산 기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2]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 저자를 선별하여 64명의 목록을 만들었다. 정책연구자는 한국노동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성평등 영역과 관련된 국책연구기관 홈페

2) 델파이 조사의 내용이 "여성"이 아닌 "성평등의 미래"로서 다양한 분야의 젠더 이슈를 다루는 만큼 "젠더"가 아닌 특정 분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전문가는 조사 참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영역을 가로지르는 "젠더"에 대한 포괄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선별했다.

이지에서 “여성”, “성평등”, “젠더”를 키워드로 하여 3년 이내의 연구물을 검색하여 13명의 전문가를 추출했다. 여성단체 활동가는 여성가족부 등록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현황(2019년도),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현황(2019년도) 자료에 등록된 단체 중 성평등 이슈에 대한 포괄적 관심을 가지고 성 불평등한 사회 변화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15개를 선정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추출된 전문가 목록은 총 92명이었다(학술논문 저자 64명, 정책연구기관 연구자 13명, 여성단체 15개).

다음으로 92명의 전문가 풀 내에서 여성 노동, 돌봄, 가족, 섹슈얼리티, 폭력, 과학기술 등 세부적인 젠더 이슈를 고려하여 학계 25명, 정책연구자 2명, NGO 4명 등 총 31명의 전문가를 유의표집했다. 31명의 전문가에게 연구 개요와 조사의 목적 및 진행 방법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메일로 송부하여 조사 참여를 요청했고, 이 중 23명이 조사 참여를 수락했다. 이상의 조사 참여자 선정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델파이 조사 참여자 선정 과정

단계	선정 방법	학계	정책연구	여성단체 활동가	합계
1단계	◆ 구글 스콜라(google scholar), 6개 국책연구기관 홈페이지, 여성가족부 및 서울시 등록 시민단체 목록을 표집틀로 하여 “젠더 전문성”을 갖춘 학자, 정책연구자, 여성단체 활동가 목록을 작성	64명	13명	15명	92명
2단계	◆ 젠더 이슈 세부 분야를 고려하여 유의표집	25명	2명	4명	31명
3단계(최종)	◆ 조사 참여 수락 전문가	19명	2명	2명	23명

최종적으로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23명의 젠더 관련 연구 경력은 평균 16년이며, 최종학위 전공 및 젠더 분야 세부 전공은 다음과 같다. 최종학위는 사회학과 여성학이 각각 10명, 7명으로 가장 많으며, 사회복지학 2명, 사회심리학, 노동경제학, 과학기술학, 정치학이 각각 1명이다. 사회학과 여성학 전공자 비중이 높으나, 젠더 관점의 사회불평등 연구가 주로 이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한 결과이다. 연구 참여자가 직접 기입한 젠더 분야 내에서 세부 전공은 돌봄/가족과 성평등 정책이 각각 8명과 7명, 여성 노동 5명, 과학기술과 젠더 5명, 페미니즘 이론/운동 4명, 섹슈얼리티/폭력 3명, 미디어/문화 2명, 환경과 젠더 1명[3]이다.

〈표 1-4〉 델파이 조사 참여자의 특성

최종학위 전공	젠더 분야 세부 전공
◆ 사회학(10명), 여성학(7명), 사회복지학(2명), 사회심리학(1명), 노동경제학(1명), 과학기술학(1명), 정치학(1명)	◆ 돌봄/가족(8명), 성평등 정책(7명), 여성노동(5명), 과학기술과 젠더(5명), 페미니즘 이론/운동(4명), 섹슈얼리티/폭력(3명), 미디어/문화(2명), 환경과 젠더(1명)

3) 조사 내용

조사 내용은 단계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1단계의 조사 내용은 2020년 현재 성평등 수준의 평가와 거시 사회경제적 변화가 미래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으로 구성한다. 2020년 현재 성평등 수준의 평가는 지난 20~30년간 성평등 영역별 주요 지표 변화의 추이를 제시하고 이를 참고하여 2020년 현재 성평등 수준을 점수로 평가[4]한 후 평가의 논거를 개방형으로 응답하도록 했다. 참여자에 따른 주관적 기준의 개입 여지를 줄이기 위해 이용가능한 지표의 경우 OECD 국가의 최근 현황에 대한 국가별 비교 통계 자료도 참고로 제시했다.

거시 사회경제적 변화가 미래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은 앞서 제시한 11개 환경변화 내용별로 성평등에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의 정도[5]를 평가하고, 그 이유를 개방형으로 응답하도록 했다. 전문가들 사이의 이견을 확인하며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2회 실시되었다.

2단계 조사 내용은 2040년 미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전망과 정책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등 세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1단계 조사에서 전문가들 사이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2회 조사를 실시했으나, 1차 조사와 2차 조사 사이에서 의견의 큰 변화가 없어서 2단계 조사는 1회의 조사로 마무리했다.

구체적인 질문지의 내용은 4장에서 서술한다.

3) 전문가 한 명의 세부 전공이 두 가지 이상일 수 있어서 분야별 합계는 조사 참여자의 총수 23명 이상이다.
4) 값의 범위는 0점(완전 불평등)부터 100점(완전 평등)이다. 점수 기준의 일관성을 위해 0점=완전 불평등, 100점=완전 성평등을 기준으로 1~10점 미만 매우 낮음, 10~30점 미만 낮음, 30~50점 미만 약간 낮음, 50~70점 미만 약간 높음, 70~90점 미만 높음, 90~100점 미만 매우 높음의 성평등 척도를 제시하였다.
5) 값의 범위는 -5점(성 불평등 심화)부터 5점(성평등 증가)이다.

라. 전문가 집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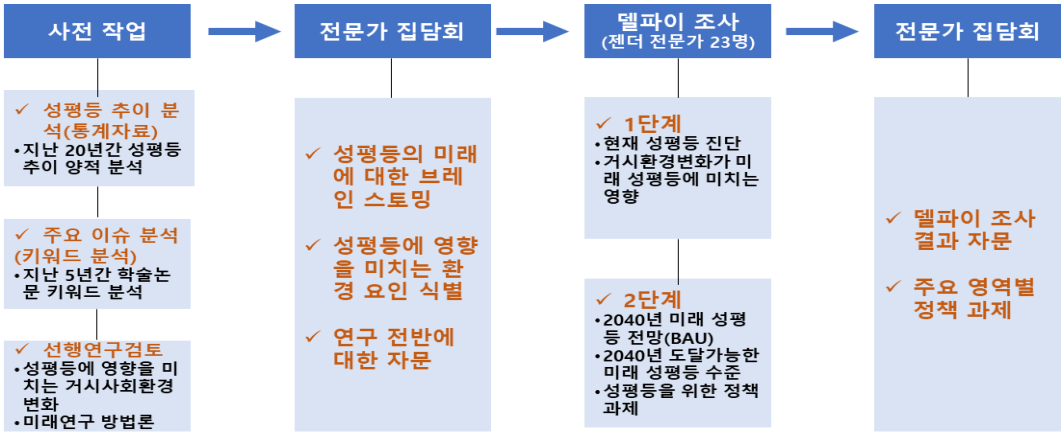
거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가 미래 사회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력, 성평등한 미래를 위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얻기 위해 3회의 전문가 집담회를 실시했다. 1차 집담회는 연구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연구 초기에 실시했으며, 나머지 2차례의 집담회는 델파이 조사 결과를 공유하면서 구체적 정책적 대응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했다. 현재와 미래의 한국 사회 성평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그 변화의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주요 분야로 폭력 분야, 과학기술 분야, 가족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구진이 참여한 토론을 통해 조사 내용을 심화하고 결론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작성한 보고서 전반의 구조와 논리를 점검하여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해 보고서 초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한 후 내용을 보완했다.

제3절 연구의 흐름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이 연구의 진행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격적인 연구의 진행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이용가능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20년간 성평등 추이를 분석했다. 또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간 성평등 관련 학술 연구 관심사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의 KCI 데이터베이스에서 성평등을 키워드로 한 학술논문의 주제를 분석했다. 미래 거시사회환경변화, 미래 연구 방법론 등 이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다음으로 사전 작업한 내용을 전문가들과 공유하면서 성평등의 미래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미래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식별, 연구 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전문가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연구진 내부의 논의를 거쳐 델파이 조사의 목적, 방법, 질문지 등 델파이 조사 설계를 했고, 최종적으로 23명의 젠더 전문가가 참여하는 델파이 조사를 진행했다.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후 다시 전문가 집담회를 개최하여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을 위한 자문과 함께 주요 영역별 정책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

제2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성평등 관련 학술 논문 키워드 분석

제2절 거시환경변화와 성평등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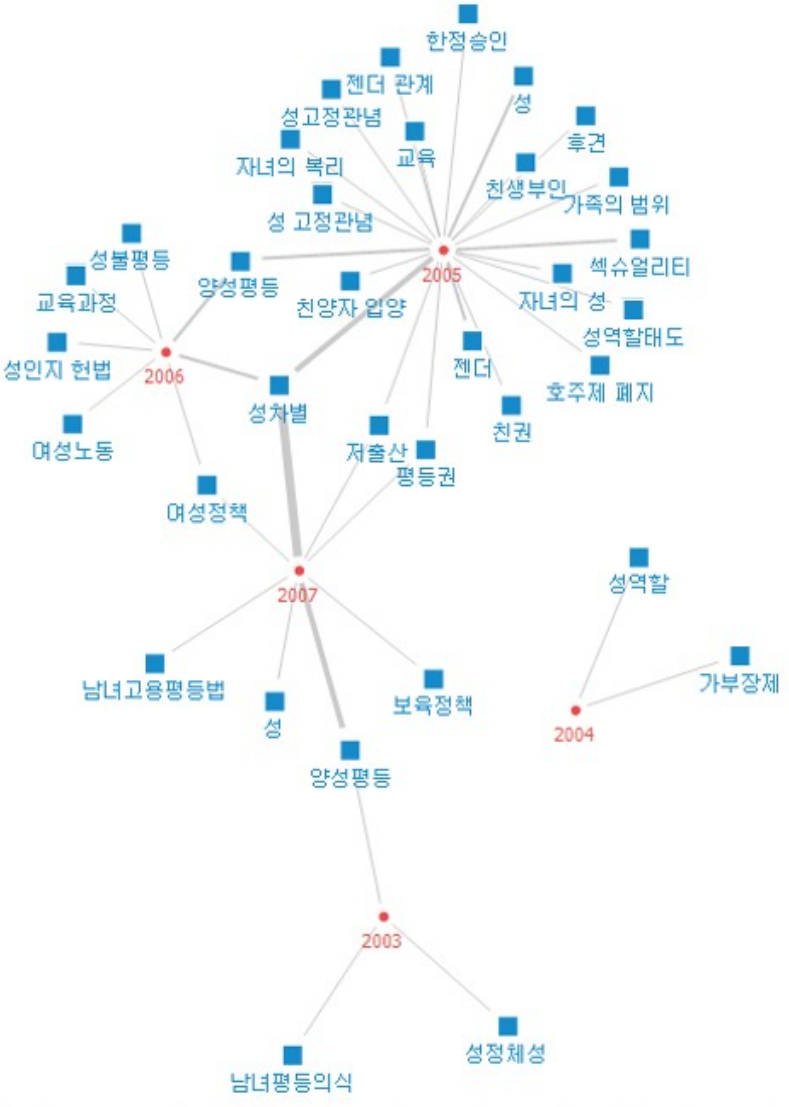
제1절 성평등 관련 학술 논문 키워드 분석

성평등 관련 문헌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 KCI 데이터베이스에서 '성평등'과 관련한 문헌을 검색하여 1차적으로 총 1,861건의 문헌을 수집하였고, 연구진의 검토를 통해 최종 1,262개의 문헌을 분석대상으로 결정하였다. 특히, 성평등 관련 연구 주제의 변화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3개의 시기로 구분하였는데, 1시기는 2005년에서 2007년까지로 여성부 신설, 성평등 관련 각종 법/제도 확대, 모성보호 3법, 호주제 폐지, 성매매 방지법, 성 주류화 제도 등의 주요 사건과 관련하여 성평등과 직접적 연관성이 높은 이슈를 연구하던 시기였다. 2시기는 2008년에서 2014년으로 개똥녀, 된장녀, 김치녀 등 여성혐오 심화, 반페미니즘 남성 연대 출범, 여성부 폐지 운동, 일베 개설 등 젠더 관련 이슈가 본격적으로 사회 갈등화하는 시기였고, 마지막으로 3시기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로 여성혐오에 대한 여성들의 반격, 강남역 살해 여성 추모 시위, 미투 운동, 불법촬영물 반대 시위, 20대 남성의 반발 등 페미니즘이 대중화하고 청년 남성의 반발과 갈등이 심화하는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2-1]은 1시기의 주요 문헌의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총 180건의 문헌 분석 중 공빈도 출현 2 이상의 키워드에 대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2000년 초기에는 양성평등, 남녀평등, 성 정체성, 성역할, 가부장제 등 성평등 관련 규범적인 키워드의 출현이 많았다. 1시기 후반부에서는 여성정책, 저출산, 평등권 등의 키워드가 매년 등장하였고, '성차별' 키워드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호주제 폐지 이슈를 사회적으로 활발히 논의하면서 가족의 범위, 호주제, 친권, 후견, 한정승인 등 법과 관련된 연관 키워드의 등장도 살펴볼 수 있었다.

실제 네트워크에서 이슈를 주로 선점하고 있는 키워드를 분석하기 위해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를 분석하였다. 〈표 2-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시기의 주요 등장 키워드는 성역할, 고정관념, 성별 분석, 직업훈련, 교육과정, 여성 노동, 동일 임금

등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한 불평등 및 차별 관련 이슈이다. 1시기에 등장하는 주요 키워드를 살펴본 결과, 젠더 갈등이 본격적인 사회 문제로 등장하기 전 성차별이 점차 사회 이슈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한 시기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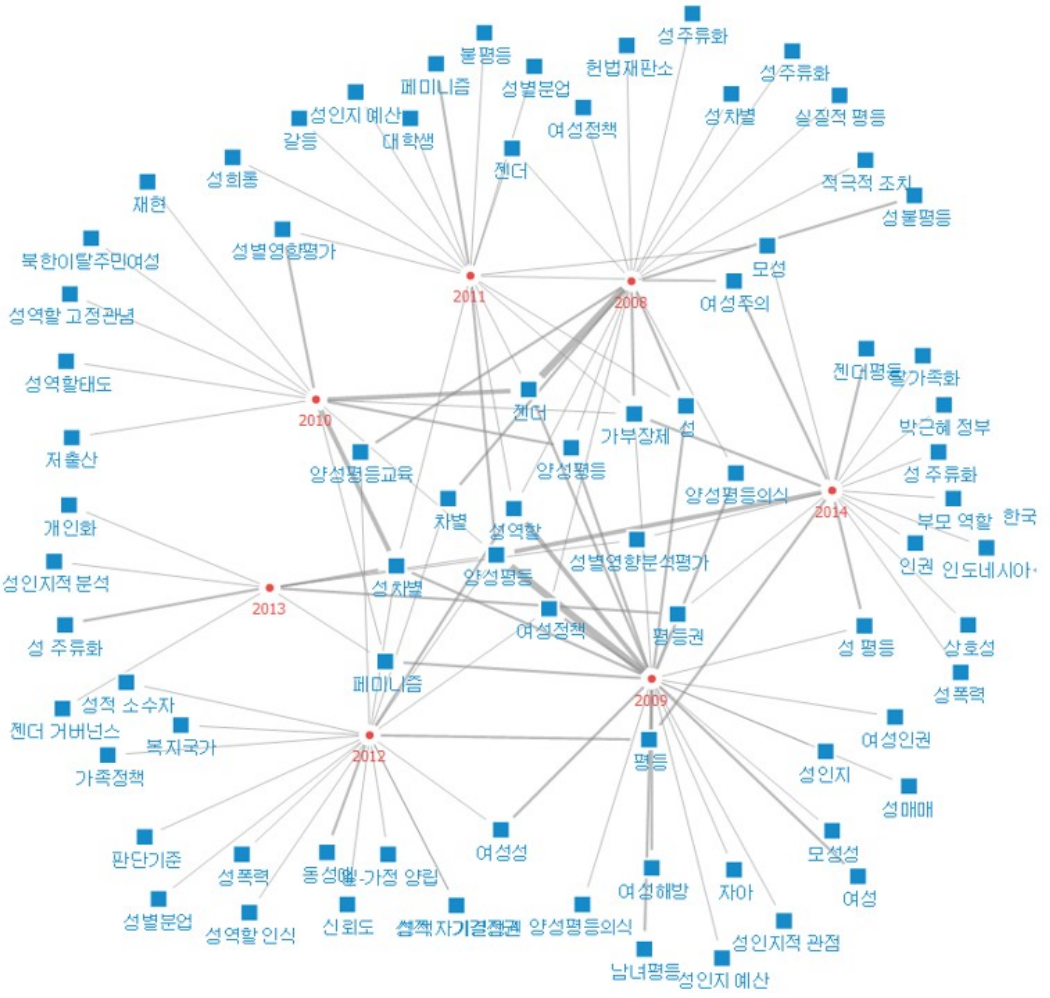


[그림 2-1] 연구재단 '성평등' 관련 KCI 문헌 1시기 키워드 네트워크(2005~2007년)

〈표 2-1〉 1시기의 연결중심성 분석

1시기 연결중심성 상위 50개 키워드	
성차별	여성 교육
양성평등	남녀평등
젠더	성문화
적극적 조치	성교육
성	직업훈련
여성정책	교육과정
가족	성역할 태도
남녀평등의식	여성 노동
성 정체성	성평등 정책
성 주류화	가부장제
여성성	젠더
섹슈얼리티	성희롱
가부장제	성폭력
평등권	양성평등의식
성차별	청소년
불평등	동일 임금
호주제	프라이버시권
성 지식	남성중심성
신상 공개	군사주의
성역할	남녀공학 대학교
호주제 폐지	저출산
성별 분업	탈상품화
정치 참여	탈가족화
성역할 고정관념	보육정책
가족주의	성별영향평가

[그림 2-2]는 2008년에서 2014년까지 2시기의 주요 문헌 데이터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총 462건의 문헌이 분석 대상이었다. 모든 시기에 거의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키워드는 젠더, 양성평등교육, 차별, 가부장제, 성역할, 여성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 페미니즘 등이었다. 전반적으로는 1시기에 나온 성역할, 성평등 관련 키워드들이 여전히 등장하고 있으며, '페미니즘'이라는 키워드가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 2시기의 특징이다.



[그림 2-2] 연구재단 '성평등' 관련 KCI 문헌 2시기 키워드 네트워크(2008~2014년)

또한, 북한이탈 주민 여성, 성 소수자, 동성애, 인권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성 인권 관련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어, 전통적인 성차별, 성평등의 이슈가 점차 다양한 사회 이슈와 연계하고 있음을 네트워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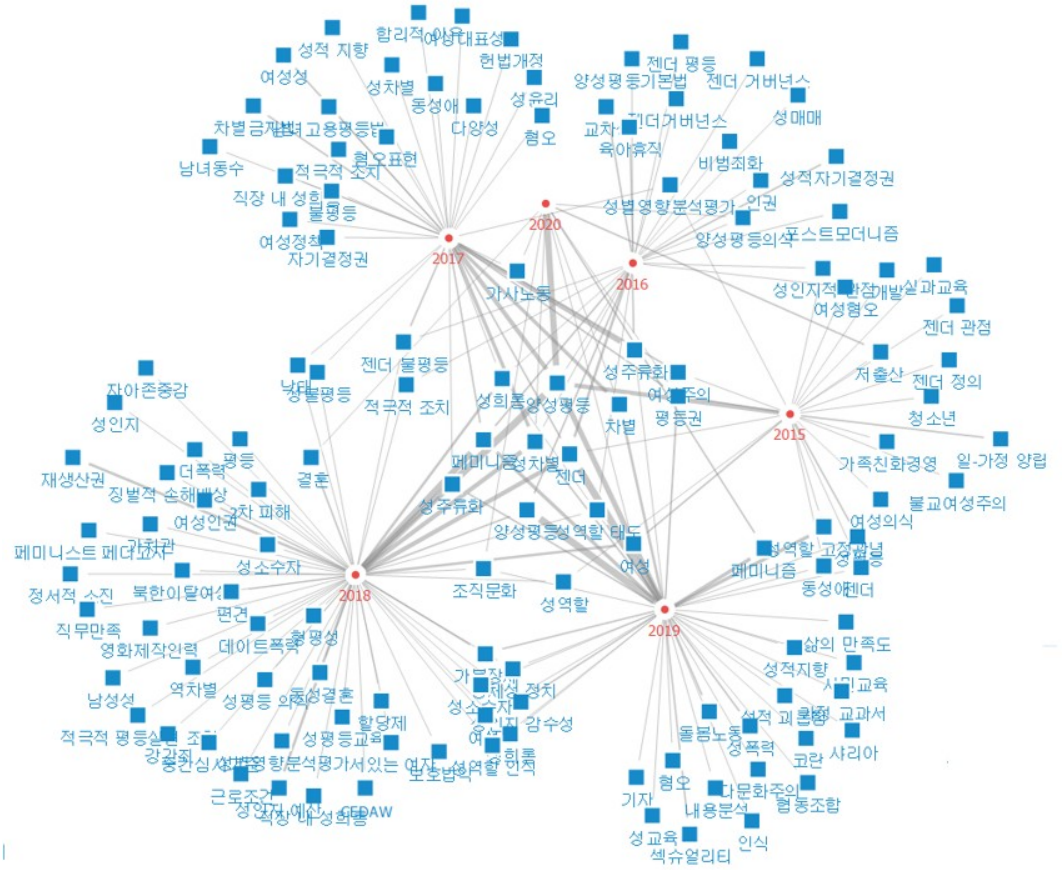
〈표 2-2〉 2시기의 연결중심성 분석

2시기 연결중심성 상위 50개 키워드	
성차별	가족
양성평등	모성
평등권	성평등의식
젠더	평등원칙
평등	청소년
성 불평등	성
성역할	군형법
고정관념	남녀평등
여성	젠더
여성정책	적극적 조치
여성성	낭만적 사랑
섹슈얼리티	헌법재판소
성적 자기결정권	가정폭력
가부장제	동성애
성평등	차이
성주류화	성별 분업
성 인지적 관점	여성 스포츠
페미니즘	에코페미니즘
성별영향평가	빈곤
여성주의	인권
타자	성 인지 예산
여성해방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질적 평등	가사노동
성역할 태도	결혼
성차	시민권

[그림 2-3] 은 한국연구재단의 KCI 데이터베이스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성평등' 관련 총 620건의 논문 키워드를 추출하여 분석한 네트워크이다. 시기별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는 가사노동, 젠더 불평등, 성희롱, 차별, 평등권, 성 주류화, 페미니즘, 조직문화, 성역할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년도에 가까워질수록 키워드의 수가 다양해져서 성평등 관련 주제가 점차로 확대해왔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키워드는 해당 시기에 사회적, 정책적으로 주목받았던 성평등 이슈를 반영하고 있다. 2015년에는 저출산, 가족친화경영, 일·가족 양립, 젠더 관점, 성인지 관점 등 정책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 확산한 여성혐오 문제가 주된 키워드였다. 2016년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 젠더 거버넌스 등 정책과 함께 성매매, 성적 자기결정권, 비범죄화, 인권, 교차성 등이 새롭게 관심사로 등장했다.

2017년에는 동성애, 성적 지향, 성 윤리, 혐오, 자기결정권, 차별금지법 등 성 소수자의 인권 이슈와 함께 헌법 개정, 여성 대표성, 남녀 동수 등 헌법 개정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보장이 부상했다. 2018년에는 성평등과 관련된 키워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미투 운동, 불법촬영물 등 여성의 몸에 행사되는 폭력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주목을 끈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성 소수자, 동성결혼 등 2017년도에 가시화한 성 소수자 권리 이슈, 할당제 등 여성의 정치 참여 이슈가 지속되는 한편 데이트 폭력, 강간죄, 젠더 폭력, 2차 피해, 역차별, 낙태 등 여성에 대한 폭력 및 몸에 대한 통제와 관련된 주제가 새롭게 주제로 부상했다. 편견, 성평등 의식, 성평등 교육,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징벌적 손해 배상 등 성차별 의식과 관행의 변화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수단들도 주목을 받았다. 2019년에는 키워드의 다양성이 다소 감소하면서 동성애, 젠더, 성적 지향, 성적 괴롭힘, 성폭력, 혐오, 섹슈얼리티, 성교육 등 이전부터 등장한 섹슈얼리티에 키워드 집중 경향이 있었다. 돌봄노동이 새롭게 키워드로 등장하기도 했다.

키워드의 이슈 장악력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표 2-3〉와 같이 연결중심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시기, 2시기를 걸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성평등, 차별, 성범죄 관련 키워드와 더불어 혐오, 성 소수자, 성 지향성, 동성애, 영화 등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키워드의 이슈 장악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림 2-3] 연구재단 '성평등' 관련 KCI 문헌 3시기 키워드 네트워크(2015~2019년)

〈표 2-3〉 3시기의 연결중심성 분석

3시기 연결중심성 상위 50개 키워드	
성역할 태도	성평등 의식
젠더	성인지
차별	차별금지법
성차별	간접차별
양성평등	고정관념
저출산	경력단절
젠더 불평등	가부장제
여성주의	대학생
성주류화	여성 인권
성폭력	직접차별
성희롱	성매매
여성혐오	헌법재판소
조직문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역할	추행
평등권	젠더 거버넌스
페미니즘	성별분업
여성친화도시	성 소수자
교차성	조절효과
섹슈얼리티	포스트페미니즘
인권	동성애
다양성	영화산업
성역할 인식	돌봄노동
성 태도	성적지향
일가정 양립	결혼
적극적 조치	강제추행

지금까지 분석한 KCI 문헌을 통한 키워드의 분석 결과, 문헌의 주요 관심사는 해당 시기의 이슈를 반영하면서 연도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시기를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이슈에는 '성평등' 및 '성차별' 관련 키워드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양성평등, 여성 인권, 성범죄(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데이트 폭력 등), 여성정책, 성 의식, 성 지식, 성교육, 성희롱, 조직문화, 가사노동, 성역할 태도, 페미니즘, 성 주류화 등이 관련 키워드이다. 이러한 이슈들은 구조화된 성 불평등의 핵심적 차원으로서 젠더 연구 분야에서 오랫동안 다루고 논의해 왔으나 실제 사회의 변화 속에 반영하지 못한 것들이며, 오랜 역사를 가지는 만큼 장기적 전망 속에서 정책 과제로 다루어야 할 영역이다.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에 따라 사회/노동 정책 관련 키워드가 시기를 거치 면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예를 들어, 성별 분업, 성역할, 직업훈력, 동일임금, 가사노동, 일·가정 양립, 돌봄, 경력단절, 조직문화 등의 키워드를 들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성평등 이슈가 초기 평등권, 차별 문제에서 벗어나 점차 분야를 막론한 확장된 사회 이슈와 연계하는 추세도 관찰할 수 있었다. 여성 스포츠, 에코페미니즘, 포스트 페미니즘, 젠더 거버넌스, 영화산업 등의 키워드는 성평등 관련 키워드가 전통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점차 사회 이슈화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회 갈등의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학술 문헌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시사점은 성 소수자의 인권, 혐오, 젠더 폭력이 지난 3~4년 전부터 의미 있게 가시화한 점이다. 이 역시 젠더 연구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는 것이라 그 자체 새로운 이슈로 볼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대응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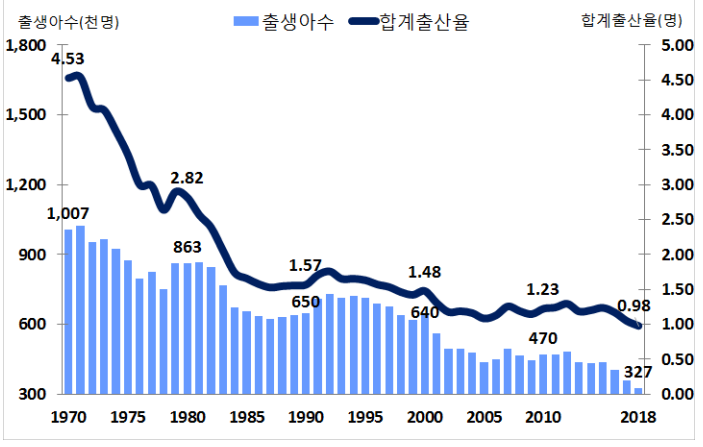
제2절 거시환경변화와 성평등의 미래

1 인구구조의 변화와 젠더 관계의 재편

가. 저출산 시대, 변화하는 가족

1) 저출산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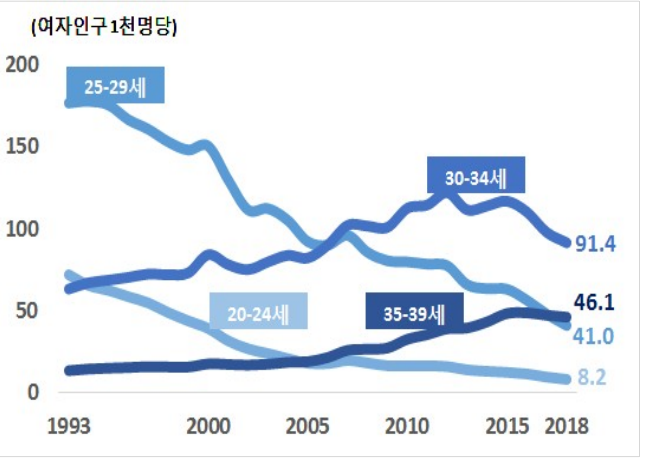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총인구는 2017년 현재 5,136만명에서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7년 3,929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2019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감소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2.06명으로 대체출산율 미만으로 떨어진 이래 2000년 1.48명에서 2019년 0.92명으로 급격히 감소해 왔다. 출생아 수는 2000년 64만명에서 2019년 32만 7천명으로 지난 20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었다(통계청 보도자료, 2019.3.28.).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2019. 3. 28.).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3873, (최종 검색일: 2020. 12. 17.).

[그림 2-4]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1970~2018년)

1990년대 초반 이후 연령별 출산율은 20대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30대의 출산율이 증가해 왔으나, 2010년대 중반 이후 20대 출산율의 감소 폭은 커지고 30대 출산율은 감소하기 시작한다(통계청 보도자료, 2019.3.28.). 가까운 시일 내에 출산율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2019. 3. 28.).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3873 , (최종 검색일: 2020. 12. 17.).

[그림 2-5] 연령별 출산율(1993~2018년)

통계청의 추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17년 1.05명에서 2021년 0.86명까지 하락한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서 2025년에 1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전통적 성역할에서 벗어난 여성들의 급격히 변화하는 생애 기획으로서 저출산 현상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전망에 의문이 생긴다.

2) 여성의 변화하는 생애기획의 산물로서 저출산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학력 수준이 향상하고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하면서 전통적 가족 가치관과 관련한 요인은 약화했지만 자녀 양육 및 교육에서의 경제적, 정서적 부담과 가정 내 전통적인 성역할 및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일과 가족생활 양립의 어려움 등을 한국의 출산율 하락의 배경으로 지적해 왔다(손승영, 2006; 배은경, 2010; 이순미, 2016). 특히 여전히 지속되는 여성의 돌봄 부담 및 가족 내 성 불평등, 자녀의 교육

환경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과도한 경쟁과 과잉 과시의 사회적 압력 등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한다(손승영, 2005; 황정미, 2005; 신윤정, 2020).

이같이 저출산의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동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원인은 가족 내 전통적 성별 분업과 성차별적 노동시장이다. 남성을 일차적 생계부양자로, 여성을 가사와 양육의 일차적 책임자로 전제하는 가족 내 성별 분업, 임신·출산·육아 책임으로 인한 노동시장 불이익은 여성이 결혼, 임신, 출산을 회피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 불안정이 심화하면서 남성이 홑벌이로 평생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은 해체되었지만 부부가 함께 일하며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 책임을 공유할 가족관과 노동시장은 훨씬 더디게 변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 수준 향상 및 노동시장 내 여성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사와 양육 전담자가 되기보다 자신의 직업적 성취를 지향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참여 경향을 보여주는 M자 곡선은 2000년대 들어 완만해지는데, 이는 출산과 양육을 위해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여성의 수가 점차 감소함을 의미한다. 2000년대에 한국의 20~30대 여성들은 부인, 아내 등의 가족 돌봄의 전담자로서가 아니라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삶을 꾸려가고자 변화하는 것이다(배은경,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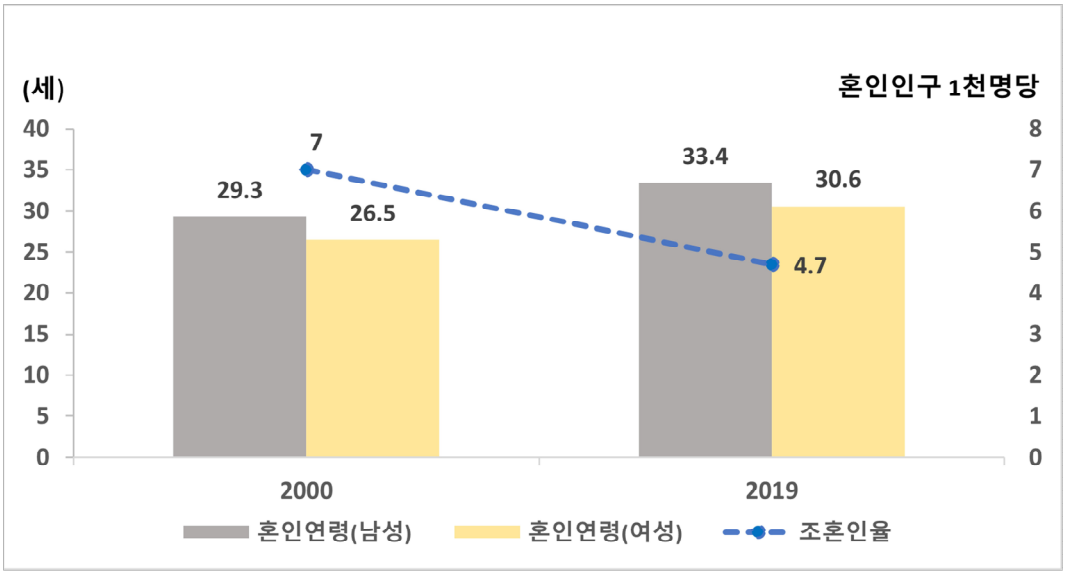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평생 취업 형태로 변화하는 사실은 여성들의 삶 속에서 결혼, 출산, 양육 외에 더 중요한 것으로서 직업 전망이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아직 성 불평등한 노동시장에서 결혼과 임신을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경로로 이해하면서 청년 여성은 결혼이나 출산을 늦추거나 아예 계획하지 않는 경향성이 함께 나타난다(마경희 외, 2020). 이에 따라 저출산 경향성은 여성들의 근대적 성별 규범과 가족의 가부장성에 대한 거부로 읽히기도 한다(황정미, 2005; 배은경, 2010; 김혜경, 2013; 이순미, 2016).

3) 보편혼의 쇠퇴와 가족의 다양화

저출산 경향성은 또한 이성애 결혼이라는 보편혼의 쇠퇴 경향성이자 가족 형태다양화의 산물이기도 하다. 우선 한국의 조혼인율(1,000명당 혼인인구)은 2000년 7.0명에서 2019년 4.7명으로 감소했으며 혼인 연령은 2000년 남성 29.3세, 여성 26.5세에서

2019년 각각 33.4세, 30.6세로 증가했다. 또한 25~39세 남녀의 미혼율은 증가 추세에 있다[6]. 이같은 추세는 향후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사회조사에서는 20대의 단 35%만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큰 격차가 있었는데, 결혼해야 한다고 답한 남성은 40%인데 반해 여성은 22%로 남성의 절반 정도였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역시 통계청 지난 2018년 69.6%에서 68.0%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통계청 보도자료, 2019. 3. 28.).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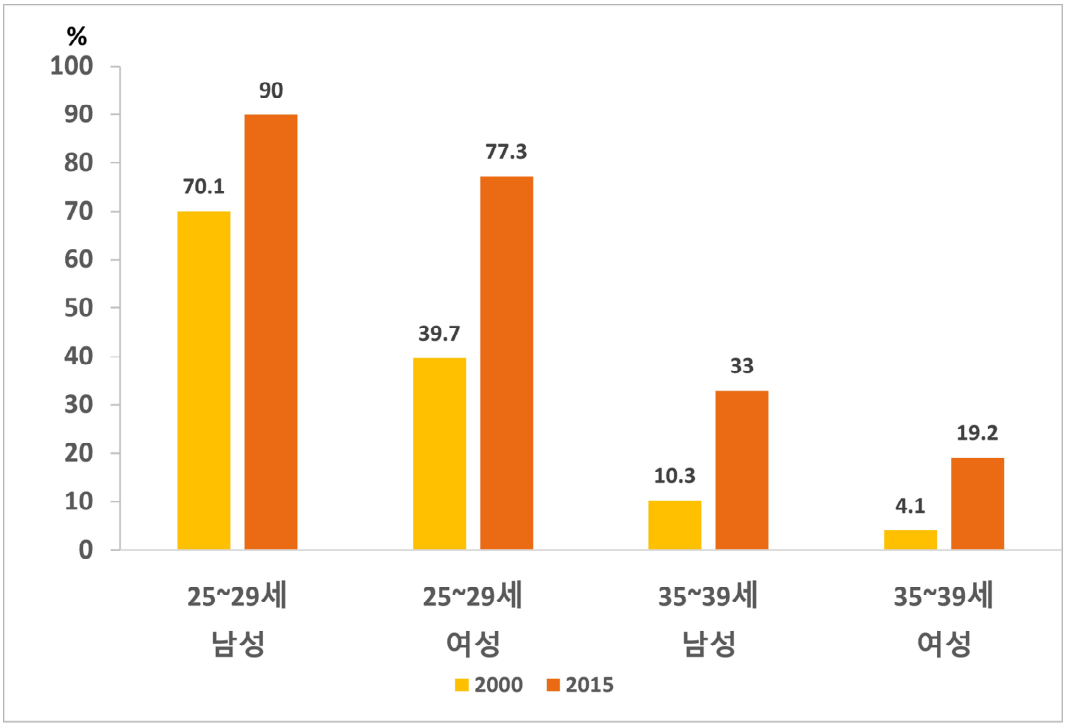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ByNumber/PopulationByNumberMain. do?mb=Y&menuId=M_1_3&themaId=C01(최종 검색일: 2020.12.3.).

[그림 2-6] 조혼인율 및 혼인 연령(2000년, 2019년)

6) 25~29세 남성 미혼율 2000년 70.1% → 2015년 90%, 같은 기간 여성은 39.7% → 77.3%로 증가, 35~39세의 경우 2000년 남성 10.3% → 2015년 33.0%, 여성 4.1% → 19.2%.

(단위: %)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9. 3. 28.).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3873, (최종 검색일: 2020. 12 .17.).

[그림 2-7] 남녀 미혼율(2000년, 2015년)

이 같은 추세들이 보여주듯 가족 형태는 세대 수와 세대 규모의 측면에서 점차 줄어들었다.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근대적 핵가족 중심의 생애 문법으로부터 벗어나 1인 가구를 비롯하여 무자녀 가족, 이혼과 재혼의 복합가족, 비혼 동거, 혼외 출산 등 '가족 유연성'이 증가하는 것이다(이재경, 2015). 이 같은 가족 유연성의 증가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한 시장과 가족의 통합, 평등과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대,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삼중의 혁명'을 그 배경으로 본다(Skolnick and Skolnick, 2007, pp. 7-9).

미래 세대가 결혼 및 가족 구성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이유에는 성별 차이가 존재한다. 남성의 경우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이라면 여성은 자신들이 가진 개방적이고 평등지향적인 가족 의식에 부합하는 가족을 구성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가

족주의가 바뀔 가능성을 낮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과 가족을 멀리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이다(이순미, 2016). 한국 사회의 혼인과 출산의 깊은 연결고리, 성 불평등한 이성애 중심 결혼제도와 이를 전제하는 정책 등이 잔존하는 한 저출산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4) 미래 가족 시나리오

인구구조의 변화, 가족 형태의 다양화라는 미래 가족의 변화는 젠더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장혜경 외(2012; 2013)는 델파이 조사에 기반하여 돌봄, 불평등, 가족 가치 등 3개의 시나리오 축을 설정하고 미래 가족의 5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한 바 있다. '개인 가치와 가족생활 경합', '가족생활의 양극화',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 '평등사회-불평등 가족 공존', '가족 부담 극대화' 시나리오로,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문가 조사와 유사하게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 시나리오를 가장 선호하고,' 가족 부담 극대화'가 가장 거부하는 시나리오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선호하는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을 위해 가족 불평등 완화 정책,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가족 단위 사회보장제도의 개별화 등의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장혜경 외. 2013, p. 141).

또한 성평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니지만 정창권 외(2019)는 미래 일자리에 관한 연구에서 저출산 지속 현상에 대해 진단한 바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비혼 출산율은 1.9%로 OECD 평균인 40.3%보다 훨씬 낮을 뿐 아니라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이는 한국에서 비혼 출산은 상상하기 힘든 구조임을 알 수 있다. 한국 여성의 비혼율이 OECD 국가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비혼 출산율이 OECD 평균 대비 20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비혼 출산을 사회가 용인할 때 초저출산 현상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을 수도 있다(정창권 외, 2019). 즉 장기적으로 결혼제도에 대한 사회통념이 변화하여 가족 형태에 상관없이 출산과 육아가 가능한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관련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젠더 관점에서 미래 가족 변화를 전망하면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 외국의 사례로는 몽고메리(Montgomery, 2008)의 미국 시나리오 연구가 있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토론을 통해 미래에 전개될 두 가지 불확실성의 축을 극단적으로 설정하고 네

개의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경제적으로 동등한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일시적 파트너십(Mr. & Mrs. Right Now), 결혼, 임신 및 출산, 양육을 동등하게 할 수 있는 상대를 찾는 혼인 시장(The Marriage Marketplace), 중매혼, 일부다처제가 여성의 자율성 위협하고 확대가족이 가족들의 부양을 책임지는 '21세기 월튼가'(The New WALTONS for the 21st Century), 그리고 성차별적인 가부장제 사회의 '위기의 주부들(Desperate Housewives)'이라는 시나리오를 내놓았다(Montgomery, 2007, pp. 377-387; 장혜경 외, 2012, pp. 31~32에서 재인용). 미국의 미래 가족 시나리오는 가족 및 성역할에 관한 동시대 변화한 인식을 토대로 근대적 가족 구성의 조건들이 향후 상당 부분 변화할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이성애에 기반하여 평생 함께 살 것을 전제하는 결혼제도 자체에 관한 급격한 변화를 전망한다. 더 이상 결혼은 이성애 관계 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리라는 전망은 향후 사람들이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동성혼이나 일시적 부부 관계 등의 증가를 통해 친밀성의 변동을 가리키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경제적 상황이나 자녀 양육 등의 책임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어 결혼이 도구화할 우려도 제시한다. 이의 경우 여성들의 자율성이 오히려 위협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미래 가족 시나리오를 제시한 베르트람(Bertram, 2006)의 연구 역시 젠더 관점에 기반한다. 여성=돌봄자라는 전통적 성별 노동 분업이 사라진 '평등 가족', 가족 내 전통적 성별 노동 분업이 강화되는 '가족 내 가부장적 관계 부활', 취업 시장뿐 아니라 가족 내 남녀역할 관계가 변화하도록 '남성적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 성별 차이뿐 아니라 계급 계층 차원을 더하여 가족생활의 양극화를 전망하는 '가족생활의 양극화'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Bertram, 2006; Buhrkart, 2007; 장혜경 외, 2012에서 재인용). 이 같은 독일의 시나리오는 성별 관계가 미래 가족의 모습을 전망하는데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가족의 미래를 전망할 때, 단지 가족 내 현상뿐 아니라 가족 밖, 대표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전통적인 성역할의 구분을 고려한 가족의 모습과 이때의 성별 관계를 전망한다. 또한 계층이라는 변수를 더한 시나리오를 추가함으로써 성평등을 사고할 때 성별관계뿐 아니라 성별관계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환경을 함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내용에서 가족의 미래가 특히 여성들의 생애주기 및 전망의 변화, 즉 여성들의 노동과 친밀성 및 가족 구성에 관한 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리라는 점이

명확하다. 특히 해외의 가족 시나리오들은 취업 노동에서 성역할 해체와 함께 가족 내 돌봄 주체들의 확대 혹은 다양화를 전망하는데 여성뿐 아니라 남성, 나아가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돌봄 주체로서의 역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성애 혼인 및 혈연 중심의 가족 구성이 더 이상 기본 혹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게 되면서 향후 핵가족 중심의 '가족 정상성'은 쇠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동성 부부, 혼인 관계 아닌 생활 동반자,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공동체 등의 다양한 가족 구성의 사례와 이를 반영한 제도적 보완의 요구들이 증가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가족의 미래전망은 저출산 경향성 또한 젠더 관계의 성격 및 그 변화 방향과 함께 가게 될 것이다.

나. 고령화와 빈곤·돌봄의 여성화

1) 인구 고령화와 여성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

앞서 살펴본 저출산 추이와 더불어 고령화는 이미 가시화된 미래 사회 변화이다. 2030년이 되면 1인 가구와 노인가구가 가장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의 경향성과 함께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고령화 추이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00년 7.2%에서 2017년 13.8%로 약 2배 증가하여, 2017년부터 65세 이상 고령 인구(707만명)는 13.8%로 0~14세 유소년 인구(672만명) 13.1%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40년이 되면, 고령 인구(1,722만명)는 33.9%, 유소년 인구(498만명)는 9.8%로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약 3.5배 많아지게 된다(통계청 보도자료, 2019. 3. 28).

고령사회 젠더 이슈를 조사한 연구(유재언 외, 2019)에서는 노년기에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빈곤율로 이어진다고 보고한다. 여성 노인은 남성 노인에 비해 9.3% 더 많은 65.8%가 기준빈곤선 이하에 있다. 이는 여성들이 생애과정 전반에서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남성만큼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상황이 누적된 결과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공적 연금과 재산소득을 보유한 비율 역시 남자 가구가 더 높다. 반대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비율은 여자 가구가 더 높았다(유재언 외, 2019, pp. 381~382).

여성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은 미래 성평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2040년에 고령 인구가 되는 현재 중장년인 40대~50대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남성보다 은퇴 시기가 빠를 뿐 아니라 비정규직, 저임금 등 열악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향이 높다. 현재 노동시장에서의 이러한 격차는 고스란히 국민연금 가입률과 연금수령액 격차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여성 노인들은 성차별과 연령 차별의 이중 구조에 의해 경제적 취약계층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정둘순, 2018).

2) 돌봄 수요의 증가와 돌봄의 여성화

점차 남성 초고령자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돌봄노동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 등의 발전에 따른 기대수명 증가로 향후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 및 남성 초고령자 비율은 증가할 전망이다.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는 2017년 60만명(1.2%)에서 2024년에는 100만명이 넘고, 2040년 230만명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13.0%로 증가할 전망이다. 초고령 인구에서의 성비는 2017년 34.6명(여자인구 1백명당 남성인구)으로 여성이 3배 정도 많지만, 생명의료 기술의 발전 등에 따른 사망률 개선에 따라 2040년에는 57.9명으로 증가(여성이 1.7배)할 것이 전망한다(통계청 보도자료, 2019. 3. 28.).

노년기 돌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 여성은 남성에 비해 돌봄을 받는 비율도 높지만, 돌봄을 필요할 때 받지 못하는 비율도 동시에 높다(유재언 외, 2019, p. 342). 여성 노인이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돌봄을 주로 제공하지만, 정작 자신이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되었을 때는 자식에게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정순둘, 2018). 또한 여성의 생애과정 임신, 출산, 양육으로 경제활동 기간의 축소로 인한 빈곤과 경력단절로 협소해진 재취업 전망 등으로 여성 노인이 돌봄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유재언 외, 2019, p. 383). 열악한 조건에서 사회화된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대부분은 여성인데 돌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성희롱, 성추행, 학대 피해도 적지 않다(유재언 외, 2019, pp. 340~344).

이 같은 돌봄의 성별화 양상은 미래 성평등에 부정적인 전망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족 내 무급노동 전담자가 주로 여성인 현실을 고려해 보면, 20~30년 후에도 이 같은 패턴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60세 이상 기혼 부부의 무급노동 젠더 불평등 실태와 원인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무급 돌봄노동의 성별

격차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은 가사노동에 남성의 4배 이상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돌봄노동에는 2배 가까운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담률에서도 큰 성별 격차가 나타났는데 전체 부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남편의 기여는 20% 미만이며 돌봄노동은 그보다는 조금 낮지만 34%에 불과했다(안미영, 2017).

2030년 가족 미래 전망에서 노인 돌봄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첫째, 부모와 자녀 세대 사이의 부양과 돌봄 역할의 분리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며, 둘째, 세대 간 친밀성이 증가할 것이라 제시한다. 고령자가 가구주인 고령 가구 및 독거 노인 가구의 빠른 증가는 노인 돌봄을 주로 수행해 온 가족 등의 비공식 자원이 축소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가족의 당연한 의무로 간주했던 노부모 돌봄에 서 가족의 역할이 축소될 확률이 높으며 이러한 환경전망을 토대로, 2030년에는 노인 돌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돌봄의 사회화를 시작해야 하며, 사회와 국가의 책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2030년 가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 돌봄 이슈는 기능 장애가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노인을 위한 일상생활 돌봄 지원 이슈, 노인 돌봄 자원의 부족에 따른 돌봄 자원 다원화 이슈, 국가 주도적인 돌봄서비스 전달 방식의 재구성 이슈 등을 제안한다(장혜경 외, 2013).

특히 여성 노인의 빈곤율이 높아짐에 따라 저임금 돌봄노동을 여성 노인이 떠안는 현실은 물질적 실천과 사회 문화적 이데올로기, 문화적 규범과 같은 억압의 결합으로 기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김주현, 2016), 여성 노인의 젠더 불평등을 생애과정 관점으로 살피고 생애과정 관점을 적용한 정책적 개입이 있어야 한다.(김주현, 2016; 유재언 외, 2019, p. 385에서 재인용).

3) 고령자 관계 단절 문제와 성역할

고령사회 연구자들은 1인 가구 증가, 가족 내 친밀성 및 돌봄 형태의 변화 등과 맞물려 노인의 관계 단절, 고독, 이로 인한 높은 자살률의 문제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엄태완, 2007; 허소영, 2009; 원미라, 2013; 석희정, 2014; 석재은·장은진, 2016).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에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역할을 상실하면서 이로 인한 외로움과 소외감 등 심리적, 정서적 문제가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들은 부부 노인가구나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보다 주변으로부터 도움받을 기회가 적어서, 사회적 지지망

이 취약하다. 또한 사회적 고립과 함께 사회적, 신체적 건강 악화로 삶의 질의 저하할 우려가 높다(원미라, 2013; 석희정, 2014에서 재인용).

홀로 사는 노인 가운데서도 가족 내에서 친밀한 관계 및 돌봄 영역에서의 경험 및 기여가 거의 없는 남성 노인의 경우 관계 단절 및 고독, 돌봄 공백 등의 문제에 더 크게 노출된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가족 문화 및 가치관은 남성 독거노인의 관계 단절 및 고독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허소영, 2009; 석재은·장은진, 2016; 석희정, 2014). 가부장이자 생계부양자로서의 정체성을 내면화한 남성 노인의 경우, 생계부양자 역할의 상실 및 가족공동체의 균열에 따라 가장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가족과 연락을 끊고 단절된 삶을 사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허소영, 2009; 석희정, 2014). 이 때문에 남성노인은 고령인구 가운데에서도 고독, 돌봄 공백의 위험이 더 크다.

또한 노인 자살자의 70%가 남성 노인이고, 전반적으로 빈곤, 질병, 고독, 역할 상실을 심각하게 경험하며 다른 연령층보다 자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자살을 시도했을 때 성공할 확률도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엄태완, 2007; 허소영, 2009에서 재인용). 남성은 여성과 비교했을 때, 가부장적 남성성을 학습한 결과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청하거나 받는 것에 익숙치 않다. 또한 사회적 관계 형성 기회도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 독거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이 극단적일 수 있는 것이다(석희정, 2014).

석재은·장은진(2016)은 독거노인 관계 자원의 성별 차이에 주목하여 관계 자원이 노인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성, 연령, 소득수준, 주관적 건강 상태, 신체 기능 제한 여부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녀, 친인척, 친구·이웃·지인, 모든 타인 등의 관계 자원이 독거노인 삶의 만족도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여성 노인은 남성 노인보다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수준이 더 열악하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적, 건강 측면에서의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여성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남성 노인보다 유의미하게 높다. 이는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해 양질의 관계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한다(석재은·장은진, 2016).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남성 노인들이 남성 생계부양자로서의 성역할을 대신할 대안적인 정체성을 모색하지 못하는 한 빈약한 관계 자원들 속에서는 환대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주변화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석희정, 2014). 이에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계 자원을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

다(석재은·장은진, 2016). 특히 성별에 따른 관계 자원의 차이를 고려하여 남성 노인의 경우 근로 연령기부터 일·가정의 균형을 강조하여 노년기에 가족 및 비공식 관계 자원을 유지,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석희정, 2014; 석재은·장은진, 2016).

2 과학기술의 발전과 부상하는 젠더 이슈

가. 과학기술의 젠더 편향

기술과 젠더에 관한 연구자들은 기술을 둘러싼 정치, 교육, 제도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기술의 젠더 편향성은 기술 접근성에서 누적된 성차별의 결과라는 것이다(Cockburn and Ormrod, 1993; Wajcman, 2004). 우선 한국의 경우 대학 내 여성 비율이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화학공학, 산업공학, 산업디자인, 환경공학 등과 같은 몇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학 분야에서 남학생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공대의 남성화가 지속되고 있다(마은정, 2014; 이효빈·김해도, 2017). 이 같은 과학기술의 남성화는 여학생이 수학과 과학 공부를 기피하게 만드는 사회화와 교육, 여성을 주변화하고 배제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남성중심적 문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예컨대 학교 교육과 청소년 문화, 그리고 가정과 매스미디어 이 모든 것들이 남성성과 기계 및 기술적 적성을 동일시하는 의미와 가치체계를 심어준다. 학교에서의 성 정형화, 특히 중, 고등학교 교육에서 여학생과 남학생들을 서로 다른 과목들로 유도하는 과정, 그리고 성에 따라 분업화된 노동시장과 교육 간의 연결고리는 매우 공고하게 제도화되어 있다(Wajcman, 2004; 2006).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별 편견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예컨대 기초연구에서 성별 편견은 세포나 조직 실험이나 동물실험에서 수컷이나 암컷 표본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아 이에 따라 왜곡된 연구 결과를 낳는다. 의학 분야의 그 대표적 사례는 골다공증인데, 골다공증을 주로 여성들에게만 발생하는 질병으로 분류하는 바람에 남성 환자의 진단이나 치료가 늦어질 수도 있다. 또 도시 설계 시 돌봄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지 않아 비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다(김혜련, 2010; Schiebinger, 2010; 이효빈·김해도, 2017).

이 같은 문제는 빠른 속도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도 여전히 지속한다. 여성들의 디지털 기술 분야 진출이 부족한 문제뿐 아니라 인공지능, AI 등의 데이터 및 알고리즘에서의 젠더 편향, 혹은 타자와 맺는 관계(성적 관계를 포함한)의 형식 및 의미 등에서의 성 불평등성 등을 언급한다. 예를 들어 법률 로봇이나 금융에이전트의 경우는 남성으로, 마케팅이나 리서치, 쇼핑 및 패션, 데이트 프로그램 에이전트는 여성으로 젠더화한다(Kelshaw, 2016). 무성적 혹은 중립적 성으로 간주되는 인공지능, 로봇 기술에서도 전통적 성역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전통적 방식으로 재현하고 재생산하는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기술 역시도 역사적, 문화적 구성물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에서도 젠더 문제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젠더 관점의 적극적인 기술 개입 없이는 성평등의 달성은 물론 불평등한 젠더 관계조차 변화시킬 수 없다(Cockburn and Ormrod, 1993; Wajcman 2006). 곧 다가오는 4차 산업 혁명 시대 기술에서의 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둘러싼 차별적 젠더 문화와 '자유롭지 못한 시간'과 연령의 문제(허재준, 2017)에 집중해야 한다. 디지털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성별 평등을 성취하기 위한 출발점은 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강이수, 2018).

나. 생명공학기술과 인간 및 성별 범주의 재편

1)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

생명공학은 전통 생명공학과 신생명공학으로 구분한다. 전통 생명공학은 식물육종을, 신생명공학은 유전자 조작이 중심이다. 현대의 신생명공학은 생물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전자조작 기술(유전자 공학), 세포융합 기술(세포공학), 세포대량배양 기술(세포배양공학), 그리고 바이오리액터 기술(효소공학) 등의 핵심 기술을 이용한다(이상수, 2019). 즉 신생명공학 기술은 분자생물학 기술로 원하는 유전자 형질을 분리하여 다른 생명체에 주입함으로써 쉽고 빠르게 원하는 형질을 정확하게 획득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제약, 백신, 생체연료, 작물 등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등 다양한 산업에 생명체의 특성을 활용하고 있다(김종미·박혜림, 2020).

특히 생명과학 및 유전학 기술의 발달은 생명현상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거나

생명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고 있다. 가령 인공수정 등의 보조생식술, 태아의 장애 및 유전병 검사, 인공 임신 중절, 뇌사와 장기이식, 연명의료기술 등은 인간 생명 과정에 기술을 통한 인위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하며, 이미 상당 부분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다(송윤진, 2018).

생명공학 분야의 미래 과제는 염기서열[7]을 규명하는 작업이 될 것으로 연구자들은 전망한다. 이 같은 작업이 가능해지면 암이나 유전병 등에서 근원적 예방이나 치료가 가능해진다. 또한 이미 성공을 거둔 생물 복제 기술을 통해 인간 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stem cell)를 심장, 간 등의 장기복구에 이용할 수도 있다. 물론 동물을 통해 생산한 장기들이 사람한테 조직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장기이식 역시 곧 가능할 것이다(이상수, 2019).

생명공학의 발달은 유전병 및 불치병 극복을 위한 의학적 효용성 측면과 함께 윤리적, 종교적, 그리고 법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송윤진, 2018; 이상수, 2019). 가장 크게 불거지는 윤리적 문제는 배아 연구로 인한 인간의 존엄성 훼손이다. 또한 유전정보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인권과 개인정보의 침해[8]는 물론, 유전정보를 산업화할 우려나 우생학적인 차별 가능성 역시 문제로 제기한다. 이에 연구자들은 바이오 안전성[9]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이상수, 2019).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은 또한 장차 미래 인간 존재 및 정의 자체에 관한 새로운 윤리적, 철학적 문제와 함께 젠더 범주 및 젠더 관계의 변화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강화된 인간을 가능케 하는 인간 향상 기술은 전통적 부모-자식의 관계나 생명 탄생의 과정 등에서의 혁명적 변화를 일으킨다. 이외에도 웨어러블 로봇, 뇌-기계 인터페이스나 유전자 편집 등을 통한 트랜스 휴머니즘에 이르기까지 미래에 다가올 급진적 상황에 관한 논의들이 존재한다.

인간 향상(human enhancement) 기술은 인간 범주 자체에 대한 더 근본적이고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손상된 장기나 신체 복구, 난치병 치료, 항노화, 연명의료 기술의 발전이 그것이다. 이 같은 기술은 단순히 보다 나은 삶, 질병과 노화로

7) 유전형질을 구성하는 염기의 서열
8) 유전자 정보로 개인의 질병, 성향, 수명까지 예측 가능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한 사회윤리적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이상수, 2019).
9) 유전자 변형생물체가 가져올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

인한 고통의 해소 등에 대한 기대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 자체를 근본적으로 향상할 긍정적 가능성, 즉 공학적, 생물학적 조작을 통해 인간 신체가 기술과 융합하여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인류의 출현을 지지하는 트랜스 휴머니즘 논의로 발전하고 있다(박성원 외, 2016). 트랜스 휴머니즘은 기술혁신을 통해 미래 노화나 장애, 질병을 극복하고, 지능을 획기적으로 발달시키며, 수명을 연장하여 장수하는 인류를 전망한다.

반면, 트랜스 휴머니즘이 낙관하는 미래 인간 향상에 관한 비관적 논의도 존재한다. 미래 인간 향상은 예상치 못한 위험이나 기술의 남용으로 장기적으로는 생태계 파괴 같은 중대한 해악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인류의 종말을 야기할 수도 있다. 예컨대 부유한 사람이 트랜스 휴먼 기술을 활용하여 증강된 신체와 인지 능력을 가지고 일반인과 경쟁함으로써 불평등을 심화할 우려는 물론, 인간이 신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생명이나 자연에 내재된 신성한 가치를 파괴할 것이며 인간 자유의 조건을 위협, 인간의 존엄성을 포함한 다양한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이다(신상규, 2013).

2) 포스트 휴머니즘과 이원론적 범주의 재구성

미래 인간상에 관한 트랜스 휴머니즘 논의는 실상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보다 오래된 논의의 일부이다. 포스트 휴먼은 각종 테크놀로지에 의해 신체적으로 향상되고 강화된 인간으로도 알려졌지만 더 포괄적으로는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변화시킨 환경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 인간을 통칭한다(Halberstam and Livingston, 1995). 그리고 포스트 휴머니즘은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환경 및 인식 변화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기존 휴머니즘의 핵심 전제들을 비판적으로 검토, 수정, 폐기하려는 시도이다.

포스트 휴머니즘의 이론적 배경에는 차별을 다루는 이론 및 담론들이 놓여 있다. 페미니즘이나 장애학은 물론, 탈식민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사이보그 이론 등이 그것이다. 이 이론들은 근대 휴머니즘이나 위계적 '인간' 개념이 어떻게 성별이나 인종, 민족, 종교 등의 차이를 기반으로 여성, 인종, 장애인과 같은 '다른' 인간들을 '인간'의 범주에서 배제하고, 성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 우생학, 집단 학살과 같은 차별적 행위를 지속, 정당화했는지에 대해 밝힌 바 있다(신상규, 2020).

포스트 휴먼에 대한 논의 및 관련 미래 전망의 핵심에는 젠더 범주에 대한 급진적 사

고가 존재한다. 그 대표적 연구자인 도나 해러웨이는 디지털 시대 여성의 몸과 기술생명권력(technobiopower)의 깊은 관련성을 강조한다(이지언, 2012). 21세기의 과학기술과 신자유주의로 언급되는 자본주의의 상황에서 근대적 구조에서 해석했던 인종, 성별, 계층의 범주를 새롭게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이지언, 2012). 해러웨이는 『사이보그 선언문』에서 "사이보그란 잡종의 피조물로, 유기체와 기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사이보그들은 20세기 말에 적합한 특수한 종류의 기계들과 특수한 종류의 유기체들로 합성한다. 사이보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잡종의 실체(entities)로, 우선 우리들 자신과 다른 유기적 피조물로 만들어지는데 이때 다른 유기적 피조물들은 정보 체계, 텍스트, 그리고 인간공학적으로 조종되는 노동하고 욕망하고 생식하는 체계 등으로 위장하고 있다. 사이보그를 구성하는 두 번째로 필수적인 구성 요소들은 기계들로, 의사소통 체계, 텍스트, 그리고 인간공학적으로 디자인된 스스로-작동하는 장치 등으로 위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다나 J. 해러웨이, 1991, pp. 13~14). 해러웨이의 포스트 휴먼에 대한 이 같은 이해에 따르면 인간 및 젠더의 범주는 구별 가능하거나, 고정되는 것이 아니다.

미래, 생명기술이나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인간의 기계화,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기계의 인간화 현상[10]에서 인간 신경계와 기계의 연결과 같은 기술은 인간을 점점 더 사이보그적인 존재로 변화시킬 것이다(신상규, 2020). 거꾸로 인공지능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판단, 선택하는 인공행위자로 출현하고 있다. 즉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은 결과적으로 인간-생명-기계의 본성을 재존재화(reontologize)하고 디지털-물리-생물 사이의 경계를 해체한다(신상규, 2020). 포스트 휴머니즘은 인간의 경계를 재정의함으로써 인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위계를 해체하는 동시에 인간과 인간뿐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존재 사이의 조화로운 공생을 모색하려고 시도한다(신상규, 2020).

포스트 휴머니즘의 낙관적 미래구상에도 불구하고 발전하는 과학기술 안에 여전히 젠더의 문제는 지속할 것이며, 사회 안에서 소모되는 여성성이 발견될 것으로 전망된다(박예은·조미라, 2019). 남성-여성의 젠더 이분법의 구도는 로봇이나 다른 생명 형태로서의 동반종들에게도 이어지면서 여성과 로봇, 여타의 동반종들이 타자로 머물 것이기 때문이다(박선희, 2019).

10) 예컨대 유전자 조작, 줄기세포나 인공장기와 같은 생명기술, 로봇 팔다리나 외골격(엑스스켈레톤)과 같은 인공보철(프로스테시스), 두뇌-컴퓨터 인터페이스 BCI(Brain-Computer Interface) 등이 있다.

3) 보조생식술의 발전과 여성의 재생산 권리

일반적으로 불임 부부를 위한 치료로서 인공수정(artificia insemination)이나 체외수정(in vitro fertilization, IVF) 기술로 알려진 재생산 기술 발전은 여성과 어머니의 연결고리, 모성, 가족 구성 등에서 젠더 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배란 유도, 난자 채취, 배아 생성, 배아 이식 등의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보조생식술과 함께 생식세포 및 배아의 냉동과 해동, 그리고 배아에 대한 유전자 진단 등을 중심으로 생명의료과학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과거 자연의 섭리로만 여겨졌던 임신·출산이 인간의 의지에 의한 인위적 기술의 개입으로 가능해졌다(김은애, 2008).

현재 한국에서는 매년 20만 명이 난임 진단을 받고 있으며, 체외수정(IVF, in vitro fertilization)을 비롯한 보조생식기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은 난임 시술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김선혜, 2019). 체외수정은 2005년도 한 해 21,154건이 이루어졌는데, 2016년 80,068건으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했다(김선혜, 2019). 또한 이미 2000년대 임신·출산을 위해 생명의료 과학기술을 이용할 때 부모가 되고자 하는 자와 합의하여 생식세포를 기증하는 자가 개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김은애, 2008).

이처럼 보조생식술은 불임 해결을 위한 기술로 시작하였다. 이 기술은 재생산 능력의 핵심으로 난자를 여성의 몸으로부터 분리해 내어 개체화하였다. 또한 배란, 수정, 착상, 분만 등의 과정이 한 여성의 몸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일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난자 공여, 배아 공여, 대리모 등의 선택이 가능해졌다(정인경, 2015). 이로써 체외인공수정술(IVR)은 이성애적 성적 결합 없이 임신을 가능케 만들었을 뿐 아니라 다른 여성으로부터 기증된 난자를 통해서도 임신이 가능하여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생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활용은 여성을 그 직접적 대상으로 하며 그 영향에 있어서도 여성의 생물학적·사회적 현실을 뒤흔들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정인경, 2015). 특히 최근 재생산 기술의 발전은 인공 임신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 나아가 그것이 유전적 조작을 통한 '생물학적 제작'을 현실화할 핵심 기술이라는 점은(정인경, 2015) 추후 여성의 삶은 물론 가족, 인구변화 등에 미칠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애적 성적 결합이라는 전통적 생식의 기본 전제가 흔들리면서 미래에는 이성 간의 성관계 출산이 아닌

동성 커플, 비혼, 고령 출산, 남성 자궁 이식 등의 가능성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뿐만 아니라 법적 부모 판별 기준, 다태아 시험관 아기 출산, 유전자 맞춤형 아기를 둘러싼 법적·윤리적 쟁점이 부상할 것이다.

이 같은 재생산 기술의 발전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보조생식술이 재생산의 주체인 여성의 몸과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우선, 여성의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재생산 기술과 여성의 관계를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재생산 기술에 대한 비판론으로도 보는데, 생명의료 과학기술의 이용이 오히려 여성의 모성을 해체하고 무력화시키고, 여성의 몸을 적극적으로 지배하면서 임신과 출산을 강요하는 가부장제를 공고히 한다는 비판이다. 특히 보조생식술은 불임을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임신과 출산의 재생산 기능을 여성에게 회복시켜준다는 논리를 가진다. 또한 불임의 경우 그 원인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인 차원에서 불임 검사 및 시술 등은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조영미, 2006). 이는 암묵적으로 불임 여성에 대한 기술의 이용을 강요하고 여성의 출산을 강요 및 당연시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여성에게 재생산 능력과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 내지 주체성을 부여하기보다는 단지 이를 제공하는 도구적 존재로 전락시키는 점, 경제력을 비롯한 사회적 조건이 여성들을 분열시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여성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송윤진, 2018).

반면, 생명과학 기술의 발전이 피임과 임신 중단을 통해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수 있어 더 많은 선택권이 생긴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점에서 과학기술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특히 보조생식술은 여성이 스스로 어머니 되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여성의 자유와 평등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향후 결혼 및 이성애 관계 외에서의 생물학적 가족 형성의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자연과 인공의 경계에서 재생산의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혼여성, 게이, 레즈비언 커플, 트랜스젠더도 생물학적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머브 엠리 외, 2019).

다. 디지털 기술 기반 젠더 폭력

기술사회에서의 젠더 폭력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시점은 사람들의 일상에서 디지털화

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80년대 MMORPG 게임 내 캐릭터 간 이루어진 성희롱, 성추행을 둘러싼 논쟁에서부터 90년대 PC 통신 및 인터넷 연결로 만들어진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차별, 혐오적 발언, 스토킹, 그리고 2000년대 휴대폰에 카메라를 장착하면서 본격적 사회문제로 불거지기 시작한 불법 촬영은 2010년대 들어 스마트폰과 1인 미디어 대중화로 디지털 시대 젠더 폭력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했다.

디지털 기반 젠더 폭력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비대면 관계에서도 충분히 일어난다는 점이다. 비대면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이 일상화하면서 블로그, SNS 등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활용하여 시간, 장소의 한계를 넘어선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하고 있다. 개인은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항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고 보다 많이 교제하며 많은 정보를 획득한다. 기존에 로컬, 즉 지역, 국가, 연령 등에 국한된 인간관계를 넘어서 무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면서 폭력 경험의 위험도 함께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통해서 디지털 시대 젠더 폭력 양상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기술적 요소와 이를 활용하는 다수의 가해자가 존재함을 확인한 바 있다.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강간) 등 여성이 대상이 되는 강력 범죄는 1994년 7,004건에서 2018년 2만 9,313건으로 증가했으며 여성 피해자 비율은 1994년 69.4%에서 2018년 83.1%로 증가했다. 젠더 폭력 양상에 있어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카메라 이용 촬영 음란죄 신고 건수인데, 이는 2009년 834건에서 2018년 6,085건으로 지난 10년간 7.3배 증가한 점이다. 그리고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은 85.3%에 달한다(대검찰청, 2019).

이 같은 현실에서 여성, 특히 청년 여성(19~34세)의 범죄피해에 대한 불안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청년 여성 중 약 70%(69.8%)가 공중화장실 이용 시 불안을 느끼며, 60%는 불법촬영 범죄의 피해로 인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 절반 이상(53.4%)이 살인, 폭력, 강간 등 피해에 대한 불안을, 약 46.9%는 집에 혼자 있을 때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성세대 여성(35세~59세)은 이보다는 낮지만, 남성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마경희 외, 2020).

젠더 폭력 연구자들은 2000년대 초부터 꾸준히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젠더 폭력이 어떤 양상을 띠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젠더 폭력이 증가할 것을 우려

해 왔다(심영희, 2001; 김은경, 2001; 이민식, 2003; 김한균 2017; 김숙희 외, 2018; 이나영·정지혜, 2019). 특히 디지털 성폭력은 기술기반 젠더 폭력 양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D.S.O.(2017)에 따르면 디지털 성폭력 개념은 디지털 콘텐츠의 복제 가능성,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를 넘나드는 관계성, 개인에 관계되지 않는다는 집단성을 포괄하기 위한 개념이다(D.S.O., 2017). 그 유형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제시 또는 전시·상영하는 유포형, 정보통신망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행위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유포·수입·수출하는 제작형, 디지털 성폭력 행위의 게시물에 댓글, 연락 등으로 동조·참여하는 등 가담하는 참여형, 강간 촬영물을 소지·매입·시청하는 소비형으로 분류한다(D.S.O., 2017).

디지털 기술은 범행 기회에 대한 접근과 가담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흉포성을 가중하며 범죄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은닉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 김한균(2020)은 디지털 성폭력에 있어 디지털 성범죄와 범죄피해의 기술 매개적 특성과 젠더 기반 폭력적 특성을 인지할 필요를 제기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구조적 본질에 여성혐오와 아동·청소년 성학대, 성착취 산업이 결합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젠더 폭력의 기술 매개적 특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딥페이크(Deepfake)[11]와 알고리즘 디자인의 사례가 있다. 딥페이크 기술은 영화 다국어 더빙이나 글로벌 인도주의 캠페인 등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한겨레신문, 2019. 10. 24.), 기존의 포르노 동영상에 여성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여성의 성 착취에 의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한애라, 2019). 중국에서는 프로그래머가 안면인식과 AI 기술을 활용하여 포르노 비디오의 여성 신원을 확인하는 알고리즘을 발표했다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탄을 받고 프로그램을 폐기한 사례도 있다(한애라, 2019).

또한 최근 한국에서 '리얼돌' 이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섹스 로봇 등의 문제는 미래 기술사회 섹슈얼리티 실천의 문제뿐 아니라 여성이라는 상징성을 유지한 비인간에 대한 무차별적 성애화와 젠더 관계에 대한 영향을 비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비인간이

11) Deepfake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GANs)이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동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덧씌워 마치 사람의 실제 동영상인 것처럼 가짜 동영상을 만든다(한애라, 2019).

매개하면서 젠더 폭력의 양상과 성격은 보다 복합적이고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지능형 자율 반려로봇(Smart Companion Robots)으로 분류하는 섹스로봇은 인간과 유사한 외관과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피부 온도, 언어 사용이 요구되며, 기능상으로는 얼굴인식, 의사소통, 최소한의 논의나 의사 표현, 적절한 반응, 학습을 통한 사용자와의 교감 강화, 다방면의 대화 등이 가능하다(백수원, 2020). 또한 인간의 피부를 인식하거나 인간과 교감하고 쾌감을 느끼거나 성적 행위 과정에서 의사 표현을 할 것 등을 요구한다. 인간과 매우 유사하지만 인간으로부터 일방적인 명령을 전달받는 섹스 로봇과의 성행위가 보편화하면, 이러한 반려로봇에 익숙한 인간은 다른 인간을 상대할 때에도 비인격적 행위(강압적, 폭력적 행위 등)가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백수원, 2020).

3 디지털 전환과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

가. 기술변화와 고용 전망

자동화, 초융합, 초연결, 초지능을 특징으로 하는 소위 4차 산업 중심의 재편은 직업구조는 물론 노동 환경 전반, 노동 시간과 장소, 고용계약 및 노동 규범에 변화를 가져오며 그 영향은 직군별, 산업별, 성별로 다양할 것이다(권현지 외, 2017). 향후 예상되는 대표적인 고용 트렌드는 첫째, 로봇의 도입과 스마트 공장 확산을 통해 제조업 노동환경이 변화하며, 둘째, 긱 경제(Gig Economy)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경제가 확산하면 이를 통한 프로젝트 기반 고용, 단기 계약, 파트 타임 등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고 넷째, 디지털 네트워크 기반 작업 환경 확산에 따른 유연근무와 원격근무 확대 및 기술 수준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 같은 고용 트렌드에서는 저임금 단순 노무직을 중심으로 취업 인구가 감소하며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전통적 노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모호한 관계가 증가할 것이며, 프리랜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측한다(클라우스 슈밥, 2016; 강이수, 2018에서 재인용).

나. 자동화와 여성 일자리 감소

4차 산업혁명과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은 저성장의 고착화를 넘어설 새로운 기회로 논의하지만 여성 노동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 세계경제포럼의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The Future of Jobs)에 따르면 2015~2020년 사이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사무, 행정직 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성별 격차가 큰 제조업 및 생산직의 일부까지 여성의 일자리 손실이 클 것으로 전망한다(World Economic Forum, 2018). 독일 연방노동사회부의 보고서도 4차 산업혁명으로 남성보다 여성 일자리가 더 많이 감소할 것이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기술 산업에서 여성 비율은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음을 보여준다(독일 연방노동사회부, 2016).

Zhou et al.(2018)는 4차 산업혁명 이후 중국 노동시장 변화의 성별 효과를 전망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직종별 자동화 확률을 산정하여 자동화가 중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자동화의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더 직업을 잃기 위험에 쉽게 노출되며 여성, 고령, 저학력일수록 고용률은 낮아지고 근로시간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여성이 이미 노동시장에서 승진, 임금 및 취업 기회 등에서 차별적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동화가 진행될 경우 남성에 비해 먼저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이다(Zhou et al., 2018; 이다혜, 2019에서 재인용).

한국의 상황 역시 세계적 전망과 다르지 않다. 2030년까지 기술발전, 자동화 등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대체는 18.5% 수준(4차산업혁명위원회, 2018. 3. 8.)으로 예상하는데, 자동화 등으로 대체를 예상하는 대표적 직군은 매장판매직, 운송·운전 관련직, 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가사·음식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제조 관련 단순노무직 등으로(노대명, 2020a),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은 직군이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성별 직종분리 현상이 지속했고, 2025년까지 이 같은 현상이 계속한다면 미래에는 남성보다 더 많은 여성 일자리가 소멸될 것이다(오은진 외, 2020).

다. 새로운 직업군에서의 성별 분리

기술혁신을 통해 기존 일자리가 감소하는 동시에 새로운 직업군이 생겼으나 이 영역에서도 성별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성은 마케팅, 영업 및 제품 개발 영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인공지능, 로봇 공학 및 유전 공학과 같은 새로운 기술 개

발 영역은 남성이 지배적이다. 이에 4차산업 분야 여성 종사자가 늘지 않으면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어려워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새로운 기술 개발 분야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없다면, 노동 분야에서 미래의 성별 격차 해소는 더디게 진행할 것이라고 본다(World Economic Forum, 2019).

세계경제포럼(WEF)은 성 격차에 관한 보고서에서 클라우딩 컴퓨터와 공학,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유망 직업군에서 여성은 각각 12%, 15%, 26%를 차지한다고 보고했다. 여성들이 이 같은 4차산업 유망 직업군을 충분히 대표하지 못하는 점이 남녀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여성들이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학(Science)·기술(Technology)·공학(Engineering)·수학(Mathematics) 등 스템(STEM) 분야 전공을 독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World Economic Forum, 2019).

디지털 기술 변동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숙련의 보유 여부라고 할 수 있다(권현지 외, 2017). 고급 전문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중급 수준의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일자리의 감소 가능성이 높아서 고용 양극화 또는 임금 양극화의 가능성을 전망한다(허재준, 2017).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에서 여성 비율은 매우 낮으며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ICT 분야에서는 기술적 지식을 갖춘 여성이라고 해도 경력 단절과 단절 이후 재진입이 어려워 L자형 취업 유형이 나타난다(권현지 외, 2017). Griffiths and Moore(2010)은 영국 IT 기업에 대한 연구에서 지난 20년 동안 IT 분야에서 여성들이 증가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ICT 부문을 떠나고 있다고 보고한다. 전통적으로 남초직업군인 ICT 분야에서 여성들은 다소 적대적인, 소외된 노동 환경에 있으며, 장시간 노동과 연령차별 등의 문제로 ICT 부문에 진입했다가도 결과적으로 사라지는 인력이라는 것이다. 특히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이 같은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기술 부문에서 여성 인력을 '새는 파이프'(the leaky pipeline)로 지칭할 정도이다(Blickenstaff, 2005).

우리나라 2015년 여성 과학기술개발 인력은 19.4%에 불과하며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12]. 공학계열 전공 여성의 취업 유형에 대한 연

12) 남성은 정규직이 79.5%, 비정규직이 20.5%인데 비해, 여성들은 정규직이 56.5%, 비정규직이 43.4%이다(한국과학기술

구에서 보통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 후 재취업하는 여성 노동이 M자 곡선을 그리는 것과 달리 경력단절을 겪으며 떨어진 경제활동 참가율이 회복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L자형 패턴이 나타났다(김지형·김효민, 2014). 이는 여성들은 그동안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직무 위계에 머무르며, 이 부문은 여전히 남성 지배적인 분야임을 보여준다. 지난 수십 년간 디지털 기술 변동의 과정에서 여성들은 아직도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방식으로 성별화된 기술 격차에 직면해 있다(강이수, 2018).

라. 플랫폼 노동의 확대와 성별 분업의 고착화

여성 다수 직군의 자동화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여성 노동 문제는 긱 경제의 확대이다. 긱 경제(Gig-economy)의 확대와 디지털 플랫폼 기반 노동, 유연근무제 등의 확대는 전통적 성역할을 고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강이수, 2018). 긱 경제는 필요한 인력을 그때그때 잠깐씩 활용하는 고용 형태이며, 플랫폼들은 거래약관이나 평가제도를 통하여 정규 자영업자들의 권한을 통제한다(독일 연방노동사회부, 2016, p. 53). 이렇게 고용된 서비스 제공자들은 일의 양이 불규칙하여 임금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사고나 질병, 실업의 상황에 놓이는 등 고위험에 노출된다. 이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혹은 노동자에게로 위험성을 전이하는 새로운 불안정 고용 형태이다(독일 연방노동사회부, 2016, p. 53). 플랫폼 노동은 적어도 당분간은 전반적으로 저임금 상태에 머무를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플랫폼 노동의 확대는 고용 관계의 모호성을 증대할 뿐 아니라 유연근무제 형식을 띠게 되므로 여성과 남성이 스스로 조정하는 근무시간을 다르게 활용함으로써 전통적 성역할을 더 고착화할 수도 있다(독일 연방노동사회부, 2016, p. 70). 일하는 방식이 디지털화하면서 일터와 집, 근로시간과 휴식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 근로자에게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오히려 과중한 노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술혁신이 미래 여성 고용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 불평등 양상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국 플랫폼 노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기획평가원, 2017).

우버는 기존 택시보다 여성 운전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13]. 이는 단순히 기술혁신에 따른 여성 노동 기회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성 불평등에 의한 결과이다. Hall and Krueger(2018)에 따르면 우버(Uber) 여성 운전자의 42%가 가족 돌봄노동으로 인해 전일제 근로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간제 일자리가 용이한 우버 플랫폼 노동시장에 진입한 것이다. 즉, 플랫폼 노동은 오히려 기존의 가족 내 성역할을 유지하기에 적절한 일자리인 것이다. 디지털화가 노동시장에서 성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는 기술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법과 제도, 정책적 대응을 취하는지에 달려 있다(이다혜, 2019).

4 기후변화와 성별화된 재난 취약성

가. 재난의 불평등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기후변화 및 신종 전염병의 확산 등은 이미 닥쳐온 미래이다. 앞으로도 산업화와 도시화,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온실가스가 증가하여 지구 온난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인사혁신처, 2020). 특히 한국에서 기후변화는 점차 가속화하는데, 1912년부터 2008년까지 세계 평균기온이 0.74℃ 증가하는 동안, 한국의 연평균 기온은 1.7℃ 증가했다(인사혁신처, 2020). 한국에서 발생하는 대가뭄과 대홍수의 강도와 빈도가 지난 30년간 세 배 이상 증가했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인사혁신처, 2020). 미래 한국 기후가 아열대화 하면 아열대 외래종 유입으로 농업 생산량 감소 등으로 식량 자원 또한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한국은 1차 에너지 총소비량이 1971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6.8% 증가하여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국가이다. 이 같은 경향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데 삶의 질 향상 등에 따른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여 에너지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치명적인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점차적으로 감소시켜나가면 원자력 발전의 의존도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 발전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13) 미국의 기성 택시업계는 전체 운전기사 중 여성 비율이 8%에 불과한데 우버는 여성 운전자 비율이 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다혜, 2019).

우려도 커질 것이다(인사혁신추진위원회, 2016).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재난의 피해는 주로 취약계층에 집중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의 부담과 고통이 심해질 것이다. 홍수, 태풍, 해일 등의 재난은 특히 빈곤 여성의 주거, 건강, 안전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여성 노동자, 농어민, 소수 인종 및 원주민 등 차별받고 과소대표되는 집단들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환경 이슈로서가 아니라 사회정의의 영역과 결합하여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정필·박진희, 2010).

기후변화는 자연재해의 수준을 넘어서 자연재해로 인한 복합 재난 위험성 증가, 미세먼지 및 가습기살균제 등의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등 전통적인 환경오염과 구별되는 새로운 환경 문제로 이어진다(채여라 외, 2017). 그러나 저성장 시대의 장기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양극화 속에서 기후·환경 리스크의 전이 및 증폭이 우려되며,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정치·사회·경제·환경 여건 변화로 인해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채여라 외, 2017).

나. 전염병의 확산과 성평등의 후퇴

중국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초대형 재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메르스(MERS) 및 지카바이러스(Zikavirus) 등과 같은 대규모 전염병 유행으로 인한 팬데믹(pandemic)과 같은 범국가적인 환경문제가 지속할 것이다(인사혁신추진위원회, 2016). 이 같은 전염병으로 인한 공적 돌봄 공백,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는 일상생활의 유지와 존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기후변화가 일상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의식주 일상과 돌봄을 더 많이 담당하는 여성에게 더 많은 부담을 가중할 것이다.

특히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환경문제가 지속되리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과 같은 신조어가 말해주듯 향후 겨울철 독감과 같은 방식으로 변종바이러스의 반복적 출현을 예상하며 팬데믹으로 인한 돌봄 공백, 교육, 노동 등 사회 전반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최정인·전윤정, 2020). 특히 돌봄 공백과 일자리와 같이 생존에 직결된 사안에서 여성들이 위험에 처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청(2020)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0년 3~6월 중에 발생한 대부분의 취업자 수 감소는 취약한 일자리에서 발생하였다(통계청, 2020). 코로나19에 대한 고용 취약성은 저소득, 저학력, 청년, 여성, 임시·일용·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취약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고졸 이하 저학력자가 비필수직, 비재택 근무, 대면 접촉 일자리에 종사할 가능성은 대졸 이상 고학력자에 비해 7~24% 높게 추정한다(통계청, 2020). 신종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큰 직업군일수록 대체로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다(통계청, 2020).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은 직업군은 대체로 돌봄 및 대면 노동의 성격을 띠는데, 그 대표적인 직업군 중 하나가 간호사,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로, 96.5%가 여성이다. 또한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자(요양보호사, 간병인) 중 84.9%,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사회복지사, 보육 교사 등) 중 85.1%가 여성이며, 이미용·예식 서비스직 여성 종사자 역시 79.9%로 높다. 이처럼 여성들이 비재택, 대면 접촉 종사자 일자리에 대거 종사하고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고위험군이라 할 수 있다(통계청 2020).

특히 현재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는 보건의료 종사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코로나 감염 비율도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 이들은 실질적 감염 위험 외에도 환자나 환자 가족으로부터의 폭력 등으로 인한 감정 고갈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끊임없이 노출된다. 보건의료 부문 외에도 ILO는 일자리 상실과 근로시간 단축 측면에 있어 코로나19 영향에 가장 취약한 고위험 부문을 지정했는데, 숙박 및 식음료 서비스, 부동산업·비즈니스 및 행정, 제조업, 도·소매 무역 등 4개 취약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 비율은 총 여성 고용률의 41%를 차지하여 35%를 차지하는 남성에 비해 팬데믹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4개 취약 부문이 여성 고용률의 거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어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여성 고용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한다(ILO, 2020; 심예리, 2020에서 재인용).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는 감염 위험이 높은 대면 서비스 직종과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확보되지 않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 위기를 야기하였고, 이는

14) 2020년 ILO에서 발표한 의료 및 사회복지(health and social work) 부문 여성 종사자 비율은 189개국 중 23개국이 81~90%, 60개국은 71~80%, 37개국은 61~70%, 27개국은 51~60%를 차지했다. UN Women에서 발표한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성별 코로나19 감염 데이터는 이러한 성별 직업분리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스페인에서는 감염된 보건의료 종사자 7,329명 중 71.8%, 미국에서는 9,282명 중 73%, 이탈리아에서는 20,797명 중 69%가 여성이었다(ILO, 2020; 심예리, 2020에서 재인용).

다수 여성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과 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심예리, 2020). 돌봄 및 교육 서비스 직종이면서 여성 집중도가 높은 가사근로자, 아이돌보미,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후 일자리 및 소득 변화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가사근로자, 아이돌보미, 방과후학교 강사 모두에서 일자리 및 소득 감소를 확인하였다(김난주·이선행, 2020). 가사근로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는 대면 서비스 기반이면서 비임금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고, 아이돌보미는 상대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률이 높으나, 감염 우려로 서비스를 취소하는 가구가 증가해 소득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은 여성의 일자리 및 돌봄노동의 감소뿐 아니라 젠더 폭력도 증가시킨다. 2020년 6월 유엔여성기구(UN Women)에서 발간한 보고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여성 폭력 근절(Covid-19 and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이동 제한령을 시행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정폭력이 급증하였다(김진리, 2020).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봉쇄조치나 재택근무 등 이동의 제한은 특정 조건의 여성들에게는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도시 봉쇄 이후 가정폭력 발생률이 증가했으며, 이에 대한 피해자 지원 시설과 서비스 접근도 어려워졌다(김진리, 2020). 이에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 24시간 함께 있어야 하는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ILO, 2020; 심예리, 2020에서 재인용; 김진리, 2020; 최정인·전윤정, 2020).

한국 역시 예외적이지 않은데, 가정폭력 상담소 활동가들에 따르면 한국의 가정폭력 신고율은 워낙 낮기 때문에 가정폭력 신고율 등으로 가정폭력의 증감을 유의미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 여성의 전화 상담소 통계를 근거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후로 전체 상담 중 가정폭력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1월 26%에서 2~3월 40%대로 가정폭력 상담 비율이 증가했다. 전국가정폭력상담소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 등교 중단, 실직 등이 늘어나고, 경제적 문제까지 가중하면서 갈등과 폭력이 증가해 가족 상담 요청이 많아진 것으로 추정한다(이미정, 2020).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 격리로 여성이 젠더 폭력에 노출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를 비롯 향후 지속될 환경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젠더 차원의 영향, 성 불평등 현상의 지속과 확산에 따른 경제·고용·돌봄·젠더 폭력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최정인·전윤정, 2020).

5 정치환경의 변화와 여성 세력화

가. 온라인 네트워크 기반 정치적 영향력 증가

소셜네트워크와 스마트폰의 확산은 온라인 매체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다.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선거마다 온라인 여론이 중요해지고, 과소대표되던 인구집단들, 대표적으로 여성, 청소년, 청년 등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등장하기도 한다. 정치환경적 측면에서 미래 초연결 네트워크 사회는 많은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0년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96%로 그 속도와 파급력이 매우 크며 이에 따라 온라인 매체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민주화를 통한 부와 권력의 변화 또는 분산 가능성이 높다. 초연결 네트워크 사회가 될 2030년경에 국가 권력은 약화하고 기업과 개인, 온라인 네트워크, NGO의 영향력은 커질 전망이다(인사혁신처, 2020).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개인의 지식·정보의 증가와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이해·판단력의 향상으로 엘리트가 주도하는 대의 민주주의는 점차 약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연고형 폐쇄적 집단 중심정치 참여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개인 중심의 정치 참여 형태로 변화할 확률이 높다(김상배, 2019).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집단의 정치 참여가 늘어나고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네트워크 사회의 발달로 인해 수평적인 관계망이 보편화하고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개인 중심의 정치 참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더 가속할 것이다(인사혁신처, 2020). 인터넷상 토론과 비평 등이 활발해질 것이며 권위와 집단, 조직을 중요시하는 개념이 약화하고 개인 주체의 정치 참여가 늘어나며, 정치영역에서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하는 정보공유와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이원태·차미영·양해륜, 2011; 손동진·김혜경, 2017).

나. 페미니즘의 대중화

네트워크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온라인 기반 정치 참여 기회의 확대는 특히 2010년대 중반 시작한 페미니즘 대중화의 배경이자 미래 여성들의 정치 참여에 긍정적인 신호로 읽을 수 있다. 페미니즘은 2015년을 전후로 디지털 공간의 '여성 혐오', 2016년 강

남역 여성 살해 사건과 소라넷과 불법 촬영물 이슈 등을 통해 대중적 이슈로 부상했다. 특히 메갈리아를 거점으로 한 미러링 실천 확산에 따라 이로부터 촉발된 남성 혐오 논란, 퀴어 혐오 논쟁을 거치며 탄생한 워마드, 페미니스트 교사에 대한 학부모 고발 조치, 불법 촬영물 문제의 부각, 스쿨 미투 등 일련의 젠더 의제들을 이슈화하면서 10~30대 여성들의 광범위한 동의에 기반하여 페미니즘은 대중화의 물결로 접어들었다.

페미니즘 담론은 대학이나 정책 및 정치 등 제도권이 아닌 디지털 공간을 중심으로 확장해 왔다.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디지털 미디어 문법의 특성이 소라넷 등 불법 촬영물 이슈와 강남역 살인사건, 미투 운동 등 젠더 이슈를 굵직한 사회 이슈로 만드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김애라, 2019). 소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화된 소통의 일상화 속에서 정치적 소통 역시 보편화됨에 따라 확산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김애라, 2019). 온라인 네트워크에 기반한 운동에서는 개인이 조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개인으로 행동하며 그 행동의 경계와 구조가 불분명하다(Bennett and Segerberg, 2011). 모순적이게도 이러한 개인화의 경향이 오히려 페미니즘을 통한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증가시켰다. '불편한 용기'의 혜화역 불법촬영물 시위 등 온라인 공간을 거점으로 하는 페미니즘 운동 역시 개인적, 익명적 참여의 특징을 보여준 바 있다(김애라, 2019).

페미니즘 대중화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미래세대인 청소년 및 청년 여성들이 페미니즘의 주체로 등장한 점이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높아진 페미니즘 정보 접근성 및 조직화, 운동 참여의 기회는 연령, 학력, 지역으로 인한 페미니즘 진입 장벽을 허물었다. 이에 페미니즘을 접하고 지지하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었고 각자의 연령, 지역 등에 따라 일상의 차별에 대해 발화하고 성차별 문제를 조직적으로 공론화하였다. 이들은 기성 여성운동에서는 볼 수 없었던 디지털화한 강력한 참여형 운동방식으로 젠더 이슈를 중요한 정치적 협상의 대상으로 만드는 등 여성으로서 정치 세력화의 힘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미투 운동 등은 온라인 페미니즘 운동과 그 정치 세력화의 영향력을 명징하게 드러낸다. 페미니즘의 대중화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지점은 청년 여성이 성차별, 성희롱·성폭력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들은 여성혐오 범죄, 성폭력, 낙태죄, 불법촬영 등 일상의 삶의 공간에서 생기는 페미니스트 의제들을 사회

적으로 확산시키고 정치화하는 것의 가능성을 학습하였다. 페미니즘 정치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이며, '일상 곳곳에 존재'하는 성차별은 정치 문제라는 점을 시사한다(이진옥, 2018). 그러한 주장은 더 나아가 '여성 정치에서 페미니즘 정치로' 그리고 '대의 정치에서 광장 정치'로 정치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이어진다(이진옥, 2018).

페미니즘의 대중화는 실제로 여성들의 정치 세력화의 가능성과 동시에 향후 페미니즘 이해의 다변화 및 페미니스트 주체의 다양화와 이로 인한 여성 내부, 성별 및 세대 간 차이와 이를 둘러싼 젠더 이슈별 논쟁이 심화할 가능성 또한 크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동질적 여성 범주를 주장하며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대학교 입학과 난민 허용을 반대하는 '워마드' 등의 페미니스트가 등장하거나 페미니스트에 대한 거부감을 거리낌없이 표현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남성들이 등장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향후 디지털 공간을 주 근거지로 삼는 페미니즘 운동의 증가로 페미니즘의 탈엘리트화와 대중문화 접근을 통한 페미니즘의 대중화는 지속될 것이다. 또한 젠더 이슈가 형성하고 확산하는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발화와 온라인 페미니즘의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마경희 외, 2020).

다. 사회적 소수자 정치 참여의 활성화

초연결 사회에서는 여성뿐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 정치 참여 역시 더욱 활성화 할 것으로 예상한다. 90년대부터 이어온 사회적 소수자 운동의 역사를 토대로 사회적 소수자들의 발언 통로는 증가할 것이다. 또한 급속한 개인화에 따라 성 소수자들의 가족구성권, 시민권 등에 관한 논의 및 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후지사키요시애·강신재·진영재, 2019; 허성원, 2019).

또한 이주민의 자녀 세대들은 한국인으로서 한국 문화와 부모의 출신 국가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함과 동시에 다양성의 적극적 지지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한국은 빠르게 '다인종 ·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로이다. 2019년 8월 국내 체류 외국인 비율은 4.7%에 달하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한국은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될 것이다. 또한 세계화와 한국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 저출산, 고령화라는 새로운 사회적 변화 속에서 한국 역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 불가피하고 그

전환 속도도 점점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김중혁·황기식·송문석, 2019).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점차 다문화 인구의 정치 참여도 증가할 것이다[15].

교육 영역에서 사회적 소수자 및 인권 관련 수업의 제도화 및 활성화 가능성이 증가하고 디지털 환경 및 사회 전반의 인권 의식 신장으로 소수자 정치 전반은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청년세대가 기성세대에 비해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경향이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해준다. 청소년들은 이미 높은 정보 접근성으로 사회 이슈에 당사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생투표권, 학생인권조례, 스쿨 미투 등 청소년 당사자 운동이 활성화하고 있으며, 학교 내 민주적 문화에 대한 목소리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양옥경·정익중·배은경, 2019; 공현, 2020).

15) 통상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본다.

제3장

지난 20년간 성평등 추이

제1절 공적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영향력

제2절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제3절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제4절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제5절 젠더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제1절 공적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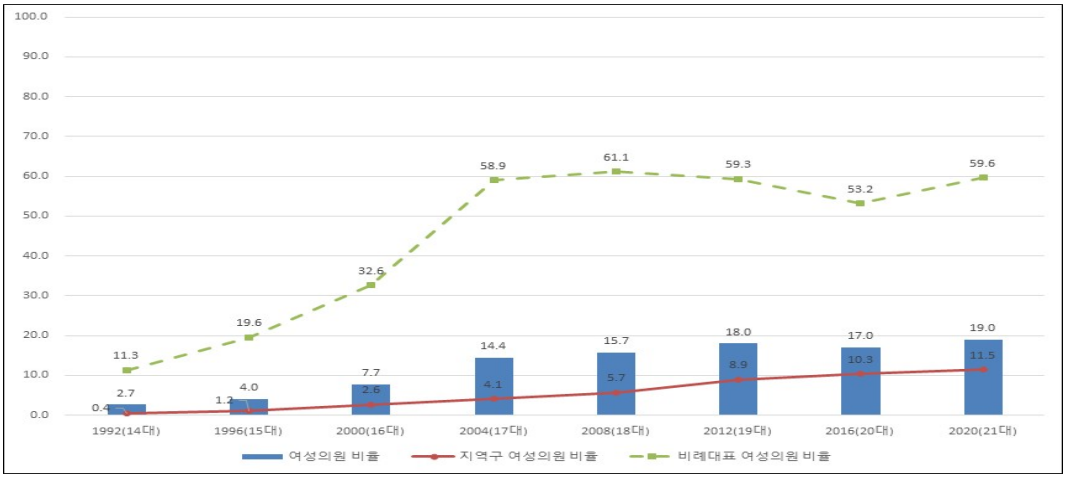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정치·정책 결정에서의 대표성

국회 내 여성의 비율은 1992년(16대 국회) 2.7%에서 2020년(21대 국회) 현재 19.0%로 지난 약 30년간 16.3%p 증가했다. 2004년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을 50% 이상 추천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을 계기로 여성 비율이 1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1%p 내외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절대적인 측면에서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에 못 미치지만, 여성 의원의 대다수는 여전히 비례대표에 집중되어 있으며, 21대 선거 기준 전체 의석의 84.3%를 차지하는 지역구 의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1.5%(29명)에 불과하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 19.0%는 OECD 평균(2020년 기준) 30.9%에 상당히 미달하는 수준이고, 전체 OECD 37개 국가 중 33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한국보다 여성 비율이 낮은 국가는 콜롬비아, 터키, 헝가리, 일본 등 4개국뿐이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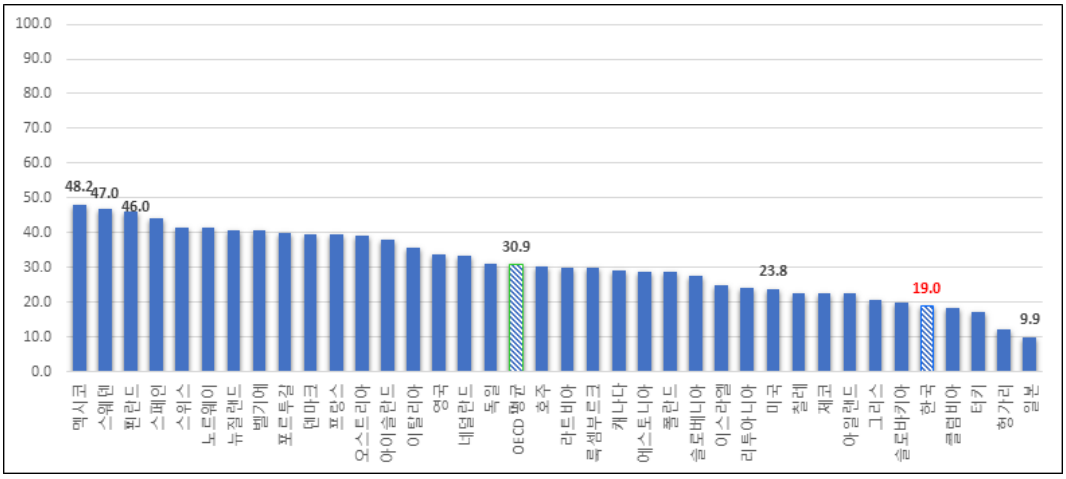


주: 보궐선거 결과 등을 포함한 결과임.

자료: 열린국회정보, https://bit.ly/2Quv3rJ(1992~2012); e-나라지표, https://bit.ly/2QjQmvW(2016); 열린국회정보, https://open.assembly.go.kr/portal/ assm/search/memberSchPage.do(2020), (최종 검색일: 2020. 12. 10.).

[그림 3-1]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1992~202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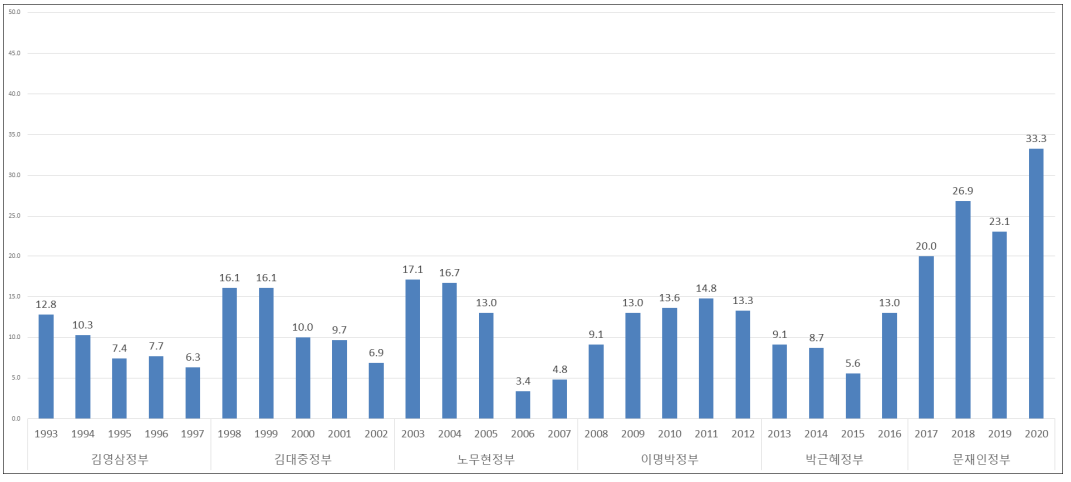


자료: 국제의원연맹(IPU Parline), https://data.ipu.org/women-ranking?month=5&year=2020, (최종 검색일: 2020. 5. 16.).

[그림 3-2] OECD 국가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2020년)

장관은 각 영역별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행정부처의 핵심 의사결정권자이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장관 중 여성 장관 비율[16]은 낮은 수준이다. 1993년 이후 여성 장관은 대부분의 정권에서 20%를 넘기지 못했으며, 대체로 정권 초기에 10%가 넘는 수준으로 임용했다가 정권 말기에 10%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2017년에야 처음으로 여성 장관의 비율이 20%를 넘어섰으며, 2018년 26.9%, 2019년 23.1%, 2020년 33.3%로 2020년이 되어서야 30%를 넘어섰다. 그동안 여성 장관은 주로 여성가족부(정무장관(제2)실 포함),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일부 부처에 제한적으로 임명하였다(마경희 외, 2017, pp. 29~30). 최근에는 외교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양한 부처로 임명을 확대되고 있지만 2019년 기준 한국 여성 장관 비율은 OECD 국가 평균 31.2%보다 낮은 수준이며, OECD 37개국 중 29위에 머무르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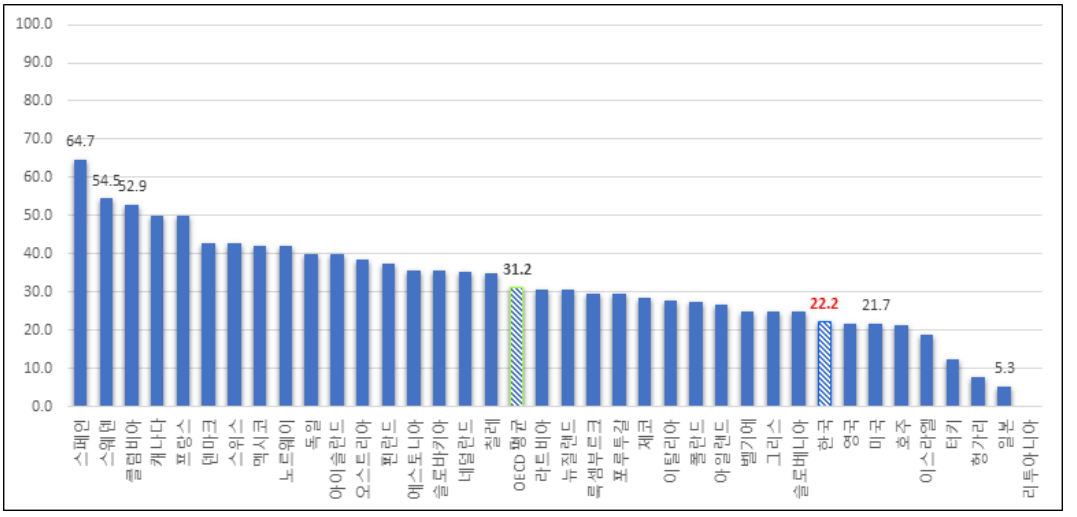
주: 1) 2020년 8월 현재의 18개 부를 기준으로 역대 정부 기구도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정리함.
2) 전체 장관 수와 여성 장관 수는 연도별로 재임한 장관 수를 합한 값임.

자료: 각 부처 홈페이지(장관 수, 성별 장관 수);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http://org.go.kr/orgnzt/chart/viewGvrn.do(역대 정부기구도), (최종 검색일: 2020. 8. 20.).

[그림 3-3] 역대 정부 장관 중 여성 비율(1993~2020년)

16) 전체 장관 수 및 여성장관 수는 현재의 18개 부(장관급)를 기준으로 역대 정부기구도를 참고하여 각 연도별로 정리한 수치이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의 경우, 2014년부터 2017년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로 업무를 분리하고 있었으나 기준이 '장관급'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만을 집계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재임한 A장관의 경우, '연도'가 기준이기 때문에 재임 연도별로 각각 인원 수에 포함했다.

(단위: %)



자료: OECD, https://data.oecd.org/inequality/women-in-politics.htm, (최종 검색일: 2020. 11. 28.).

[그림 3-4] OECD 국가 장관 중 여성 비율(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의 성 격차지수(GGI)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국제지표로 여성 국회의원, 여성 장관, 여성 국가수장 재임 기간을 바탕으로 정치적 권한 정도를 측정한다. 전체 성 격차지수 중 정치적 의사결정 분야에서 한국은 153개국 중 101위(World Economic Forum, 2019: 12)로 국제적인 수준에서 여전히 한국은 하위권에 속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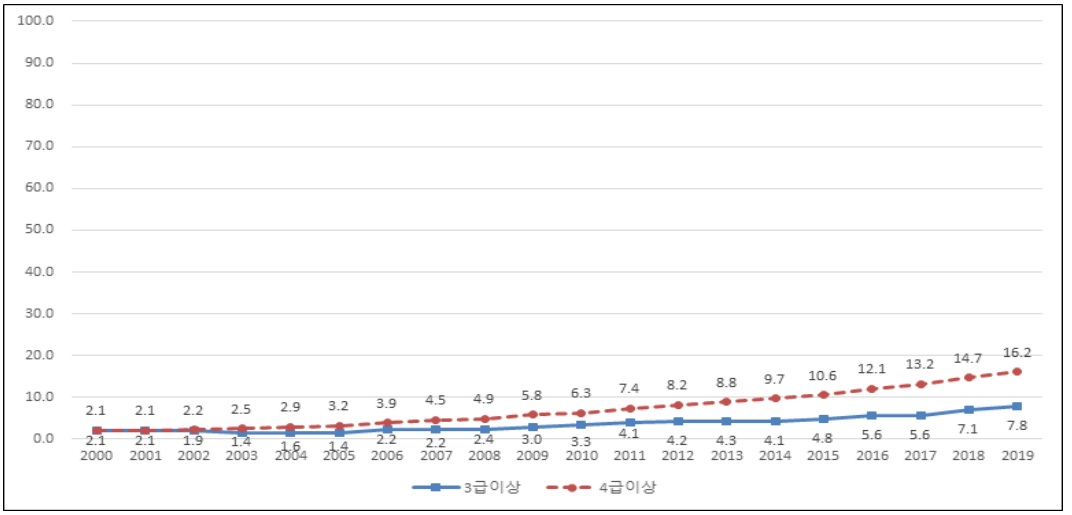
2 공공부문 및 민간기업 관리직으로의 여성 진출

가. 일반직 공무원

2000년부터 2019년 사이 약 20년간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더디게 증가해 왔다. 중앙행정기관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1%에서 7.8%로 5.7%p 증가했을 뿐이다.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1%에서 16.2%로 14.1%p 증가했고 2010년대 초반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중 여성 비율

이 2019년 현재 50.8%(인사혁신처, 2020: 3)로 절반을 넘어섰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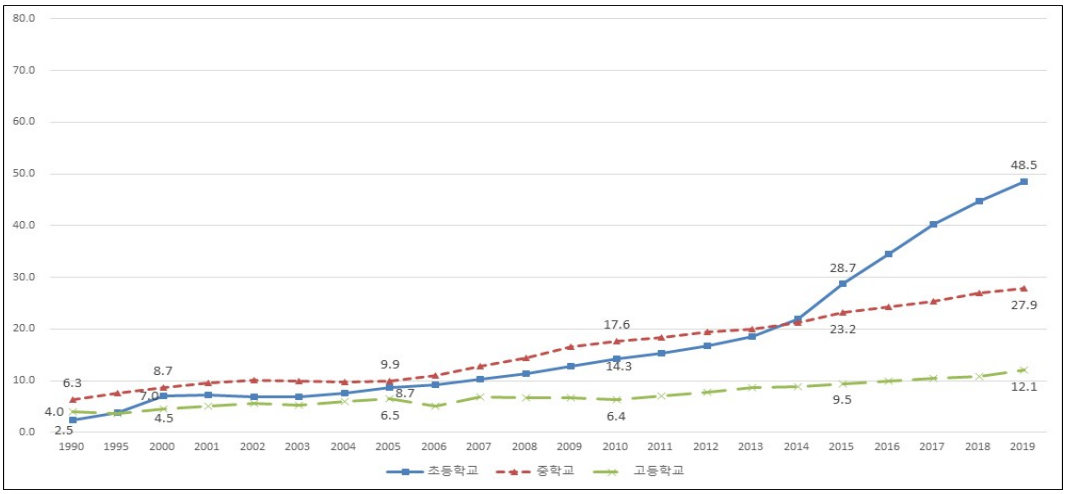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19(2000~2004년); 인사혁신처, 『국가 공무원 인사 통계』 각 년도(2005~2019년).

[그림 3-5] 중앙행정기관 3급 이상 및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율(2000~2019년)

나. 초중등학교 교장

교육은 여성 집중 분야로 1990년 이후 지난 30년간 교장·교감 등 관리직으로 진출한 여성의 비율이 정치, 행정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했으나, 학교급별로 속도 차이가 크다. 초등학교 교장 중 여성 비율은 1990년 2.5%에서 2019년 48.5%로 46.0%p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중학교 교장 중 여성 비율은 6.3%에서 29.9%로 23.6%p, 고등학교 교장 중 여성 비율은 4.0%에서 12.1%로 8.1%p 증가하는 데 그쳤다. 초등학교 교장 중 여성 비율은 2007년(10.3%) 10%, 2014년(22.0%) 20%를 넘어선 후 빠르게 증가하여 2019년 현재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학교 교장 중 여성 비율은 2006년(11.1%) 10%, 2013년(20.0%) 20%를 넘어선 후 완만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현재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고등학교 교장 중 여성 비율은 2017년(10.4%)에야 10%를 겨우 넘어섰다.

(단위: %)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분석자료집-유초중등교육통계편』 각 년도.

[그림 3-6] 학교급별 교장 중 여성 비율(1990~2019년)

다. 판사, 검사

2019년 기준 판사(30.5%), 검사(31.0%), 변호사(27.1%) 등 법조계 여성 비율은 30% 내외를 차지하지만, 법원, 검찰청 등 조직 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리직 여성 비율은 매우 낮다.

〈표 3-1〉 법조인 중 여성 비율(2000~2019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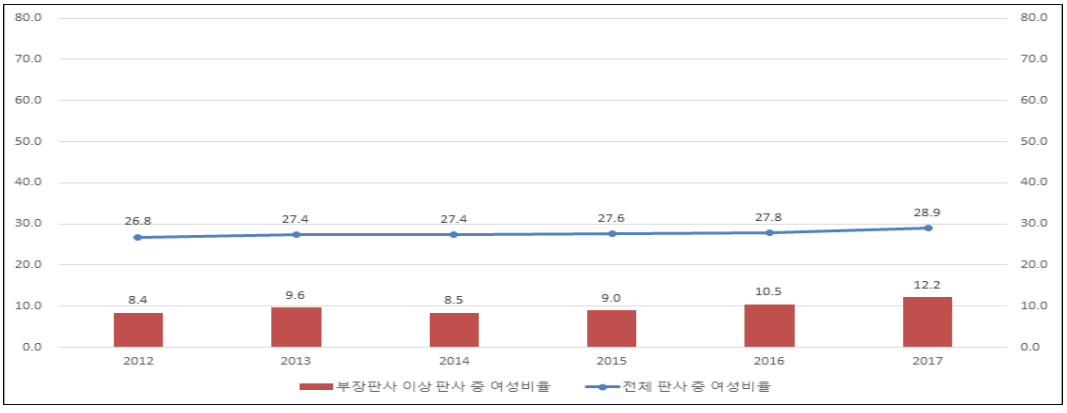
	판사	검사	변호사
2000	6.8	1.8	2.9
2005	11.3	7.0	5.6
2010	24.0	20.8	11.7
2015	27.6	27.7	23.2
2019	30.5	31.0	27.1

자료: 통계청,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20, p. 68).

구체적으로 보면, 판사 중 여성 비율이 2000년 6.8%에서 2019년 30.5%으로 20년간 23.7%p 증가했지만(통계청, 2020: 68), 지법 부장판사 이상 판사 중 여성 비율은

2012년 8.4%, 2017년 12.2%로 5년간 3.8%p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검사는 2012년까지 검사장 이상의 고위직에 여성이 단 1명도 없다가 2013년이 되어서야 1명의 여성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는 전체 간부 검사 중 2.0% 수준이고, 2017년에 2명의 여성 검사장을 배출하며 처음으로 4.7%가 되었다. 여성 검사 비율은 2009년 18.5%에서 2019년 31.0%(통계청, 2020: 21)로 전체 검사 3명 중 1명이 여성 검사일 정도로 여성 비중이 늘고 있으나 검사장까지 도달하는 여성은 매년 1명 수준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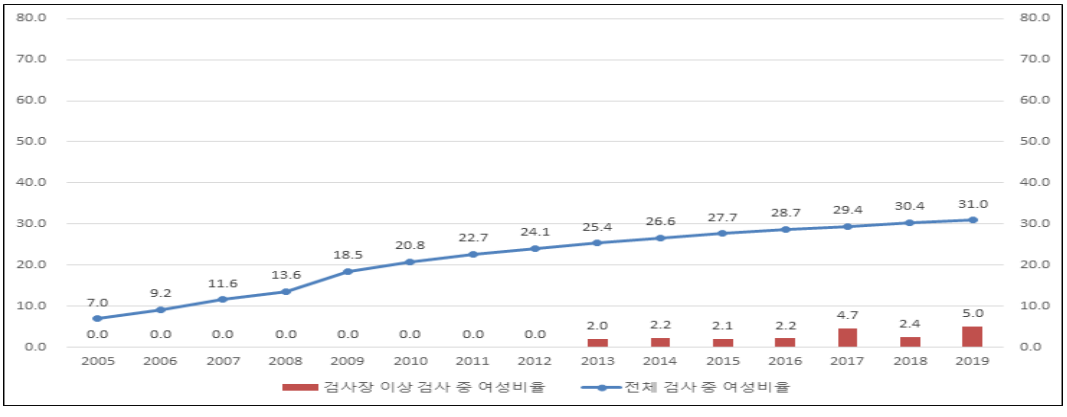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20, p.68, 전체 판사 중 여성 비율); 백혜련 의원 보도자료(2017. 9. 27.), https://blog.naver.com/100hyeryun/221106389609(부장판사 이상 판사 중 여성 비율), (최종 검색일: 2020. 8. 10.).

[그림 3-7] 지법 부장판사 이상 판사 중 여성 비율(2012~2017년)

(단위: 명, %)



자료: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사 통계」 각 년도.

[그림 3-8] 검사장 이상 검사 중 여성 비율(2005~2019년)

라. 경찰, 군인

남녀분리 모집은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정이지만, 현재 경찰청은 여성 경찰관 채용 인원 제한 모집을 고수하고 있어 2018년 7,776명 중 여성은 1,462명(18.8%), 2019년 3,734명 중 791명(21.2%)만 신규채용하는 상황이다 (경찰청, 2020, p. 48). 이로 인해 경찰인력은 2005년 9만 9,957명, 2010년 10만 8,138명, 2019년 13만 4,415명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2019년 현재 경찰관 내 여성은 1만 5,971명(11.9%)에 불과해 15년간 경찰 조직 내 여성 비율은 7.3%p만 증가했을 뿐이다.

〈표 3-2〉 경찰 중 여성 비율(2005~2019년)

(단위: 명, %)

	전체	여성	여성 비율
2005	99,957	4,598	4.6
2010	108,138	7,282	6.7
2015	119,509	11,602	9.7
2019	134,415	15,971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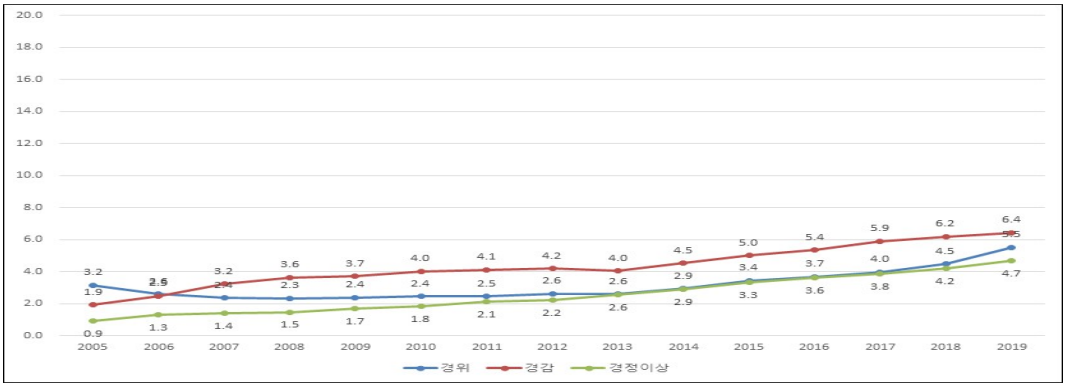
자료: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각 년도.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2020~2024년」에 따르면, 경찰은 조직 내 여성 비율을 2022년까지 15%로 끌어올리기 위해 신규채용의 25~30%를 여성 경찰관으로 채용하고, 2023년부터 성별 구분 없이 통합모집으로 순경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은 경감 이상 간부 공무원의 여성 비율도 2022년까지 7.0%까지 확대하기로 계획하였다(경향신문, 2019.12.30.). 경감 중 여성 비율은 2005년 1.9%에서 2010년 4.0%, 2015년 5.0%, 2019년 6.4%로 지난 15년간 4.5%p 증가했고, 2005년 0.9%였던 경정 이상 계급 중 여성 비율은 2019년 4.7%로 3.8%p 증가했다. 경감 이상 간부급 여성 경찰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는 있지만 그 폭이 매우 작고, 경감 이상 여성 비율과 경감 중 여성 비율의 격차가 2005년 1.0%p에서 2019년 1.7%p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개선이 시급하다. 한편, 경감 후보군이라 할 수 있는 경위급의 여성 비율이 2007년 이후부터 오히려 경감 여성 비율보다 낮아 2019년 5.5%를 기록했는데, 이 인원에 대한 관리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부사관과 장교로 임용된 여성 군인 수는 2007년 4,967명에 비해 2017년 1만 555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2009년 남녀 장교 장기복무 선발률은 남군 74.6%, 여군 74.6%이고, 2011년도 남녀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률은 남군 69.80%, 여군 61.39%(마경희 외, 2018a: 23)로 확보된 여군 인력 장기복무에 선발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연간 초임획득 현황(2016년 기준)을 살펴보면, 부사관 중 여군은 전체의 7.2%(590명), 장교 중 여군은 5.8%(510명)에 불과해(민영단, 2018: 15) 실제 능력 있는 여성이 군 조직으로 유입할 기회 자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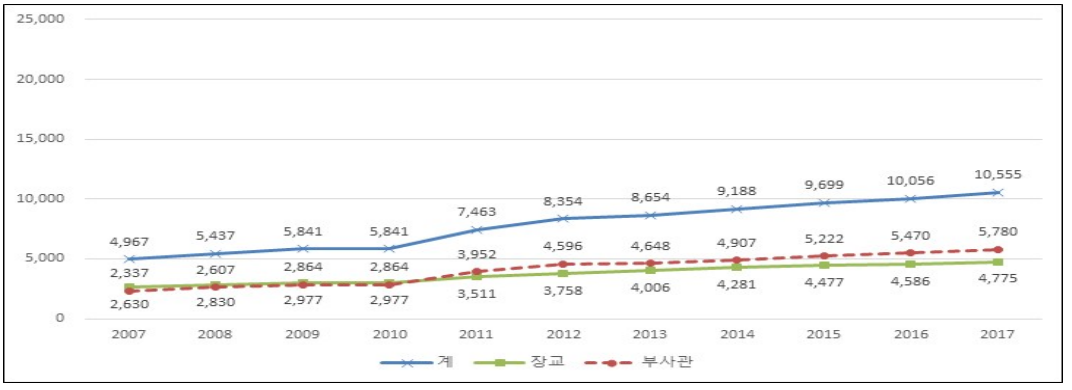
(단위: 명, %)



자료: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사 통계」 각 년도.

[그림 3-9] 경정, 경위, 경감 이상 경찰 중 여성 비율(2005~2019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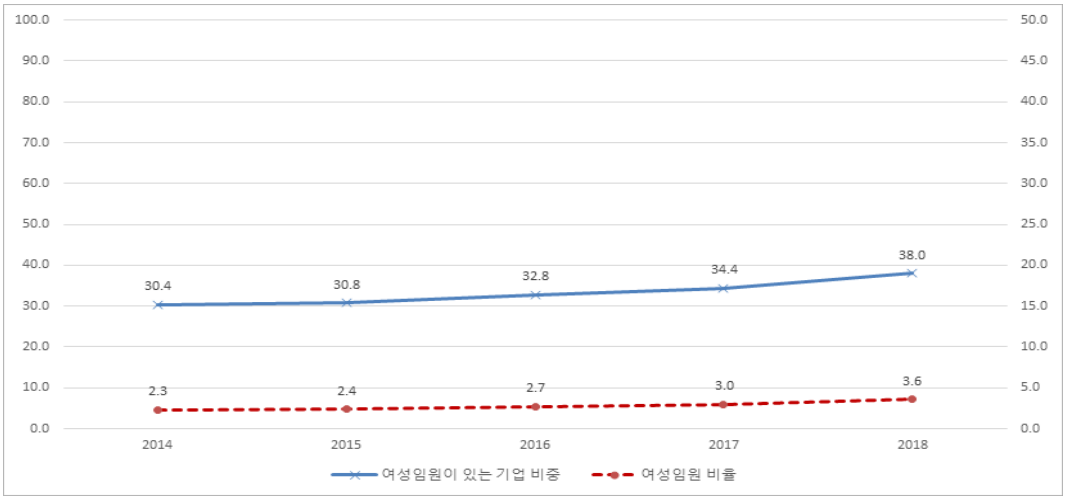
자료: 각 년도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내부자료)(2007,2010~2015,2017); 마경희 외(2018a), 「국방 양성평등정책서」 마련을 위한 연구(2008~2009, 2016).

[그림 3-10] 군인 장교, 부사관 중 여성 비율(2007~2017년)

마. 민간기업 임원 중 여성

근로조건을 비롯한 경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기업 임원 중 여성 비율은 가장 변화가 더딘 영역이다. 장기적인 추이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는 구축되어 있지 않지만,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표하는 매출 500대 기업 여성 임원 비율 추이(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 7. 25.)를 보면 굳이 20~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통계자료를 찾아볼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여성 임원 비율은 2014년 2.3%(1만 5,652명 중 353명), 2015년 2.4%(1만 5,479명 중 376명), 2016년 2.7%(1만 5,155명 중 406명), 2017년 3.0%(1만 5,205명 중 454명) 등 매년 증가했으나 소폭에 그쳐 2018년 3.6%(1만 4,460명 중 518명)에 불과하다. 매출 500대 기업의 임원 중 여성 임원이 1명 이상 있는 기업은 2014년 30.4%(152개), 2015년 30.8%(154개), 2016년 32.8%(164개), 2017년 34.4%(172개), 2018년 38.0%(190개)로 4년간 약 8%p 증가했다. 여성 임원이 1명이라도 있는 기업의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만,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이 2018년 기준 60%가 넘는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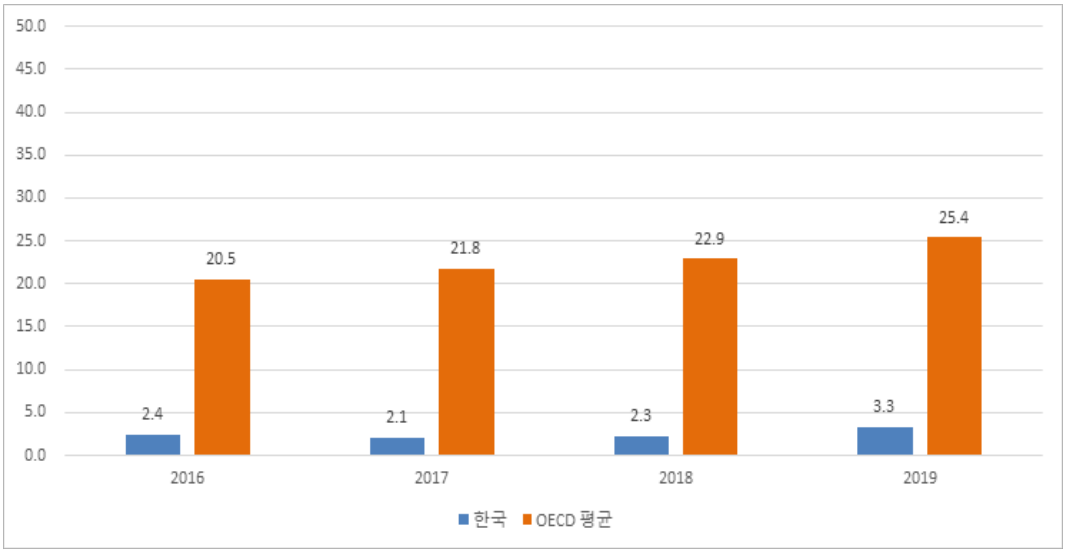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9. 07. 15),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468), (최종검색일: 2020. 11. 20.).

[그림 3-11] 민간기업 임원 중 여성 비율(2014~2018년)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비교 지표를 통해 볼 때 기업 이사 중 여성 비율은 2017년 2.4%(OECD 평균 20.5%)에서 2019년 현재 3.3%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이며 이는 OECD 평균 25.4%[17]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단위: %)



이코노미스트 유리천장 인포그래픽, (https://infographics.economist.com/2017/glass-ceiling/, https://infographics.economist.com/2018/glass-ceiling/https://infographics.economist.com/2019/glass-ceiling/, https://infographics.economist.com/2020/glass-ceiling/), (최종 검색일: 2020. 11. 20.).

[그림 3-12] 민간기업 이사 중 여성 비율(2017~2019년)

17) The Economist, "The glass-ceiling index", https://infographics.economist.com/2020/glass-ceiling/, (최종 검색일: 2020. 11.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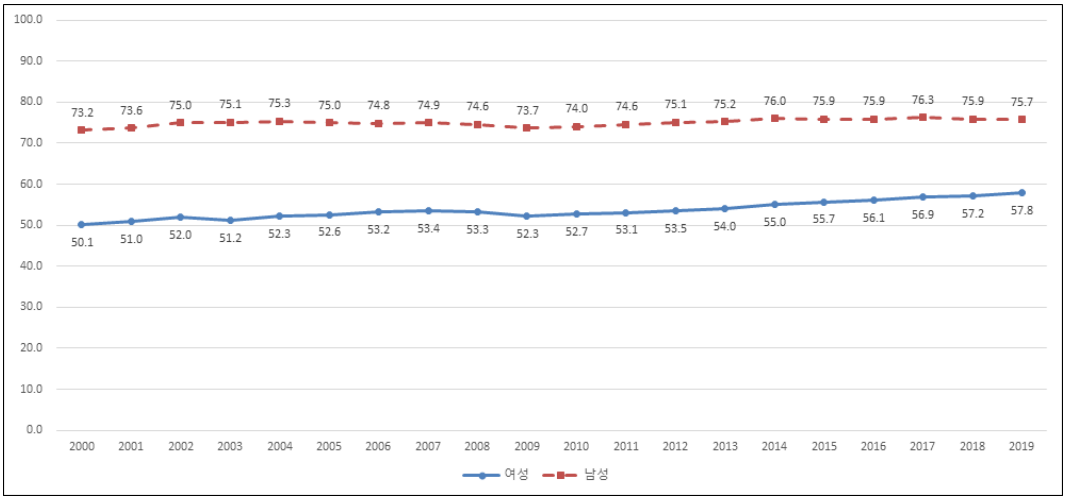
제2절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노동시장 참여

15세 이상 여성 고용률은 2000년 50.1%에서 2019년 현재 57.8%로 지난 20년간 7.7%p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는 OECD 여성 고용률 평균(2019년 기준) 61.3%에 못 미치는 수치이다(OECD, 2020, p.7). 성별 고용률 격차는 2000년 23.1%p, 2010년 21.3%p, 2019년 17.9%p로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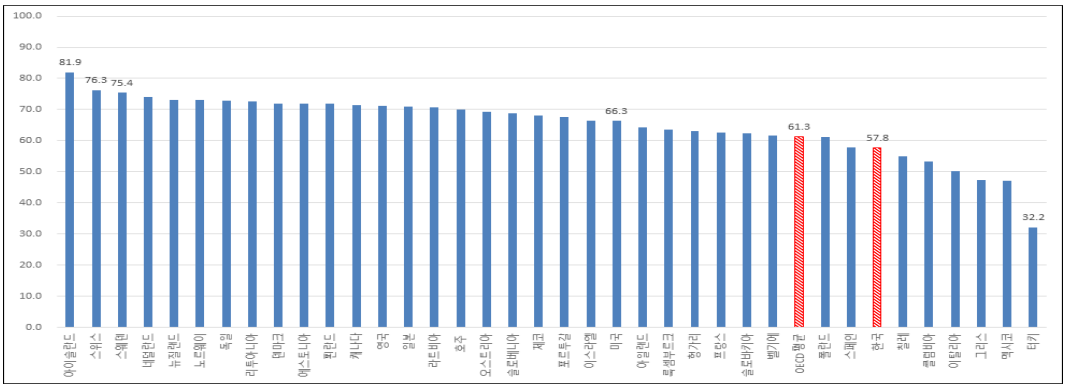


주: 고용률=(15~64세 취업자 수)/(15~64세 인구)×100

자료: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4212&stts_cd=421201, (최종 검색일: 2020. 8. 20.).

[그림 3-13] 성별 고용률(2000~2019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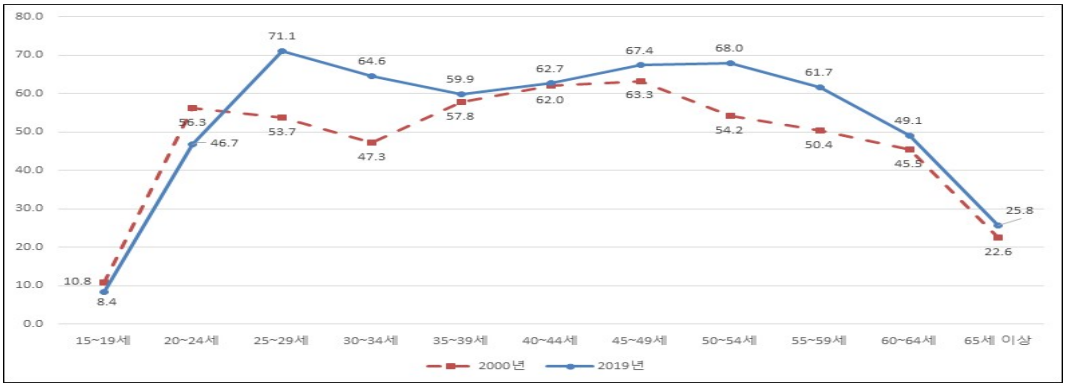


자료: OECD data, https://data.oecd.org/emp/employment-rate.htm(최종 검색일: 2020. 11. 30.).

[그림 3-14] OECD 국가 여성 고용률(2019년)

연령별 여성고용률의 M자 곡선의 최저점이 2000년 이후 20년간 완화하였으나, 여전히 임신, 출산, 양육기에 해당하는 연령대에서 낮게 나타나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전체 15~54세 기혼 여성 중 현재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경력이 유지되지 않는[18]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은 2011년 19.2% 이후 2014년 22.2%로 증가한 이후 소폭 감소하여 2019년 현재 19.2%이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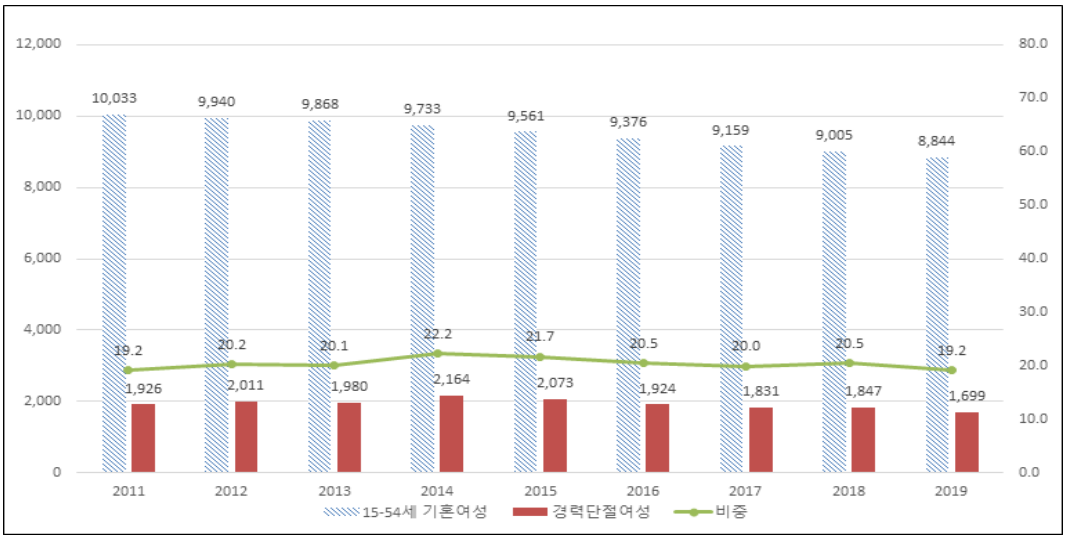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 _path=I2, (최종 검색일: 2020. 11. 30.).

[그림 3-15]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비교(2000년, 2019년)

18)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8, (최종 검색일: 2020. 12. 11.).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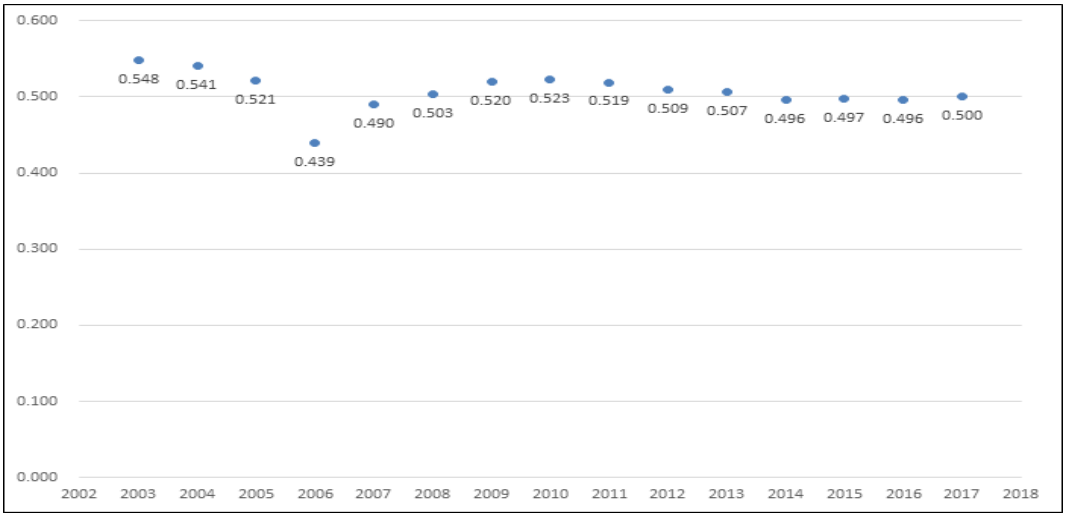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그림 3-16] 경력단절 여성 비율(2011~2019년)

2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

노동시장에서 성별 직종 분리 현상은 여성노동의 지위와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동시장 전체에서 성별 직종분리 현황과 추이를 보여주는 던칸 지수(Duncan Index, DI)는 2003년 0.548점에서 2017년 0.5000점으로 소폭 감소했다[19]. 6차 직종 분류를 기준으로 한 2009~2017년 기간 동안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0.520)부터 2014년(0.496)까지의 노동시장 내 성별 직종분리는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추세였지만, 2017년에는 0.500으로 성별 직종분리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19) 직업 분류 기준 차이로 2003~2005년, 2006~2009년, 2009~2017년 각각의 시계열상 단절을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최세림·정세은, 2019, p.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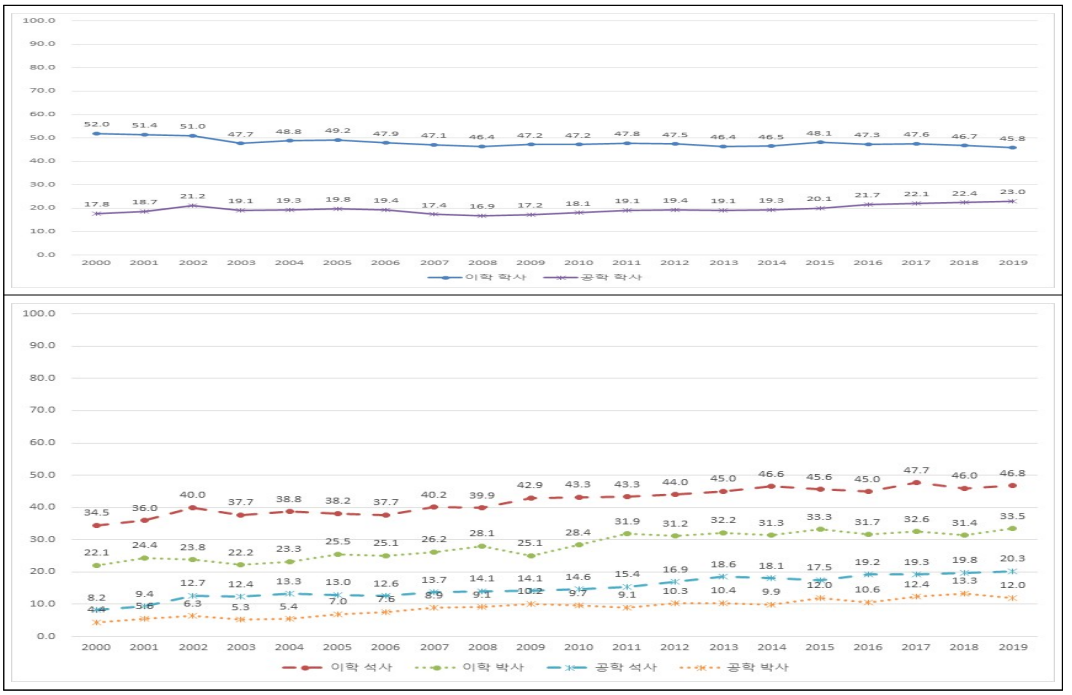
주: 2003~2005년, 2006~2008년은 표준직업분류 5차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지만 직업 분류 제공 단위가 상이하여 시계열상 연결되는 수치는 아니고, 2009~2017년은 6차 직업분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2009년 이전 추이와 단절이 존재함.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2003~2017)」 원자료 분석; 최세림·정세은(2019), 『성별 직종분리와 임금격차 현황 및 임금공개의 기대효과』 pp. 14~15에서 재인용.

[그림 3-17] 던칸 지수 추이(2003~2017년)

노동시장의 성별 직종분리 현상은 고등교육단계에서 성별 전공 차이와 무관하지 않다.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matics) 전공자를 보면, 이학 분야 학사 졸업자 중 여학생의 비율은 2000년 52.0%에서 2019년 45.8%로 6.2%p 감소하고, 공학 학사 중 여학생의 비율이 17.8%에서 23.0%로 5.2%p 증가했다. 고급인력인 석박사 학위자 중 여성 비율을 보면, 이학 분야 석사는 2000년 34.5%에서 2019년 46.8%로 12.3%p, 박사는 22.1%에서 2019년 33.5%로 11.4%p 증가했다. 학사 학위자 중 여성 비율보다 석박사 학위자 중 여성의 비율이 증가 폭이 더 크다. 공학 분야는 석사가 2000년 8.2%에서 2019년 20.3%로 12.1%p, 박사는 4.4%에서 12.0%로 7.6%p 증가하여 이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학사학위자보다 더 크게 증가했다. 공학 분야 학사 및 석박사 학위자는 여성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학 학사 및 공학 석박사에서 여성의 비중은 여전히 낮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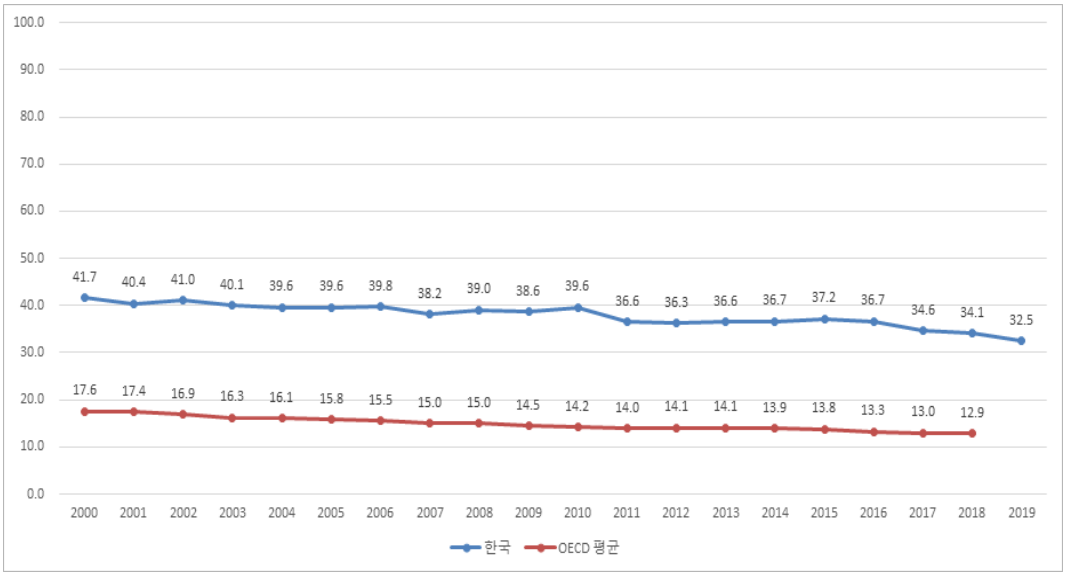
주: 졸업자 기준임. 이학은 생물, 화학, 환경, 수학, 물리, 천문, 지리 전공만 포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그림 3-18] 이공계 전공자 중 여성 비율(2000~2019년)

3 고용의 질

성별 임금 격차는 사회 전반의 성 불평등 수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단순히 같은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 출산, 육아 등 여성에게 부과된 역할로 인한 경력단절, 고용상 성차별, 성별 직종분리, 여성 집중 직종의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 등 사회 전반에 구조화된 다차원적 불평등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2000년 41.7%이던 성별임금격차는 2010년 39.6%, 2019년 32.5%로 지난 20년간 약 9.2%p 감소했지만, 여전히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70%에 미치지 못한다. 2018년 기준 OECD 국가의 성별 임금격차 평균이 12.9%인데 반해, 한국은 34.1%로 두 배 이상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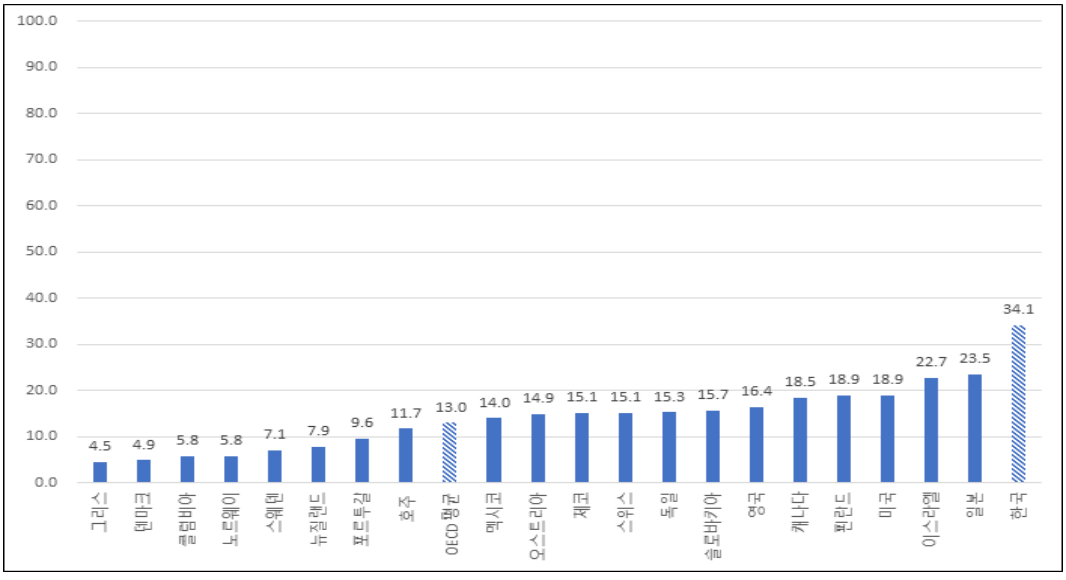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 Stat, https://stats.oecd.org/, (최종 검색일: 2020. 12. 1.).

[그림 3-19] 성별 임금격차(2000~2019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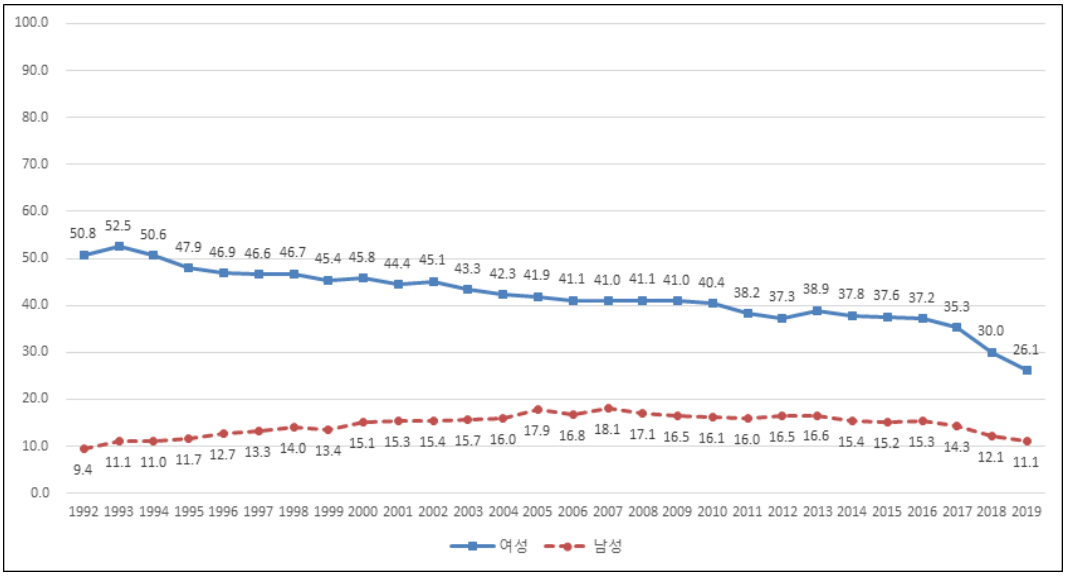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 https://stats.oecd.org/, (최종 검색일: 2020. 12. 1.).

[그림 3-20] OECD 국가 성별 임금격차(2018년)

여성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는 1992년 50.8%로 절반을 차지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26.1%를 차지한다. 남성 중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1992년 9.4%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약 10%p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돌아서서 2019년 11.1%를 차지한다. 2018년도에 여성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여성 중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을 낮춘 것으로 해석한다. 이처럼 최근 여성 중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 및 성별 격차도 감소했으나, 한국은 여전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이는 여성 중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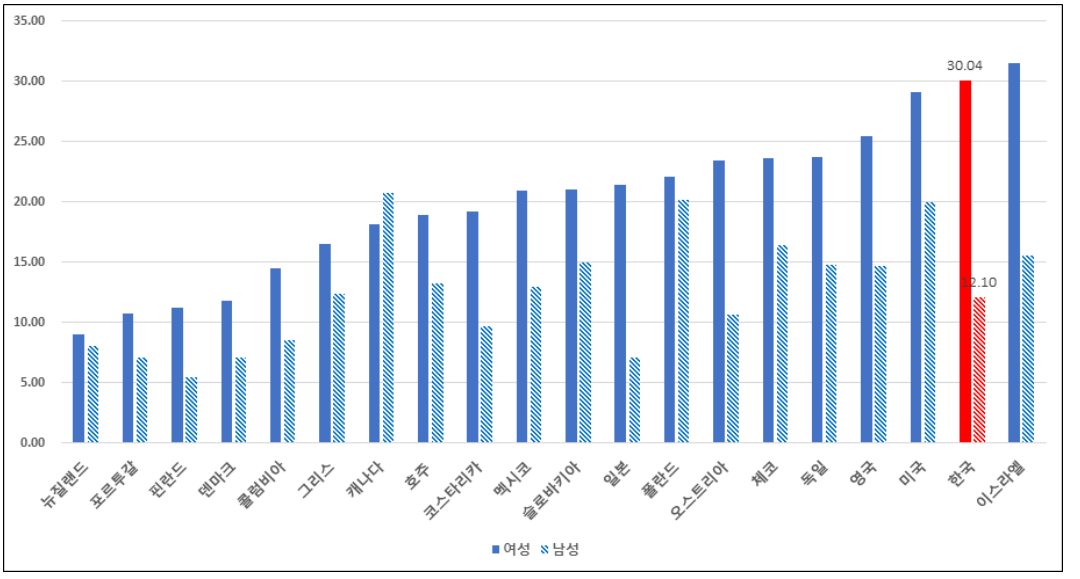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 Stat, http://stats.oecd.org, (최종 검색일: 2020. 7. 7.).

[그림 3-21] 성별 저임금 근로자 비중(1992~2019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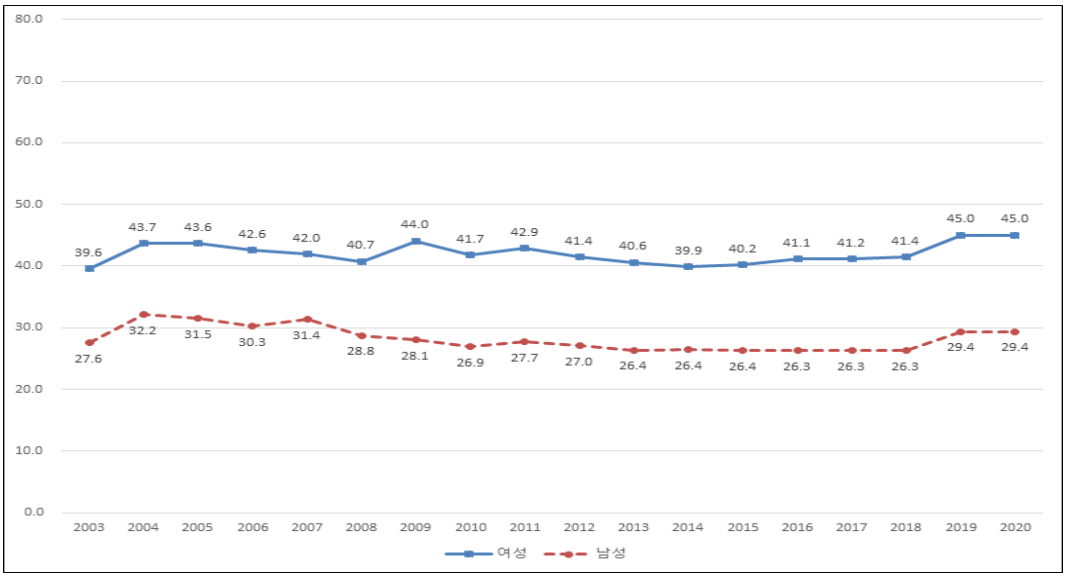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 http://stats.oecd.org, (최종 검색일: 2020. 8. 27.).

[그림 3-22] OECD 국가 성별 저임금 근로자 비중(2018년)

전체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03년 39.6%에서 2000년대 후반 소폭 증가(2009년, 44.0%)했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 45.0%로 정점을 찍었다. 남성 비정규직 비율은 2003년 27.6%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까지 26.3%였다가 2019년 29.4%로 소폭 상승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임금근로자 중 남성 비정규직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나,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큰 변화가 없다. 2000년대 중반 남성 비율의 증가 폭이 여성에 비해 높아 성별 격차가 감소했으나 2000년대 후반 이후 격차가 다소 증가하여 2020년 현재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에 비해 15.6%p 높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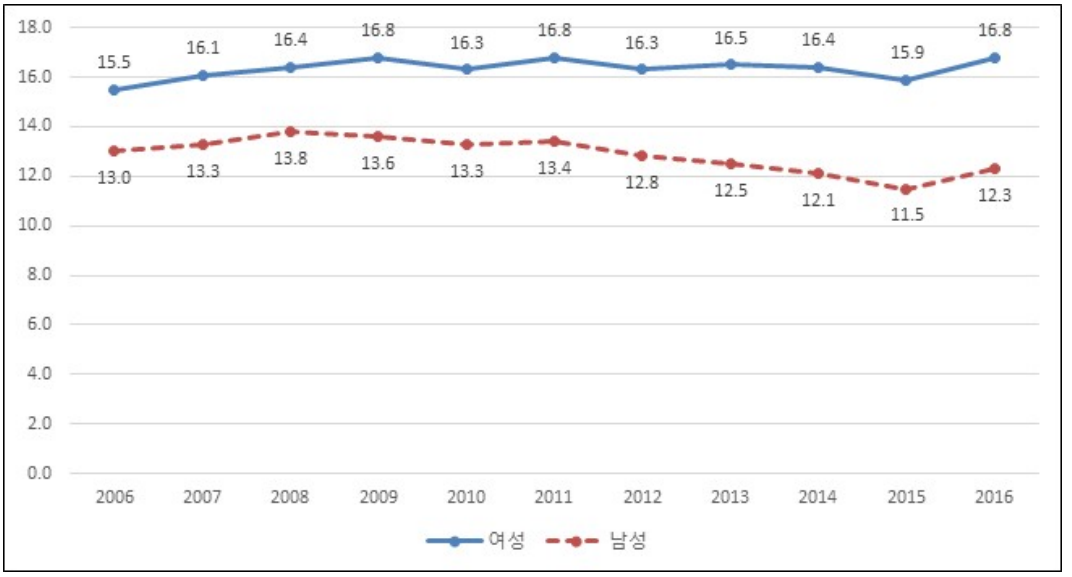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년도 8월.

[그림 3-23] 성별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중(2003~2020년)

4 성별 소득 격차

지난 10여 년간 성별 소득 격차는 계속 늘어났다. 가처분 소득 중위 50%에 대한 상대 빈곤율을 살펴보면, 2006년 여성 15.5%, 남성 13.0%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2.5%p 높았고, 2016년 여성 16.8%, 남성 12.3%로 4.5%p 더 높아졌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2006년 28.7%에서 2016년에는 37.9%로 9.2%p 증가했다. 이는 16.3%에서 20.3%로 증가한 전체 가구 빈곤율 증가 폭보다 2배 이상 높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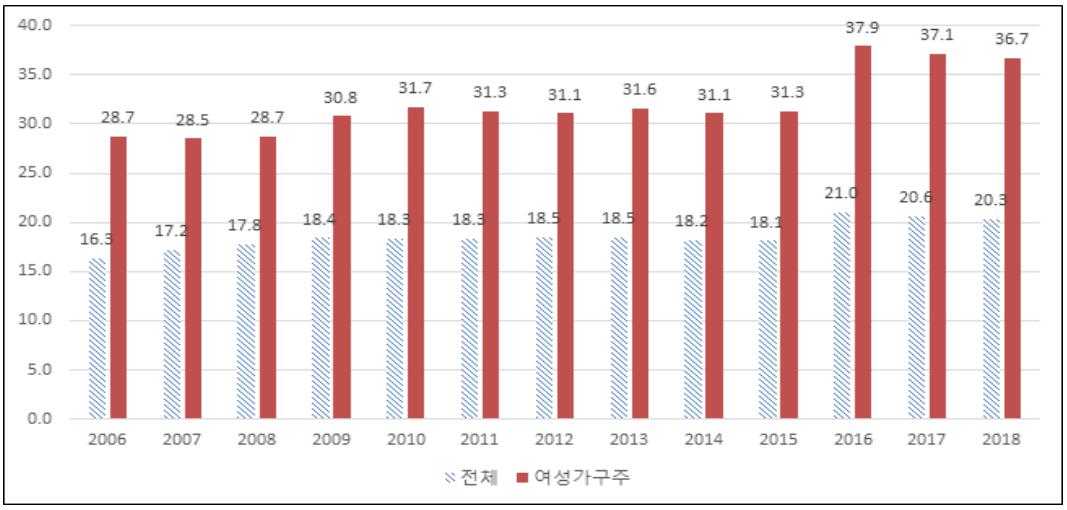
주: 가구원의 개인 성별을 기준으로 집계함.

자료: 통계청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6E003&vw_cd=MT_ZTITLE&list_id=G_A3&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최종 검색일: 2020. 8. 4.).

[그림 3-24] 성별 상대 빈곤율(2006~2016년)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기본적 공적보험제도이지만 낮은 고용률과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비율이 높다. 2000년 18세 이상 60세 미만 여성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21.9%에 불과했는데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현재 가입대상 여성인구의 54.7%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다. 성별 격차는 지난 20여 년간 많이 줄었는데, 2000년 33.1%p이던 가입률 성별 차이는 2019년 기준, 8.9%p까지 줄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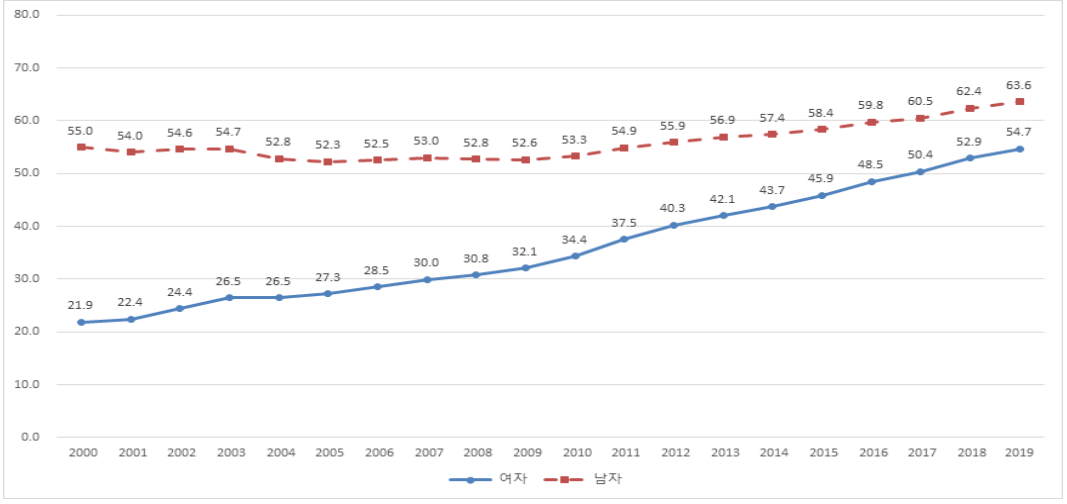


주: 여성가구주 가구의 가구원 중 빈곤선 아래에 있는 가구원의 비율임.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GSIS) DB. https://gsis.kwdi.re.kr/gsis/kr/stat/StatDetail. html, (최종 검색일: 2020. 8. 18.).

[그림 3-25]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율 추이(2006~2018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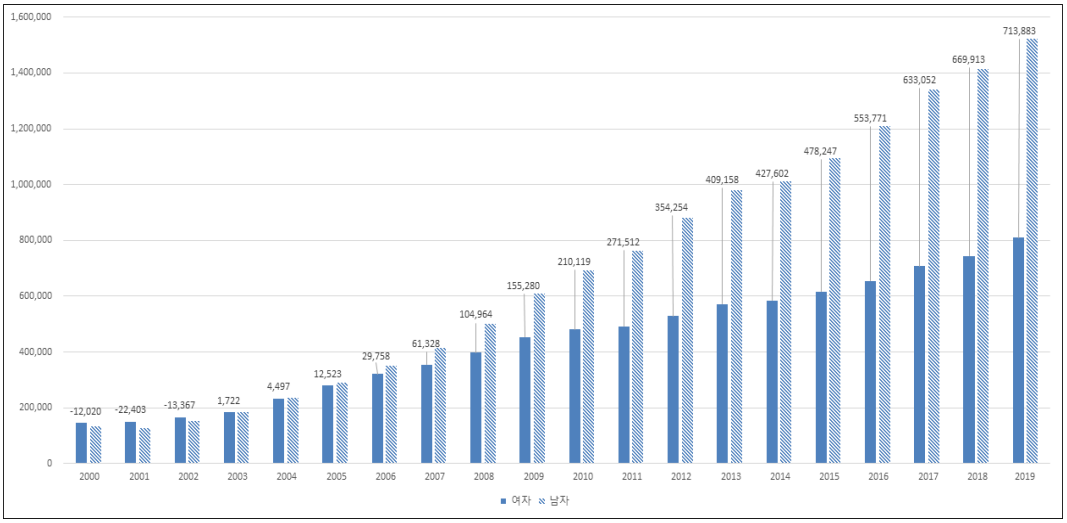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 1B040M1&conn_path=I2, (18세 이상 60세 미만 인구); 통계청 KOSIS, https://bit.ly/3f1PXZj(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최종 검색일: 2020. 12. 12.).

[그림 3-26] 성별 국민연금 가입률(1990~2019년)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성별 수급액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2000년 초반까지 큰 차이가 없던 수급자 1인당 평균 수급액은 2010년 210,119원, 2015년 478,247원, 2019년 713,883원으로 지속적으로 성별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소득 보장으로서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단위: 원, %)



자료: 통계청 KOSIS,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ZTITLE&parmTabId=M_01_01&statId=2008001&themaId=A#SelectStatsBoxDiv, (최종 검색일: 2020. 12. 12.).

[그림 3-27] 성별 국민연금 수급액 및 여성 수급액 비중(2000~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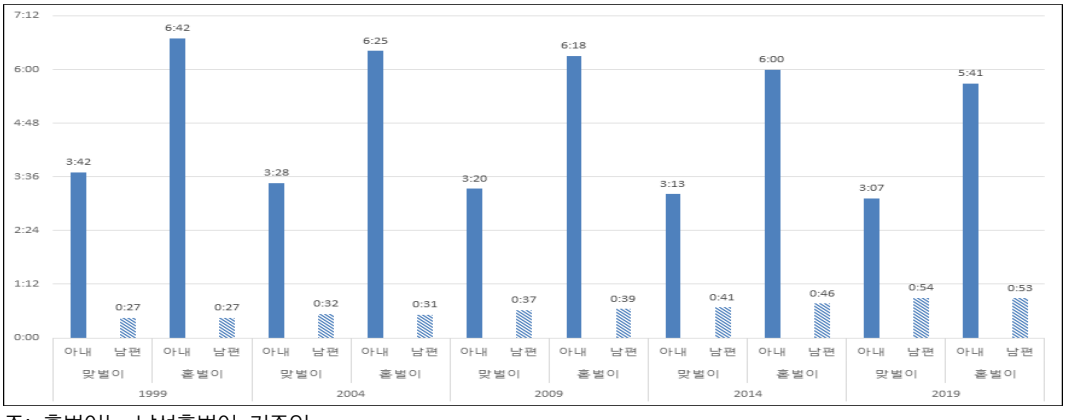
제3절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1 무급노동 시간

1999년 맞벌이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은 27분,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은 3시간 42분(남편의 8.2배), 2019년에는 남편 54분, 아내 3시간 7분(남편의 3.5배)으로 부부 간 가사노동 시간의 차이를 3시간 15분에서 2시간 13분으로 좁히긴 했으나, 역할의 공평한 분담과 책임이라는 근본적인 변화까지는 이루어내지 못했다.

한국 무급노동시간의 성별 격차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 평균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은 4.4시간, 남성은 2.3시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9배 더 높다. 반면, 한국은 여성 3.6시간, 남성 0.8시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4.5배 더 긴 시간을 무급노동에 할애하고 있다. 한국 남성의 무급노동 시간은 일본(0.7시간) 다음으로 가장 적은 시간(0.8시간)이다.

(단위: 시간,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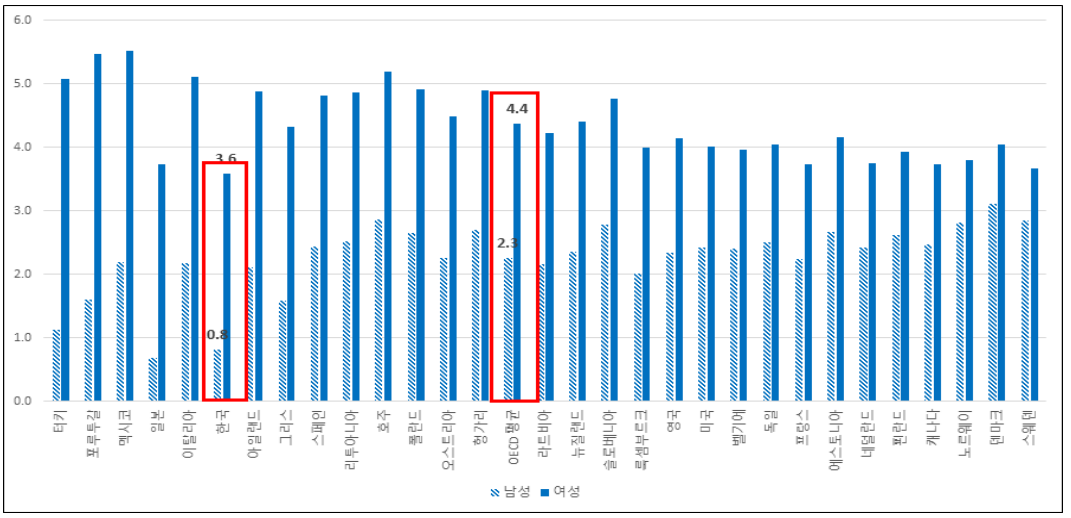


주: 홑벌이는 남성홑벌이 기준임.

자료: 통계청 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019_058_ 1TM1A81X&conn_path=I2, (최종 검색일: 2020. 12. 11.).

[그림 3-28] 맞벌이-홑벌이 부부 가사노동 시간(1999~2019년)

(단위: 시간)



자료: OECD stat, http://stats.oecd.org, (최종 검색일: 2020. 8.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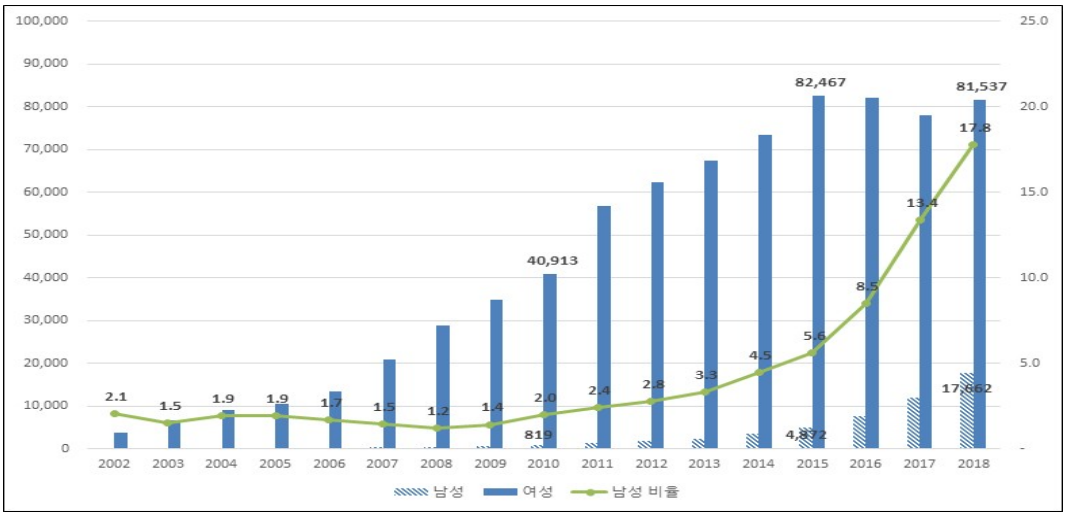
[그림 3-29] OECD 국가 성별 무급노동 시간

2 육아휴직 사용

나. 육아휴직 참여율 및 이용 일수

지난 20년간 육아휴직 제도의 적용 범위와 급여 수준이 늘어나면서 육아휴직 이용자 수와 남성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육아휴직 이용자는 2002년 3,685명에서 2018년 8만 1,543명으로 22배 증가했고, 이 중 남성은 2.1%에서 27.8%로 증가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 자격을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확대하고 급여 수준이 통상임금의 40%로 증가한 2011년 이후 이용자가 크게 증가했고,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 확대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제도를 도입한 이후 남성의 이용률이 증가했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여성이 2009년 9.1개월에서 2018년 10.2개월로 약 1.1개월 증가했고, 같은 기간 남성은 7.0개월에서 7.3개월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육아휴직 이용자 중 남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나,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아이슬란드(45.2%), 스웨덴(45.3%), 포르투갈(44.8%), 노르웨이(39.2%)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2016년 기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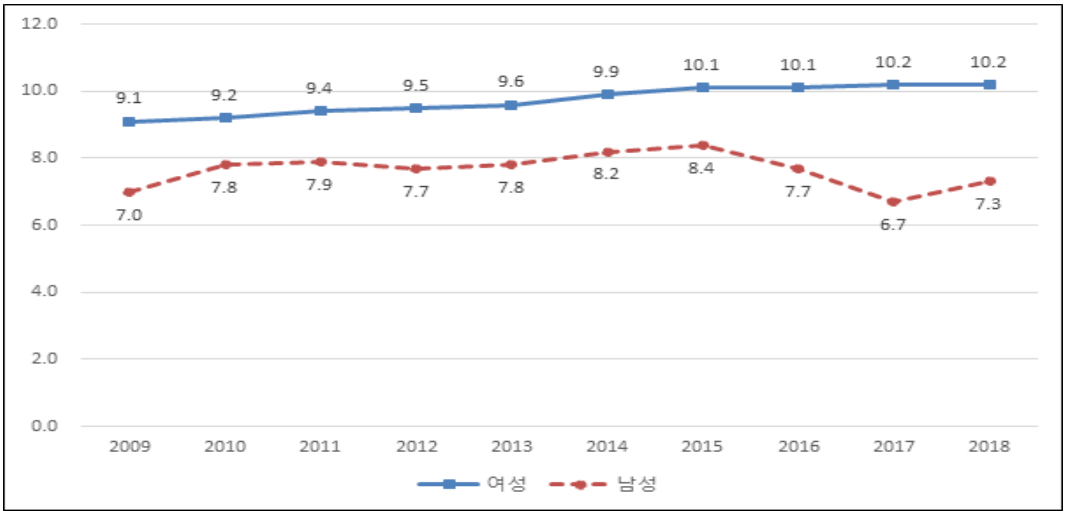
(단위: 명,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 각년도(2002~2016);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2017~2018).

[그림 3-30] 성별 육아휴직자 수 변화 추이 및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2002~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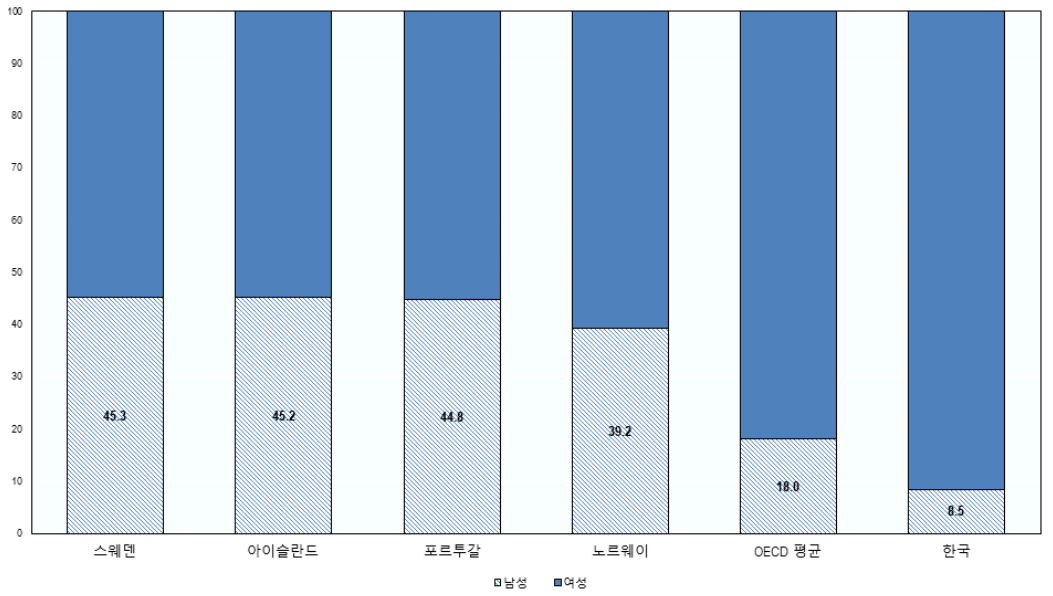
(단위: 개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9), 「육아지원 재정사업의 특성 분석 및 재정소요 전망」, p.18.

[그림 3-31] 성별 육아휴직 이용 일수(2009~2018년)

(단위: %)



자료: OECD data,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최종 검색일: 2020. 1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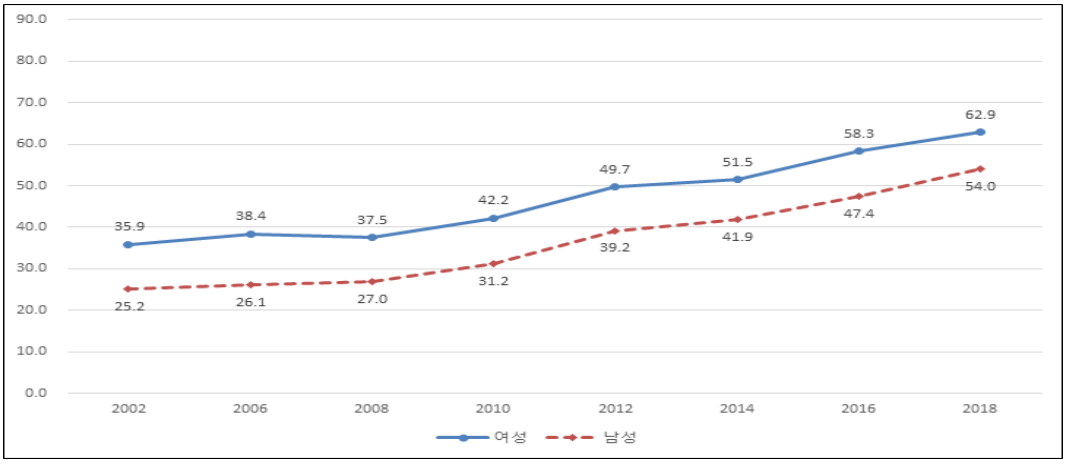
[그림 3-32] OECD 국가 남성 육아휴직 비율(2016년)

제4절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1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가사 분담을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은 지난 20년간 계속 높아졌다. 2002년 여성 중 35.9%, 남성 중 25.2%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데 비해 2018년에는 각각 62.9%, 54.0%로 증가했다. 다른 한편 여성이 가정일에 관계없이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고 인식하는 인구의 비율 역시 계속해서 증가했다. 1998년 여성 중 30.4%, 남성 중 23.1%가 이에 응답했으나, 2019년에는 각각 62.5%, 60.3%로 증가했다. 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의 성별 격차가 2.2%p인데 비해 아내와 남편의 공평한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의 성별 격차가 2018년 8.9%p로 나타난 것은 실제 가사노동 시간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가정일과 상관없는 여성의 취업 활동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비슷하게 인식을 하지만, 가사 분담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남성은 여성에 비해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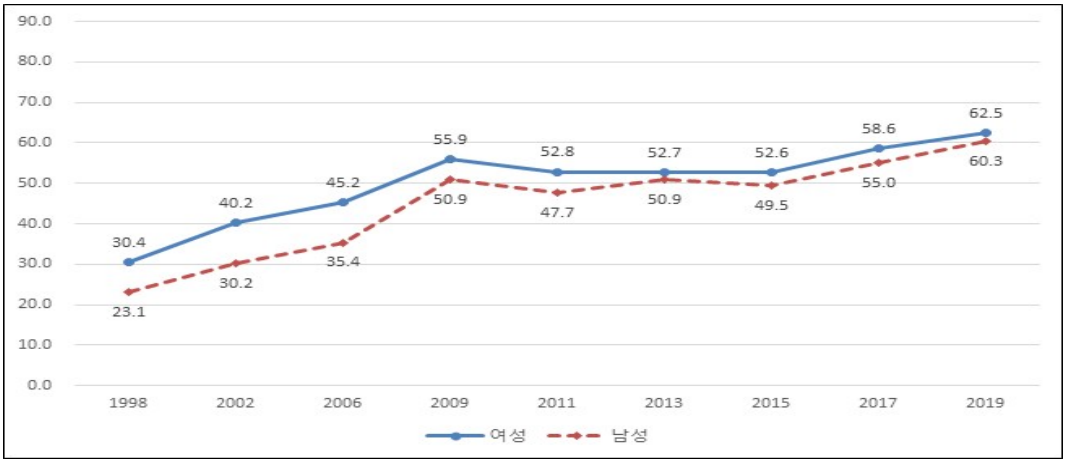


주: '가사 분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 값임.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GSIS) DB.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XB5001&vw_cd=undefined&list_id=undefined&scrId=&seqNo=&language=ko&obj_var_id=undefined&itm_id=undefined&conn_path=I2&path=#, (최종 검색일: 2020. 7. 20.).

[그림 3-33]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2002~2018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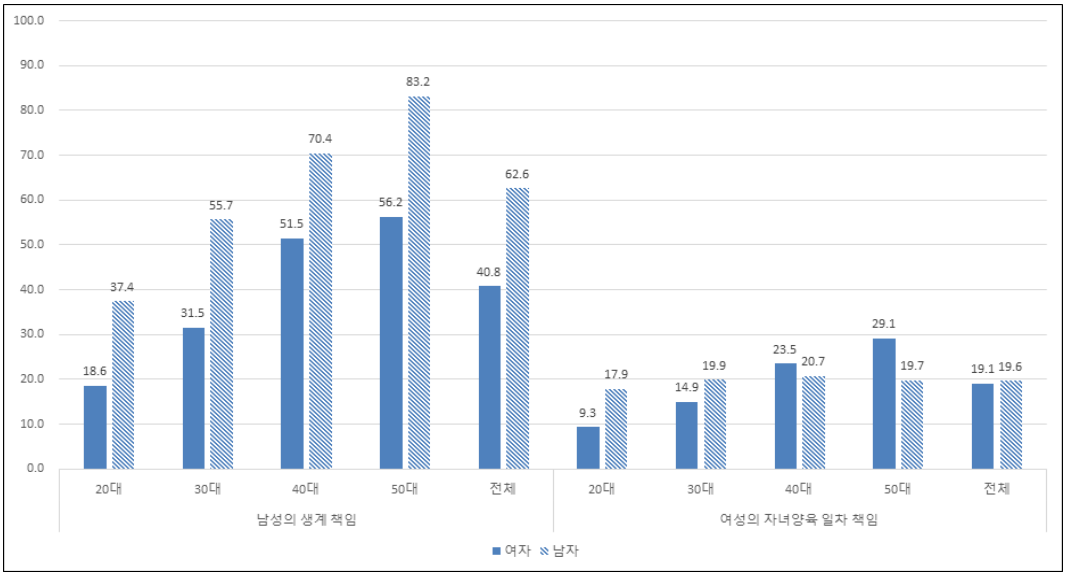
주: '여성 취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가정일에 관계없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응답 값임.

자료: 통계청 KOSIS,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W4A 03&vw_cd=undefined&list_id=undefined&scrId=&seqNo=&language=ko&obj_var_id=undefined&itm_id=undefined&conn_path=I2&path=, (최종 검색일: 2020. 12. 12.).

[그림 3-34]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1998~2019년)

시계열적 조사는 아니지만, 남성의 생계 책임과 여성의 자녀양육 책임에 대한 연령대별 성역할 규범에 대한 동의 정도의 차이를 통해 향후 변화의 속도를 유추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성역할 규범에 대한 동의 정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약화하고 있으나 남성적 성역할 규범(남성 생계부양자)에 대한 태도의 변화 속도가 여성적 역할 규범(여성 양육자)에 대한 태도의 변화 속도에 비해 더디고, 성별 차이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단위: %)



주: '가족의 생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남성에게 있다(좌)',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우)' 문항의 '대체로 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한다'의 응답을 합한 값임.

자료: 마경희 외(2020). 『청년관점의 '젠더갈등' 진단과 포용국가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원자료 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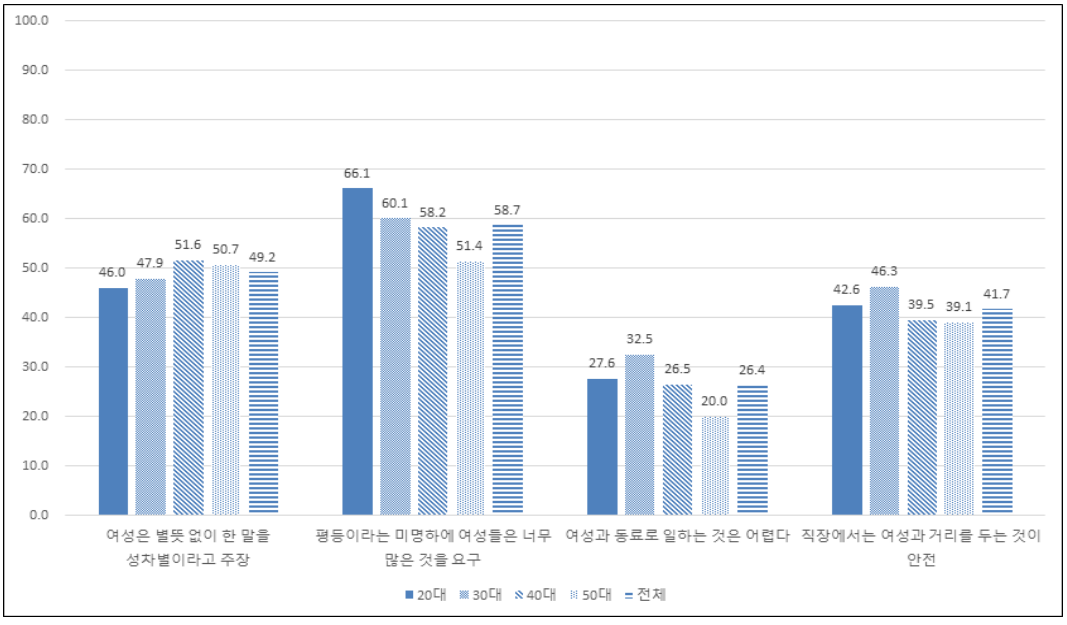
[그림 3-35] 성별 연령별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2019년)

남성의 생계 책임에 대해 20대 여성은 18.6%만 동의하는 반면, 20대 남성은 37.4%가 동의하고 있다. 물론 20대 남성의 동의 수준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30대 55.7%, 40대 70.4%, 50대 83.2%) 20대 여성의 인식이 다른 연령 여성의 인식과 비교해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남성의 변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자녀 양육 책임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성의 생계 책임에 대한 동의 정도보다 낮다. 이 역시 20대 여성의 동의 정도가 가장 낮은데(9.3%), 20대 남성의 17.9%가 동의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2 성차별주의 의식

성 불평등한 사회질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남성적 권위와 영역, 안정적 지위를 위협하는 것(마경희 외, 2018b: 39)”으로 인식하는 성차별주의(sexism)는 여성에 대한 비난, 혐오 등에 기반해 현재의 성 불평등한 체계를 유지하는 기제가 된다(Glick and Fiske, 2001; 마경희 외, 2018b에서 재인용). 남성의 성차별주의 의식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특히 2030 청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여성들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남성이 20대 66.1%, 30대 60.1%이며, 40대와 50대가 각각 58.2%, 51.4%이다. ‘여성은 별 뜻 없이 한 말을 성차별이라고 주장한다’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50% 내외이고, ‘직장에서는 여성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문항에 대해 20대와 30대가 각각 42.6%, 46.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다. 상대적으로 ‘여성과 동료로 일하는 것은 어렵다’는 문항은 낮은 동의 수준을 보이는데, 이 중 30대(32.5%)가 가장 높다.

(단위: %)



주: ‘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한다’의 응답을 합한 값임.

자료: 마경희 외(2018b). 『성 불평등과 남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원자료 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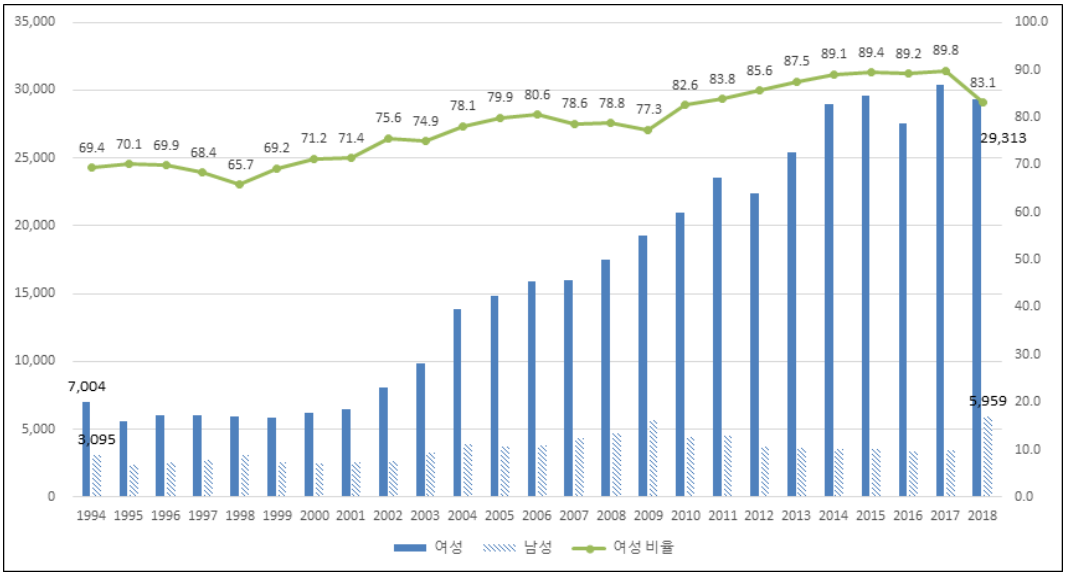
[그림 3-36] 남성 연령별 성차별주의 의식(2018년)

제5절 젠더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1 강력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강간) 등 여성이 피해자인 강력범죄는 1994년 7,004건에서 2018년 2만 9,313건으로 15년간 4.2배 증가했다.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의 비율은 1994년 69.4%에서 2017년 89.8%까지 상승했다가 2018년 83.1%로 소폭 감소했다. 강력범죄 피해자 10명 중 8명이 여성인 현실이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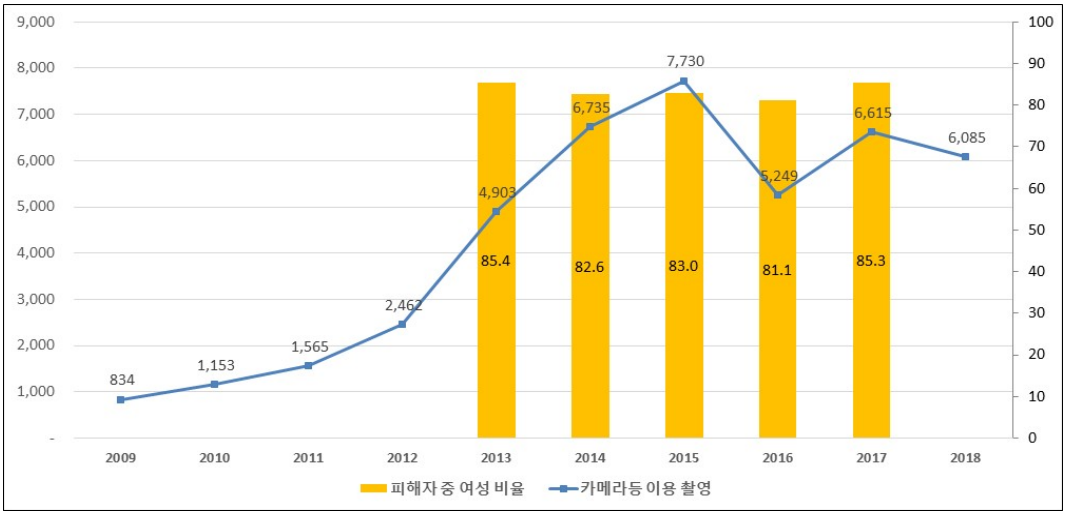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그림 3-37]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1994~2018년)

최근 디지털 관련 성범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009년 834건에서 2018년

6,085건으로 10년간 약 7.3배 증가했다. 특히 전체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대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발생비율은 4.8%(2009년)에서 19.0%(2018년)로 약 4배 상승했다. 동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도 2009년 761건에서 2018년 1,37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 피해자 중 여성의 비율이 2013년 85.4%, 2017년 85.3%로 압도적으로 높다.

(단위: 건, %)



자료: 대검찰청(2018) ,『2019 범죄분석』, p.15(카메라등이용촬영 발생 건수); 경찰청(2018.12.20.),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32&q_bbscttSn=1B00000 6152020000&q_tab=&q_searchKeyTy=sj___1002&q_searchVal=%EC%B9%B4%EB%A9%94%E B%9D%BC&q_rowPerPage=10&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피해자 중 여성 비율), (최종 검색일: 2020. 8.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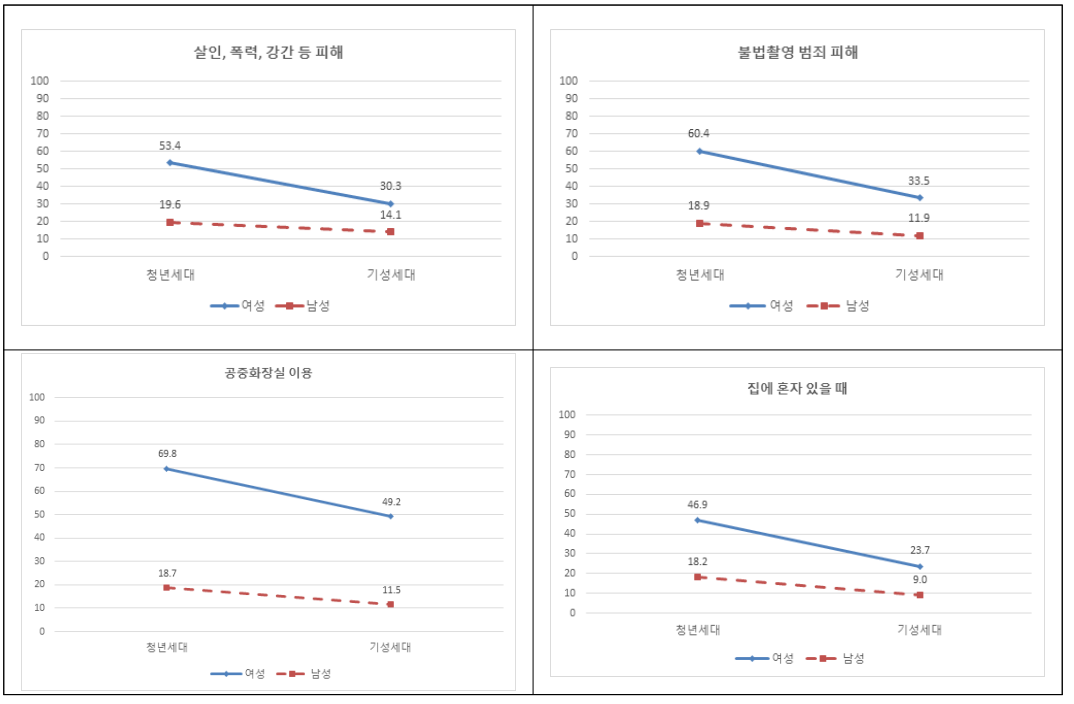
[그림 3-38] 카메라 이용 촬영 음란죄 신고 건수 및 여성 피해자 비율(2009~2018년)

2 일상생활에서의 범죄 피해 불안

여성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안이 매우 높고, 특히 청년세대 여성(19~34세)의 불안이 높은 수준이다. 최근 공중화장실 등과 같은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불법촬영 피해 등이 청년세대 여성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더욱 민감하게 만드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살인, 폭력, 강간 등 강력범죄의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정도는 청년세대 여성 중 53.4%, 기성세대 여성 중 30.3%로 나타나고 있다. 강력범죄 피해자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공중화장실 이용할 때 불안하다고 느끼는 정도와 불법촬영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 특히 청년세대 여성 중 69.8%가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청년세대 남성은 다른 불안과 비슷한 수준인 18.7%로 응답해 성별 격차가 51.1%p로 가장 크게 발생했다. 심지어 청년세대 여성의 46.9%는 집에 혼자 있을 때에도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해 화장실, 집 등 일상적 삶의 공간이 여성에게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

(단위: %)



자료: 마경희 외(2020). 『청년관점의 '젠더갈등' 진단과 포용국가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p. 75.

[그림 3-39] 성별 세대별 일상생활에서의 불안(2019)

제4장

성평등의 현주소와 2040년 미래 전망: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제1절 전문가 델파이 조사 질문지의 구성

제2절 2020년 현재 성평등 진단

제3절 거시환경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제4절 2040년 미래 성평등 전망

제5절 2040년 달성가능한 성평등 목표

제1절 전문가 델파이 조사 질문지의 구성

1 2020년 현재 성평등 진단

성평등은 추상적, 종합적 개념으로 특정 지표들을 통해 계량적으로 측정하기에 적절한 개념은 아니다.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조작화 과정에 적절한 지표를 선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치지향적 개념으로서 기대 수준에 따라 수치로 평가할 때에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수준에 대한 계량화된 수치는 직관적으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시도해볼 만하다. 이 연구에서는 2020년 현재 한국 사회 성평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젠더 이론에 대한 전문성에 기반한 전문가의 직관을 활용하여 평가했다. 성 평등한 상태에 대한 전문가 기대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의 사전작업으로 진행한 성평등 영역별로 지난 20~30년 동안의 성평등 추이와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OECD 국가의 최근 통계자료를 정리하여 응답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앞서 3장에서 개괄한 5개 영역별 하위 지표로서 참고자료를 제시한 후 이를 종합하여 영역별로 점수를 매기도록 했다. 이때 0점=완전 불평등, 100점=완전 성평등을 기준으로 1~10점 매우 낮음, 10~30점 낮음, 30~50점 약간 낮음, 50~70점 약간 높음, 70~90점 높음, 90~99점 매우 높음의 성평등 척도를 제시하였다. 영역별 점수를 매긴 후 점수 산출의 근거를 개방형으로 응답하도록 했다.

1차 조사 후 전문가들이 제시한 분야별 성평등 수준 점수를 취합하여 평균값, 최댓값, 최솟값 및 개별 의견을 영역별로 정리하였다. 정리된 1단계 1차 조사의 결과를 1단계 2차 조사에서 다시 한번 제시하고 다른 전문가들의 점수와 의견을 참조하여 기존의 본인 점수와 개별 의견을 수정하거나 추가적으로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현재 한국 사회 성평등 수준에 대한 계량적 점수는 1단계 2차 조사의 수정 점수를 바탕으로 분석하였고, 개별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한 자유 서술은 1차 및 2차 조사의 결과를 통합하여 활용하였다.

2 거시환경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미래 한국 사회 성평등 수준의 변화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변화와 연관한 거시환경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연구에서 많이 활용하는 STEEP(Social, Technological, Economic, Ecological, Political) 분류체계에 근거하여 영역별 성평등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환경 변화를 스캐닝한 후, 연구진의 브레인스토밍 과정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저출산, 고령화, 가족의 변화,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생명공학·의료기술의 발전, 저성장의 장기화와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 기후변화와 재난, 전통적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페미니즘의 대중화, 사회적 소수자 정치 활성화의 총 11가지 거시환경 변화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후 각각의 거시적 환경 변화 요인들의 추이와 전망을 정리한 설명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거시적 환경 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거시적 환경 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3단계를 거쳐 측정하였다. 먼저 거시환경 변화가 기존의 성평등 문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다. 기존의 성 불평등 문제란, 앞서 언급한 공적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영향력,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무급 돌봄노동의 평등 분배와 가치평가, 성차별적 규범과 관행의 해소, 젠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중요하게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젠더 이슈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거시환경 변화 요인들이 2040년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계량적으로 측정하였다. 영향 없음(현재와 같음)을 기준값 0에 두고 현재의 성 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인식하면 음(-)의 값에, 성평등 수준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양(+)의 값에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겨줄 것을 요청하였다.

거시적 환경 변화의 영향은 델파이 1단계 조사의 일부로 포함되어 총 2차례에 걸쳐 측정하였다. 1차 응답의 결과를 2차 조사 때 다시 한 번 제시하고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과 평균 점수를 참조하여 기존의 의견과 응답값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량적 점수는 1단계 2차 조사의 수정 점수를 바탕으로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전망에 대한 분석은 1차 및 2차 조사의 결과를 통합하여 활용하였다. 이에 덧붙여

조사 결과를 보다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 전문가들의 설문지 답변에 대한 키워드 분석을 했다.

3 2040년 미래 성평등 전망

2040년 미래 한국 사회 성평등 수준에 대한 전망은 2단계 델파이 조사를 통해 조사되었다. 조사 단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1단계 델파이 조사에서 도출한 거시환경의 변화가 2040년 미래의 성평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성평등의 영역별로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으로 구분하여 재구조화하였다. 이를 전문가들에게 제시한 후 이러한 거시환경 변화의 효과를 고려할 때, 2040년 미래의 성평등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를 영역별로 점수를 매기도록 했다. 이때 2040년 예상되는 성평등 수준이란 특별한 정책적 대응을 하지 않거나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정책을 유지할 때 2040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성평등 수준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국가가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때 달성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러한 목표치 달성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정책과제를 개방형으로 질문했다.

2040년 예상되는 성평등 수준과 달성가능한 목표치는 1단계 조사와 동일하게 0점=완전 불평등, 100점=완전 성평등을 기준으로 1~10점 매우 낮음, 10~30점 낮음, 30~50점 약간 낮음, 50~70점 약간 높음, 70~90점 높음, 90~99점 매우 높음으로 제시하였다.

제2절 2020년 현재 성평등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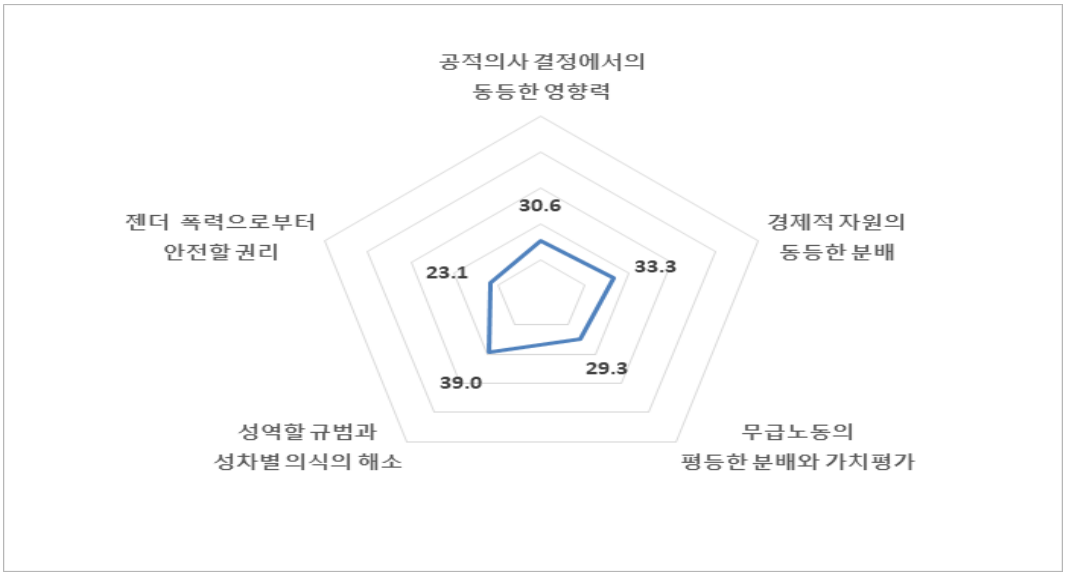
1 2020년 성평등 수준 평가

성평등 수준은 추상적, 종합적 개념으로 특정 지표들을 통해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매우 어렵다. 이러한 난제를 돌파하기 위하여 본 연구진은 방법론적으로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에 기반하는 델파이 조사법을 활용하였고, 계량적, 정성적 질문을 혼합한 설문지를 개발하여 성평등 수준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했다.

5개 성평등 분야 전체에 대한 전문가 패널 평균값은 31.1점으로 나타났다. 10점 이상~30점 미만 '낮음', 30점 이상~50점 미만 '약간 낮음'으로 설정된 측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약간 낮음'에 해당하는 점수이기는 하지만 '낮음'과의 경계에 있는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젠더 전문가들은 2020년 한국 사회 성평등 수준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영역 평균 점수를 보면,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가 39.0점으로 가장 높았다. 여성=가사·양육자, 남성=생계부양자라는 성역할 분업에 대한 태도가 적어도 의식의 수준에서는 점차적으로 약화하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23.1점으로 가장 낮았다. 지난 2~3년 사이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젠더 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증폭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 밖에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가 33.3점, '공적 의사결정에서의 동등한 영향력' 30.6점,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평가'가 29.4점으로 나타났다.

(단위: 점)



[그림 4-1] 2020년 현재 한국 사회 성평등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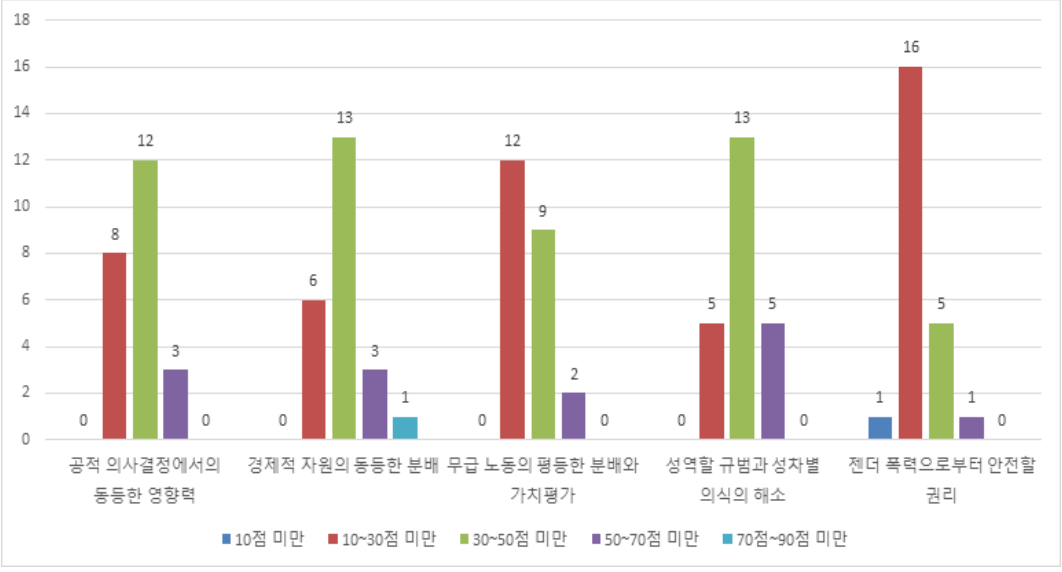
영역별 전문가 응답 점수의 값의 분포를 보면 아래의 〈표 4-1〉과 같다.

〈표 4-1〉 2020년 현재 한국 사회 성평등 점수 분포

		공적 의사 결정에서 동등한 영향력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평균(점)		30.6	33.3	29.4	39.0	23.1
최빈값(점)		30	30	20	40	20
최댓값(점)		60	70	50	65	50
최솟값(점)		10	15	20	20	5
범위(점)		50	55	30	45	45
구간별 빈도 (명)	10점 미만	0	0	0	0	1
	10점~30점 미만	8	6	12	5	16
	30점~50점 미만	12	13	9	13	5
	50점~69점 미만	3	3	2	5	1
	70점~90점 미만	0	1	0	0	0

‘공적 의사결정에서의 동등한 영향력’에 대한 평가 점수의 최빈값은 30점으로 9명의 전문가가 이에 응답했으며 값의 범위는 최대 60점(1명), 최소 10점(1명)이다. 10점~30점 미만으로 응답한 전문가가 8명으로 50점~70점 미만으로 응답한 전문가(3명)보다 더 많다.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의 최빈값은 30점으로 10명이 이에 응답했으며 가장 높은 점수는 70점(1명), 가장 낮은 점수는 15점(1명)이다. 10점~30점 미만으로 평가한 전문가는 6명으로 50점~70점 미만(3명), 70점~90점 미만(1명)으로 평가한 전문가보다 많다.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 평가’의 최빈값은 20점으로 10명의 전문가가 이에 응답했으며, 가장 높은 점수는 50점(2명)으로 50점~70점 미만으로 평가한 전문가는 2명이다.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는 최빈값이 40점으로 7명의 전문가가 이에 응답했고, 최대 65점(1명), 최소 20점(1명)이다. 5명이 10점~30점 미만으로 평가했고, 5명은 50점~70점 미만으로 평가했다.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의 최빈값은 20점으로 7명의 전문가가 이에 응답했으며 최대 50점, 최소 5점이었다. 30점~50점 미만 사이의 평가는 5명, 50점~70점 미만의 평가는 1명이었다.

(단위: 명)



[그림 4-2] 영역별 성평등 수준 구간별 빈도

2 영역별 성평등 수준 평가의 논거

현재 한국 사회 성평등 수준의 정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성평등 수준의 평균적 수준을 수치화하여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전문가들이 어떠한 근거와 인식을 토대로 그러한 점수를 제시하였는지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지 못한다. 본 절에서는 전문가들의 영역별 평가 점수 산출 근거에 대한 개방형 응답에 기초하여 평가의 논거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가. 공적 의사결정에서의 동등한 영향력

1) 30% 임계치에 미달하는 기술적 대표성(descriptive representation)[20]

국회의원, 장관, 3~4급 이상 공무원, 교장·교감 등 정치, 행정, 교육 등 영역에서 고위직 여성 비율이 지난 20~30년간 증가하였고, 의사결정에서 여성 대표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규범적 압력이 형성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 확대, 국·공립 대학 여성 교수 임용 확대,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계획 등 1990년대 후반부터 전개했고 최근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으로 체계화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강화 정책의 효과로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임계치로 알려진 30% 수준(Childs and Krook, 2008: 727)에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OECD 국가들과의 비교에서 한국의 성 불평등은 더욱 크게 드러나는데, 거의 모든 지표에서 여성 대표성 관련 순위가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낮은 평가의 논거였다.

국회, 중앙정부, 학교, 사법 조직 등 질문지 조사를 위해 제시한 지표 이외에도 공공기관, 지방정부 및 의회, 기업 등의 사회 다양한 영역의 의사결정직에서 여성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은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와 여성에 대한 차별에 기반한 유리천장이 견고

20) 젠더 정치 연구자들은 정치적 대표성을 기술적 대표성(descriptive representation)과 실질적 대표성(substantial representation)으로 구분해 왔다. 기술적 대표성이 양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비율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실질적 대표성은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성평등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게 존재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여성의 의사결정직 진출을 제한하는 유리천장은 민간부문에서 보다 강력하다. 공공부문의 경우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지만, 오랫동안 법·제도를 통해 유리천장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으나,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수단은 거의 진전하지 못한 결과이다.

2) 낮은 수준의 실질적 대표성(substantial representation)

임계치에 이르지 못한 낮은 양적 대표성 문제와 함께, 전문가들은 실질적 대표성 측면에도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법, 제도, 정책의 도입으로 여성 비율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였으나, 의사결정직에 진출한 여성들로 인해 성 불평등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여성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지에 대한 회의가 적지 않았다.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는 두 가지 요인에서 기인한다. 하나는 남성 중심 조직에서 여성이 관리직으로 진출했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의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직, 교직 등에서 의사결정직에 진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 네트워크와 조직 질서가 남성중심적인 상황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으며, 성 평등한 방식으로 의사결정 구조를 변화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차별, 성평등 문제를 의제화하기 어려우며,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변화를 위한 실천단계에서 좌초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하나는 여성이 토큰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조직 내 의사결정에서 보다 많은 권한과 영향력을 가진 지위에 오르게 되더라도 성평등 이슈에 대한 실질적 책무성을 부여하기보다는 특정 영역 또는 분야의 성 평등성을 전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면 이들이 성평등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공적 의사결정 영역에 진입한 여성 수의 증가가 반드시 사회적 성평등의 확산을 촉진하는 의사결정의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따라서 공적 의사결정에서의 영향력 실현 여부를 중심으로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양적 대표성의 문제와 함께 실질적 대표성 이슈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다수 전문가들이 제시하였다. 기술적 대표성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정책의 효과성을 실질적 대표성의 측면에서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공적 의사결정 영역에서의 수평적 분리도 개선할 과제이다. 여성 대표성을 확보한 경우에도 여성 공직자를 여성적 의제들을 담당하는 역할에 배치하는 등 의사결정 내에서의 성별 분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1) 고용률의 점진적 증가, 여성 취업 분야의 확대

전문가들은 대체로 지난 20~30년간 양적인 측면에서 느리지만, 여성의 고용률이 증가해 왔고, 고소득 전문 직종으로 진출하는 여성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성별 학력격차의 감소와 남성의 단독 생계 부양이 가능하지 않은 사회구조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고 보았다. 성별 학력 격차의 감소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여 '괜찮은' 일자리로 진입할 가능성을 높이고, 가구 내 여성 소득 필요성의 증가 역시 여성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노동시장 내 여성 고용상태는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의 고학력화와 변화한 직업의식은 일부 기술집약적 분야에서의 여성의 경제적 성취 가능성을 높이는 용인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 소득을 통한 경제적 자원의 동등분배 차원에서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다.

2)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 여성 집중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에 여성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성별화된 노동시장 구조가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차원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개선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남성에 비해 높고, 이는 OECD 국가 사이에서도 가장 열악한 수준에 있다. 여성 노동자들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집중시키는 성별화된 노동시장 구조는 후기 근대 한국 노동시장 구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전체적인 여성 고용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성별 직종분리 및 임금격차 구조를 유지하고 정당화하여 성별과 계층에 따른 경제적 취약성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알려졌다.

성별화된 노동시장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성별 임금격차이다. 2017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성별 임금격차는 13.2%인데 비해 한국은 이 세배에 가까운 34.6%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한다. 성별 임금격차가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24.5%인데, 이와 비교해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서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 여성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에 놓인 여성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여성 노동자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부정적 효과를 경험하는 양상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 여파 속에서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시장에 속한 노동자들은 일차적인 해고 대상이 되는데,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 비중이 특히 높은 상황에서 그 대상은 여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성별화된 노동시장 구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부정적 효과 역시 성별화시키는 결과를 낳아, 점진적으로 개선해 온 여성 고용 지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3) 노동시장 내 성차별의 지속성

많은 전문가들은 임신,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기혼여성의 생애주기에 호의적이지 않은 노동시장 구조와 사회적 편견이 여전히 지속되는 점을 부정적 평가의 이유로 제시했다. 임신,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기반하여 관리직으로의 여성 진출을 막는 유리천장은 여전히 한국 사회 여성 노동 문제를 설명하는 주요한 키워드로 남아있다. 사회 전반에서 차별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하면서 여성 노동자에 대한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차별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으나, 암묵적으로 행사되는 간접차별은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배제하고,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경제적 자원을 획득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한편 지속되는 성역할 규범과 실천의 맥락에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임금노동을 수행하면서도 가사 및 양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모성의 맥락에서 자녀 돌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까지 만연한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

다. 여성을 일차적인 가족 내 책임자로 바라보는 인식은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에게 일과 양육의 이중 부담을 부과하고, 노동시장 내적으로는 부차적 노동자로 위치시켜 여성의 저임금과 불안정한 지위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 문제이며 개선이 필요하다.

가사 분담 참여나 여성 취업에 관한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지만, 그것이 실제 회사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더 능력이 있으므로 차등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전환하는 형태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생계부양자 남성을 이상적 노동자로 상정하는 남성중심적인 사회질서와 노동시장 규범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을 지속하고 정당화하는 주요한 기제이다. 주변부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은 생계부양자가 아니니 적은 소득은 받아도 된다'는 형태로, 전문직 노동시장에서는 '육아기 여성은 능력이 떨어진다'는 형태로 나타나 여성의 경제적 성취와 커리어의 구축, 리더십 발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친다.

4) 여성 고용의 양극화

후기 근대 신자유주의적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 여성노동자 내부의 분화를 가속화하는 양상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산업화 시기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집중하여 여성노동자 내부의 동질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에 반해, 90년대 이후 여성 고용의 양극화가 진행하면서 여성노동자 내부의 계층화, 이질성이 증가하고 있다. 상층으로 진입하는 소수의 여성과 하층에 집중되는 다수의 여성으로 여성 노동시장 구조가 새롭게 분화하는 상황에서 성평등의 수혜는 상층에, 성 불평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하층에 집중하는 상황이 심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남성 노동자들의 경험과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여성의 양극화는 다수의 하향 집중 양극화라는 점에서 남성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에 있는 다수 여성의 성 불평등 경험은 잘 드러나지 않는 반면 고소득 전문직에 진출한 소수 여성의 사례가 주목을 받으면서 전반적인 노동시장 내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었다는 착시현상 효과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여성 노동시장이 양극화하고 여성 집단 내부의 이질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특정 여성들의 경험이 전체 여성들의 경험으로 대표되는 것은 OECD 최저 수준의 성별 임금격차,

여성 노동자 차별 등 현재 한국 사회의 많은 여성이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열악한 노동 현실을 은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다. 무급노동의 동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1) 무급노동의 여성 집중

무급노동의 동등분배와 가치평가 영역은 젠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영역과 함께 평가 점수가 30점 미만으로 낮았다.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무급 가사와 돌봄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실이 부정적 평가의 가장 큰 논거였다. 여전히 여성들은 경제활동 참여와 무관하게 가사 및 돌봄노동에서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여기는 사회적 인식과 구조, 실천이 지속하는 것이다. 여성의 경제적 기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무급노동에서 남성의 기여는 지체되어 있다. OECD 국가 비교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난 남성 무급노동 시간, 90년대 후반 이후 특별한 변화를 찾아볼 수 없는 불균등한 부부 가사노동 시간의 분포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무급노동의 동등한 분배에 대한 한국 사회의 성평등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2) 남성의 제한적 돌봄 참여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동등한 돌봄 참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제한적이나마 변화의 양상이 관찰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 확대 및 남성 육아휴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시행에 따라 육아휴직 이용자 및 남성 육아휴직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무급노동의 평등 분배 차원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유의미한 변화의 양상으로 보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육아휴직 이용의 성별화, 계층화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남성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용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이며, 이용 기간의 성별 격차도 크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 증가가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은 점에서 남성 육아휴직 이용 비중의 증가가 여성에게 부과된 무급 돌봄노동의 책임을 동등하게 나눈다는 의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다. 이

런 점에서 남성 육아휴직 비중 증가의 의미를 과대평가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육아휴직 이용자의 사업장의 규모와 정규직 여부에 따른 격차가 큰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대기업, 공공기관의 경우 돌봄노동에 대한 지원이 많은 반면, 중소기업, 민간기관으로 갈수록 지원이 현저히 적어져 노동시장 상층부의 여성과 남성들에게 그 혜택을 집중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으로 전문가들은 중고령층 기성세대 남성들의 돌봄 참여가 매우 저조하여 돌봄을 둘러싼 세대 간 격차가 나타남을 지적하였다. 육아휴직의 남성 비중 증가 등 무급 돌봄노동 영역에서의 변화는 최근의 경향으로, 젊은 세대 남성들이 주를 이루는 집단에서 발견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돌보는 남성성 등 대안적 남성성, 친구 같은 아버지에 대한 요구와 인식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자녀 돌봄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무급노동은 자녀 돌봄에 한정되지 않으며, 모든 영역에서 남성이 돌봄 참여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변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에 대한 요구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남성들의 돌봄노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이를 실제로 수행하도록 사회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근대적 성별분업 체제에 기반하여 구성된 현재 사회구조와 질서는 무급노동의 동등한 참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성별화된 규범과 실천을 정당화하고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일례로 여성들의 무급 돌봄노동 책임에 대한 규범은 여성들은 2차적 노동자로 규정하여 생계 부양의 책임을 짊어진 것으로 여기는 남성 노동자에 비해 낮은 소득, 불안정한 직종, 나쁜 일자리로의 진입을 정당화한다. 여성들이 받는 유급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적 상황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편, 낮은 소득과 노동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가사노동 및 돌봄에 대한 여성의 일차적인 책임을 재생산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유자녀 기혼여성들은 일과 가정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짊어지고, 남성들이 참여할 필요성은 유예된다. 이런 점에서 전문가들은 무급노동의 동등한 참여와 사회구조적 젠더 질서 유지는 상호적으로 연관되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별 고정관념을 재생산하고 지속시킨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3)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의 평가절하

여성들이 주로 수행하는 가사 및 돌봄노동의 가치는 여전히 낮게 평가되고 있다. 돌봄과 보살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무급노동은 생산에 기반한 임금노동의 가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는 측정하지 못한다. 실제로 무급노동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항목은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유급 돌봄노동의 임금 또는 안정성을 바탕으로 우회적으로 추정 가능한데, 현재 유급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와 현실에 빗대어 볼 때 무급노동의 가치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무급 돌봄노동을 여성이라면 누구든 할 수 있는 여성성의 표출로 인식하여 가치 있는 노동으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라.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1) 청년층 중심으로 전통적 성역할 규범의 균열

전문가들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전통적 성역할 규범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의 참고자료로 제시한 가사 분담 및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는 가사 분담을 여성의 일차적 역할로 보는 규범에서 꾸준히 벗어나는 양상을 보였으며, 성별 격차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횡단자료로 제시한 '남성의 생계 책임'과 '여성의 자녀양육 책임'에 대한 동의 정도에서는 성별 격차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전통적 성역할 규범에 대한 동의 정도가 약화하고 있었다.

참고지표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전문가들은 최근 노골적 성차별이 약화하는 경향과 성차별적 관행이나 표현을 문제로 평가하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성 평등한 변화를 거스르는 백래시 현상(Backlash)이 존재하고, 젊은 세대의 인식변화에 비해 중고령층 세대의 변화가 지체되는 세대 간 격차에도 불구하고 불과 10~20년 전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인식 부문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5가지 성평등 영역 중 가장 큰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2) 신전통적 성별분업의 등장

여성의 경제활동이 삶의 필수적인 요소로 전환하면서 가족 내 무급 돌봄노동의 일정 부분은 노동시장에서의 저임금 노동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모든 필수적인 돌봄 요소들이 시장화할 수 없기에 일정 부분 가정 내 돌봄이 불가피한 요소지만, 이 부분에서 성역할 규범이 변화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인정하면서 양육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지우는 일-지향적 보수주의(pro-work conservative) 또는 신전통적 성별분업(Gerson, 2010)의 흐름이 청년층 사이에서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수준에 비해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낮은 현실에 반영되어 있다.

3) 성별, 세대별 젠더 인식 격차

전문가들은 성차별적 역할 규범에 대한 여성들의 문제 인식과 변화에 대한 의지가 높아지고 있으며 인식의 변화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경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20~30대 여성의 높아진 평등 지향성과 실천에 대해 고무적으로 보았다. 젊은 세대 남성들 사이에서도 성평등 의식이 향상하는 현상도 발견되지만, 적대적 성차별주의 의식이 높고, 특히 청년층에서 여성혐오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였다.

성역할 규범에 대한 인식의 격차는 세대 간에도 발견된다. 젊은 세대의 변화에 비해 중고령 세대는 상대적으로 전통적, 성차별적 성역할 규범을 내면화하여 성평등 실현의 측면에서 더딘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가까운 미래 고령 인구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지만 현재 중고령 세대는 보수적인 성역할 규범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여 성 평등한 실천을 둘러싼 세대 간 격차는 이후로도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청년세대와 중고령 세대의 성차별 인식의 격차 외에도 청년세대가 담지하는 '성차별'을 기계적 공정의 틀로 사고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평등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인류 지향의 가치로서 성평등의 의미가 기계적 공정의 틀로 주조하는 청년세대 성평등의 의미와 어떻게 연관하면서 그 의미를 달성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노골적인 여성혐오의 확산

전문가들은 직접적이고 명백한 성차별은 약화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이나 섹슈얼리티, 모성 이데올로기, 여성의 성적 대상화는 여전히 남아서 성차별적 효과를 생산하고 있다고 보았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속에서 신기술과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젠더 폭력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최근의 판례나 미디어를 보면 여전히 가해자에게 온정적 태도를 취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경향도 아직 잔존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게임 등 디지털 공간에서 새로운 형태의 여성혐오 표현이나 성차별적 표현, 여성비하와 적대적 태도가 심화하고 있으며, 미투 선언, 여성 경찰 채용, 불법촬영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태도에서 노골적인 여성혐오의 목소리가 발견되고 있다.

여성혐오는 신기술과 플랫폼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보다 빠르게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며, 여성혐오의 수준과 양태에 비해 사회적 경각심이 낮은 점이 더욱 문제이다.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 중심으로 나타나는 여성혐오가 향후 성평등 문제 공유 및 남녀 연대의 가능성을 저해하고 전 사회적인 성평등 실현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반면 이를 청년 남성 대 청년 여성의 문제로 확대 인식하기보다 변화하고 있는 남성들을 고려하여 새로운 평등 규범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통적 성역할 규범의 변화와 적대적 성차별주의 의식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향후 규범 및 실천으로서의 성평등은 앞으로도 많은 논쟁과 갈등을 동반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마.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1) 디지털 기반 젠더 폭력의 만연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젠더 폭력이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증가하는 등 젠더 폭력의 만연과 심각함에 대한 큰 우려를 나타내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 사회의 폭력 발생 빈도 자체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여성 피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최근 증가하는 새로운 여성 폭력의 특징으로 피해의 성별성 외에도 세대 간 격

차가 제시되었다. 스마트 사회의 구성원으로 진입하여 다양한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피해가 집중하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이들은 정치적, 경제적 자원을 가장 적게 가진 집단이기에 폭력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워 더욱 심각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어 많은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었다.

2) 젠더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의식 및 법·제도적 변화의 지체

젠더 폭력에서 안전할 권리를 침해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사회문화적 배경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남성들의 문화, 재미, 때로는 복수심 등 사적 영역에서의 실천으로 상호 용인하거나 심지어 권장하는 문화가 존재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맘충, 김치녀 등 디지털 공간을 중심으로 관습적인 여성비하와 성폭력이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기계적인 수준으로 여성들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촬영기술과 편집기술이 진화하면서 불법촬영 및 합성, 디지털 장의사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이 시장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회적 개입과 대응은 미흡한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하였다. 전문가들은 오프라인에서 디지털 공간으로 자리를 옮겨 유지하는 남성 중심적 커뮤니티의 문화나 성을 매개로 하는 남성들의 공모 문화 등이 변화하지 않는 한 젠더 폭력은 근절되지 않으며 다양한 양상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문제의식은 아직 초기 단계이다. 친밀성과 사회관계망의 변화, 온라인 연결망의 확장,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폭력 등 끔찍한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은 매우 높아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법률과 제도적 대응은 새롭게 등장하는 젠더 폭력과 범죄의 양상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여성의 피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젠더 폭력 피해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과 민감성은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법적 관행들의 변화는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낮은 수준의 법적 처벌과 젠더 폭력 피해의 사각지대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였다. 젠더 폭력의 심각성과 해악에 비해 그 처벌의 수준이 낮아 젠더 폭력의 발생 빈도와 폭력성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이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폭력의 예방과 처벌 효과가 미

흡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이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젠더 폭력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주여성, 장애 여성 등 중층적 불평등을 경험하는 여성들은 폭력에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 폭력의 경험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3) 범죄 피해로부터 안전할 권리의 침해

젠더 폭력 범죄의 만연성에도 불구하고 심각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식 및 법·제도적 변화의 지체는 일상생활에서 여성의 안전할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많은 여성들은 다양한 범죄 피해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며, 발생 빈도와 무관하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범죄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불안을 내면화하고 있다. 젠더 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수준이 낮고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제도적 체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여성들의 자기 단속 기제를 강화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을 우려했다. 자기 단속 기제의 강화는 범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여 비난하고, 2차 가해에 관대한 사회적 문화를 조성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성평등에 크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안전에 대한 평등한 인식,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지 않을 여성들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폭력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의 심각한 젠더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기본적인 여성들의 안전조차 보장되지 못한 사회에서 성역할 분화 등 더 높은 차원의 성평등 실현은 요원하다. 따라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젠더 폭력 영역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젠더폭력 문제의 지속은 위계적이고 불평등한 성별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청년 여성의 높은 불안감은 향후 성평등 문제에 대한 남성들과의 소통 및 연대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 청년 남성들을 단일한 집단으로 범주화하거나 폭력적 남성성을 본질화하지 않으면서 성평등을 위해 연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제3절 거시환경 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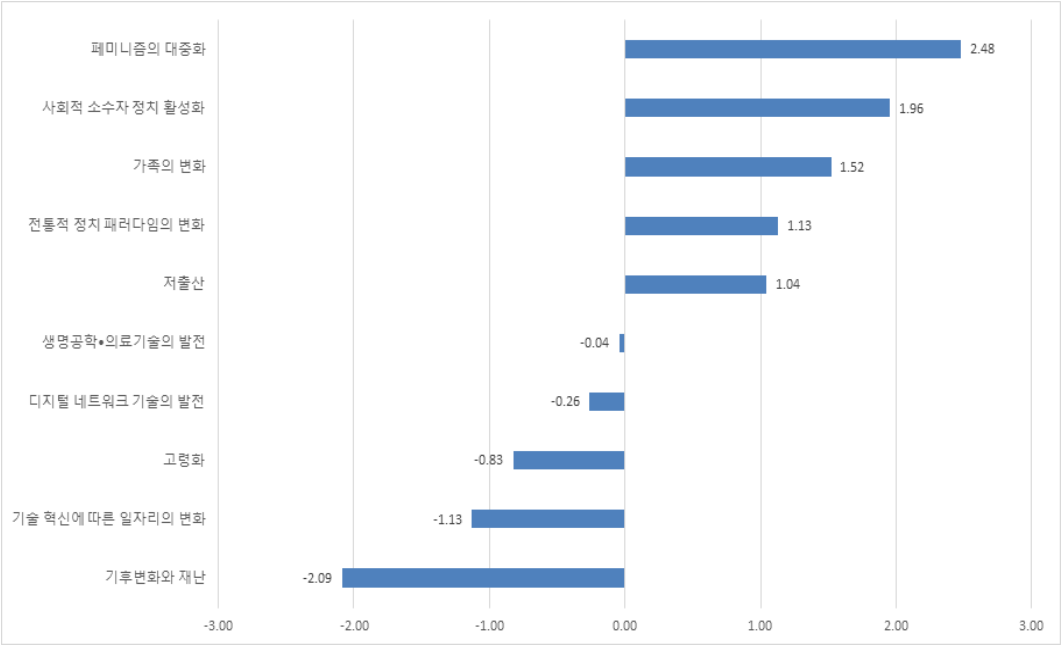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거시환경 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력

거시환경 변화가 2040년 미래 한국 사회 성평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은 거시환경 요인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대체로 정치 영역(전통적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페미니즘의 대중화, 사회적 소수자 정치의 활성화) 및 사회 영역(가족의 변화, 저출산)의 변화는 성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환경 영역(기후변화와 재난)과 경제 영역(저성장의 장기화와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의 변화, 고령화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었다.

-5점(성 불평등 심화)부터 5점(성평등 증가)으로 측정한 영향력의 정도를 우선 평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4-3]과 같다. 긍정적 차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환경 변화 요인은 페미니즘의 대중화(2.48점)이며, 사회적 소수자 정치 활성화(1.96점), 가족의 변화(1.52점), 전통적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1.13점), 저출산 (1.04점) 순이었다. 가장 크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 요인은 기후변화와 재난으로 평균값은 -2.09점이었다. 다음으로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1.13점), 고령화(-0.83점),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0.26) 순이었다.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생명공학·의료기술의 발전은 거의 0에 가까운 음(-)의 값으로 나타나서 전문가들 사이에 전망이 다소 엇갈렸다.

(단위: 점)



[그림 4-3] 거시환경변화가 2040년 미래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력

영역별 전문가 응답 점수의 값의 분포를 평균값을 기준으로 크게 긍정적 영향요인, 부정적 영향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의 〈표 4-2〉, 〈표 4-3〉과 같다.

우선 평균값이 양(+)의 값을 가지는 긍정적 영향 요인에 대한 전문가의 응답의 분포를 보면, 페미니즘 대중화의 경우 최빈값은 3점으로 8명이 이에 응답했고 최댓값은 5점, 최솟값은 -1점이었다. 23명 중 22명의 전문가가 양(+)의 값에 응답했고, 1명만 음(-)의 값에 응답하여 페미니즘의 대중화가 미래 성평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 소수자 정치의 활성화는 최빈값이 2점이고 16명의 전문가가 이에 응답했다. 23명의 전문가 모두 양(+)의 값을 주었으며, 값의 범위는 최댓값 3점, 최솟값 1점으로 영향력의 방향이나 정도의 측면에서 전문가들 사이의 합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 전통적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는 최빈값이 2점이며 7명이 이에 응답했다. 값의 범위는 최댓값 3점, 최솟값 -3점으로 페미니즘의 대중화나 사회적 소수자 정치의 활성화에 비해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 23명 중 17명의 젠더 전문가가 전통적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양(+)의 값을 주어 전반적으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4명의 전문가는 음(-)의 값을 주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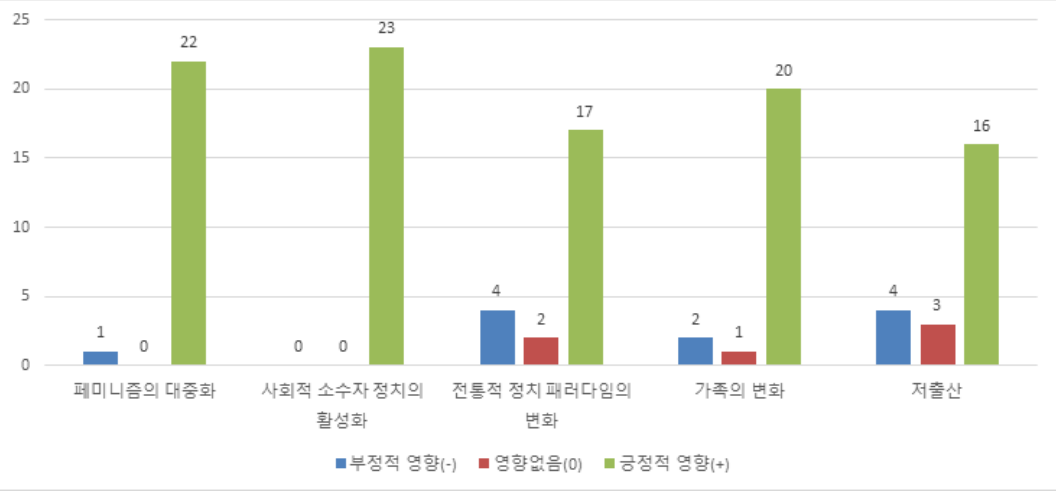
가족의 변화는 최빈값이 2점으로 14명의 전문가가 이에 응답했으며, 최댓값은 3점, 최솟값은 -2점이었다. 23명 중 20명이 양(+)의 값을 주었고, 음(-)의 값을 매긴 전문가는 2명으로 소수였다. 가족의 변화가 성평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에 젠더 전문가들은 대체로 합의한다고 볼 수 있다. 저출산은 최빈값이 2점으로 7명이 이에 응답했고, 최댓값은 3점, 최솟값은 -2점이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전문가가 16명으로 많지만, 4명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고, 3명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여 가족의 변화에 비해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4-2〉 거시환경변화가 2040년 미래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I) + 값의 분포

(단위: 점, 명)

		페미니즘의 대중화	사회적 소수자 정치의 활성화	전통적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가족의 변화	저출산
평균(점)		2.48	1.96	1.13	1.52	1.04
최빈값(점)		3	2	2	2	2
최댓값(점)		5	3	3	3	3
최솟값(점)		-1	1	-3	-2	-2
범위(점)		6	2	6	5	5
구간별 빈도 (명)	부정적 영향(-)	1	0	4	2	4
	영향없음(0)	0	0	2	1	3
	긍정적 영향(+)	22	23	17	20	16

(단위: 명)



[그림 4-4] 거시환경변화의 영향력(I) 전문가 응답 + 값의 분포

다음으로 평균값이 음(-)의 값을 가지는 영향요인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보면,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 것으로 평가된 기후변화와 재난의 경우 최빈값은 -3점으로 11명의 전문가가 이에 응답했으며, 최댓값은 1점, 최솟값은 -4점이었다. 23명 중 21명의 전문가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고, 단 2명만이 1점에 응답했다. 저성장의 장기화와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는 최빈값이 -2점으로 11명이 이에 응답했고, 최댓값은 0점, 최솟값은 -3점이었다. 21명이 음(-)의 값에 응답했고, 양의 값으로 응답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절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저성장의 장기화와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가 성평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는 최빈값이 -2점이며, 12명이 이에 응답했다. 최댓값은 2점, 최솟값은 -2점이다. 23명 중 19명이 음(-)의 값에 응답하여 대부분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3명의 전문가는 양(+)의 값에 응답하여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소수가 가지고 있었다. 고령화는 앞의 다른 부정적 영향요인들보다 약간 높은 -1점이 최빈값으로 9명이 이에 응답했다. 최댓값은 3점, 최솟값은 -3점으로 값의 범위가 넓어 미래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 다소 이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 전문가가 23명 중 17명으로 다수이지만, 5명의 전문가는 양(+)의 값을 주어 다른 부정적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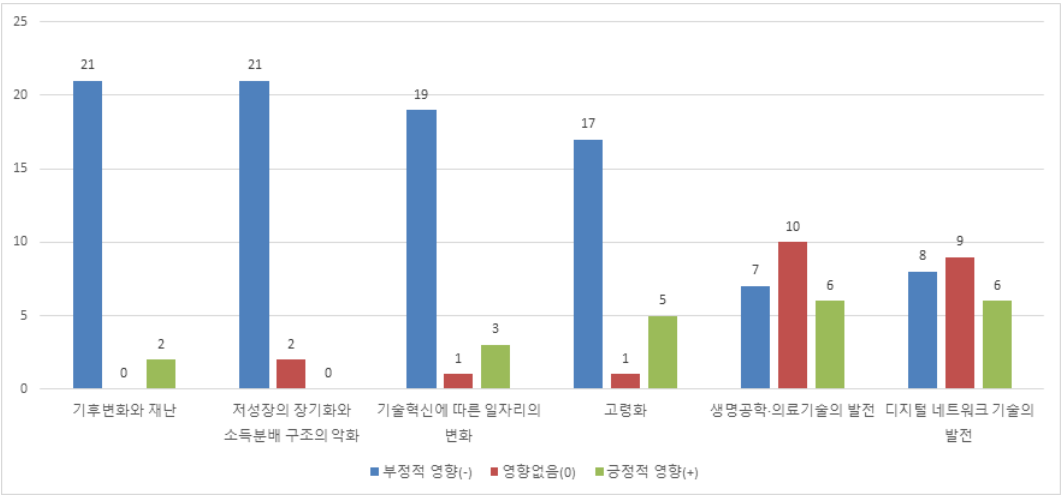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생명공학·의료기술의 발전은 음의 값을 가지지만, 0에 가까운 음의 값이라 값의 분포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가지 영향 요인 모두 최빈값은 0이며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은 9명, 생명공학·의료기술의 발전은 10명이 이에 응답했다. 제시된 척도상 0점은 "영향 없음"이지만,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공존하는 경우 전문가들이 이에 응답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다른 요인들과 달리 음(-)의 응답값과 양(+)의 응답값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음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의 경우 음(-)의 값에 응답한 전문가가 8명으로 양(+)의 값이 응답한 전문가 6명에 비해 2명 정도 많다. 뒤에서 살펴볼 것이지만,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은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이 공존하는 양상을 띤다. 몇몇 이슈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 생명공학·의료기술의 발전은 음(-)의 값으로 응답한 전문가가 7명으로 양(+)의 값에 응답한 전문가에 비해 1명이 많을 뿐이다.

〈표 4-3〉 거시환경변화가 2040년 미래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II) - 값의 분포

(단위: 점, 명)

		기후변화와 재난	저성장의 장기화와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	고령화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생명공학·의료기술의 발전
평균(점)		-2.09	-1.91	-1.13	-0.83	-0.26	-0.04
최빈값(점)		-3	-2	-2	-1	0	0
최댓값(점)		1	0	2	3	2	3
최솟값(점)		-4	-3	-2	-3	-3	-2
범위(점)		5	3	4	6	5	5
구간별 빈도 (명)	부정적 영향(-)	21	21	19	17	8	7
	영향없음(0)	0	2	1	1	9	10
	긍정적 영향(+)	2	0	3	5	6	6

(단위: 명)



[그림 4-5] 거시환경변화의 영향력(II) 전문가 응답 - 값의 분포

2 거시환경 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의 논거

가. 저출산

1) 성 불평등 및 부적절한 정책의 산물로서 저출산

저출산이 미래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저출산 현상 자체가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미래 성평등 사회에 대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대다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출산을 국가적 위기로 진단하고 20년간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출산율을 올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여성을 출산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최근 출산장려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으나, 여전히 출생아 수 증가라는 목표에 사로잡혀 있다. 전문가들도 낮은 출산율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담론과 정책적 접근이 저출산을 초래한 근본적 원인을 성찰하지 않고 출생아 수를 늘리고자 하는 시도는 문제 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저출산은 경력단절 없이 평생 취업을 하기를 원할 뿐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삶의 조건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성차별적 구조와 제도의 산물인데 정책이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어떠한 관점하에서 전개하느냐에 따라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저출산 현상을 성역할 규범과 성별분업의 변화에 대한 욕구의 반영으로 해석할 때 성평등 이슈가 공론화되면서 기존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반면, 가임기 여성 출산 지도의 사례처럼 여성을 출산을 위한 수단으로 대상화하면 오히려 여성 비하와 혐오를 생산함으로써 불평등을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여성의 전통적 역할 해소 및 가족관계의 평등성 증가

이처럼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도 전반적으로는 성평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은 '여성=가사·돌봄, 남성=생계부양자' 가정에 기반한 전통적 결혼과 핵가족의 정상성에 도전함으로써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별분업을 점진적으로 해체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자녀 수의 감소, 여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의 증가, 남성의 평생 생계부양자 역할이 불가능한 노동시장 구조 등으로 인해 여성의 전통적 역할 변화가 보다 급진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수한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노동시장 여건에 따라 교육 수준이 높아진 여성들이 과거보다 더 많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것이고, 이로 인해 공적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영향력도 증가할 것이다.

저출산은 가구 유형 및 생애주기별 가족관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쳐 가족관계의 평등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불평등한 성별 분업에 기반한 전통적 이성애 중심의 핵가족이 쇠퇴하게 되면서 1인 가구를 비롯해 가족 형태가 다양해질 것이고, 가족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보다 평등한 방식으로 재구성할 것이다.

3) 여성혐오와 젠더 폭력 증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인구구조 및 가족관계의 변화를 친밀성의 구조변동과 젠더 관계 변화의 맥락에서 사고하지 못하고, 여성의 만혼, 비혼, 청년층의 개인주의의 탓으로 인

식하는 한 여성혐오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저출산을 사회문제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한국의 상황에서 저출산의 원인으로 여성을 지목하고, 이로 인해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에 대한 연민에 기반한 담론과 정책적 접근이 지속되는 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남성 노동 기회의 박탈로, 친밀한 관계 및 가족의 변화를 여성들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심해질 것이다.

젠더 폭력에 대해서도 부정적 전망을 다수 확인하였다. 친밀한 관계가 전통적 이성애 관계를 넘어 유연해지면서 에피소드적 섹슈얼리티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발전과 플랫폼 산업의 확장은 여성들이 젠더 폭력의 상황에 더욱 쉽게 노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나. 고령화

1) 여성의 돌봄 부담 증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을 차지하는 2040년 초고령사회가 되면 사회적 돌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확대, 1인 노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가족의 노인 돌봄 기능은 크게 약화하기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가족 밖의 영역에서 돌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회화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를 통해 제공하면, 여성 고용의 질적 수준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 돌봄노동에 대한 낮은 가치평가는 관련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경제적 자원을 악화시켜 빈곤에의 노출 위험과 건강 악화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돌봄노동에 대한 새로운 가치평가와 성 평등한 돌봄 책임의 분배 등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시급히 나서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비혼 여성이 증가하면서 부모 돌봄 역할과 기대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2) 노인의 성별화된 삶의 질 저하

사회적 돌봄의 공급이 양적, 질적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가족 내에서 여성 노인의 남성 돌봄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반면, 남성보다 더 오래 사는 여성 노인은 1인 가구로 생존해야 할 기간이 증가하면서 열악한 돌봄 상황이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돌봄에 대한 가치를 적절히 평가하지 않고, 돌봄노동자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돌봄을 수행할 경우 노인에 대한 폭력과 학대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은 전반적으로 노인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생애과정 전반에 걸친 차별과 불평등한 삶의 산물로서 여성 노인은 빈곤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높다. 2040년은 1960~1970년대 출생 코호트가 70~80대가 된다. 1960~1970년대생 여성은 이전 시대 여성에 비해 교육이나 노동시장 참여의 질적 수준이 높은 세대이기는 하지만, 남성중심적 노동시장에서 경력단절을 경험한 세대이며, 임금을 비롯하여 남성에 비해 노동의 질적 수준이 낮다. 그 결과 노년기 빈곤에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빈곤은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 대부분의 삶을 일 중심으로 살아온 남성 노인은 친밀한 관계로부터 단절, 고립된 상태로 오랜 기간을 지내면서 자살률이 현재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초고령 노인이 증가하면서 남성 노인에 비해 취약한 여성 노인의 빈곤과 건강, 여성 노인에 비해 취약한 남성 노인의 친밀한 네트워크 단절로 인한 고립의 문제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홈 오토메이션, IoT 등 기술의 발전이 주거 환경에 도입되고 노인을 위한 복지기술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러한 기술발전의 혜택은 양극화할 것이다. 경제력을 갖춘 노인은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노화로 인한 신체적 장애, 사회관계 단절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커지지만,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노인의 삶의 질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

다. 가족의 변화

1) 여성의 다양한 독립적 삶의 기회 확대

가족의 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젊은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은 더 이상 당연한 생애과정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급변하고 있다. 생애과정에 따른 가구 형태와 구성은 탈표준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친밀성의 실천이 증가하는 등 가족 형태와 관계의 전형성은 약화하는 반

면 가족 유연성은 커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대 한국가족의 변화는 이성애 핵가족 중심의 정상 가족 규범이 쇠퇴하는 것과 궤를 함께하고 있으며, 혈연 및 가족 형태에 기반한 후기 근대적 가족의 규범과 정의는 도전받고 있다(이재경, 2015). 이러한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가부장적 가족은 개인의 선택에서 점차 배제되고, 이성애 핵가족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과 동성혼이 등장하고, 결혼과 무관한 출산에 대한 지원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면 여성의 독립적 삶의 경로 선택과 유연한 친밀한 관계 형성의 기회가 확대되어 성 불평등한 가부장적 가족에 종속하지 않는 방식의 관계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남성중심적, 가부장적 가족을 벗어난 새로운 친밀관계 형성의 가능성은 가부장적 성별분업의 주된 제도적 기반이 되는 핵가족 중심의 혈연가족 규범의 해체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가족의 변화가 전통적인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와 가정 내 실천에 성 평등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족의 변화는 노동시장 및 돌봄 분담 구조의 변화와도 연관된다. 1인 가구의 증가, 보편혼의 쇠퇴, 무자녀 가구의 증가 등은 여성 경제활동의 필요성을 높이고, 돌봄노동의 평등한 사회적 분배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켜 노동시장 및 돌봄 영역에서의 성 평등한 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1인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은 영향력이 약화하고 여성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의견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한편 다양한 가족 형태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변화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현재 가족의 변화는 개인의 자유로운 삶의 방식이나 선택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측면으로 나타난다. 향후 생활동반자법 등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다양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 친밀한 관계에서의 젠더 폭력 위험

가족의 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관련하여, 여성들이 소유한 자원과 협상력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기존 가족 형태를 벗어난 새

로운 형태의 친밀성 추구는 가부장제로부터 여성과 남성을 해방할 잠재력을 가지지만, 동시에 과거 가족제도가 개인에게 제공하던 가부장적 보호 체계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존의 가부장적 가족이 제공하던 최소한의 안전망이 사라진 상태에서 개인의 협상력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원가족의 지지, 높은 계급 지위 등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을 소유하지 못한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이거나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가족'의 법적 제도적 틀이 없는 성적 친밀성이나 친밀한 관계의 추구는 성차별, 젠더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가족과 관련한 사회적 지위의 부재는 낮은 계급 여성들의 공적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계급지위가 낮은 1인 여성 가구주는 빈곤과 건강권의 측면에서 취약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변화하는 가족의 변화에 걸맞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구의 삶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역사회 고립 해소 등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1)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 완화 VS 계층화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 중 여성이 수행하던 가사노동 부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한편에서는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등의 발전으로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감소하고, 가사노동 부담이 줄어들 것이며, 결과적으로 감소한 만큼 여성의 경제사회적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반면, 인공지능, 자동화 등 가사노동 기술의 발전으로 기술 선별 등 가사노동 기술을 관리하는 노동이 증가하는 등 여성의 가사노동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있다. 가사노동이 여성의 일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별 분업이 해결되지 않는 한 기술의 발전이 성평등에 기여할 만큼 가사노동 부담을 감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입장에서는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기술로 가사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춘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의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 VS 돌봄 부담 심화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의 효과로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과 여성의 돌봄 부담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 전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재택근무 등을 활성화하여 공간적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후자는 비대면 학습이나 재택근무의 확대가 여성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을 심화시켜 경제활동 참여가 어려워진다고 보았다.

3) 남성 중심 디지털 기술의 활용과 젠더 폭력 증가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이 기존의 성 불평등 이슈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으나, 디지털 기술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및 의사결정에서의 남성 중심성으로 인해 기술을 성평등을 증진하는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데이터와 기술은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상 사회의 불평등과 편견을 내재화하기 쉽고, 이것을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가정하는 현실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는 한 기술은 오히려 성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기술 발전의 효과가 성평등에 기여하려면 신기술을 장악하고 주로 활용하는 집단은 누구인지, 기술발전이 가져올 변화의 수혜는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되는지, 디지털 시대의 지식생산은 기존의 젠더 질서하에서 통용되는 지식을 어떻게 수용하고 저항하면서 축적되어 가는지 등에 관한 깊이 있는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남성 중심성에 대한 더욱 심각한 우려는 젠더 폭력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포르노 등 기술이 결합한 성범죄, 성 착취가 디지털 공간에서 상품화하고, 마약, 도박 등 범죄로의 유인 경로가 되면서 젠더 폭력은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띨 것으로 보았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을 동반하는 사이버 불링, 스토킹뿐 아니라 최근 리얼돌 사건을 통해 예견하는 것처럼 인공지능 로봇의 성적 대상화, 섹슈얼리티의 비인격화는 젠더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만들 것이다.

마. 생명공학·의료기술의 발전

1) 성역할 고정관념, 규범의 쇠퇴

노화와 장애 극복, 수명 연장 등 인간의 생명과 신체적 능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인간 증강 기술의 발전으로 신체적 능력에서 남녀차이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며,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조차 모호해지면서 전통적 성별 구분은 상당히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생식기술의 발달로 결혼이나 파트너십 없는 출산, 동성 결혼 출산 등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이성애 핵가족에 기반한 가부장적 가족 및 성역할 규범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2) 생명공학 기술의 남성 중심성

생명공학 기술의 사용이 기존의 젠더화된 욕망 구조에 따라 이루어지고, 생식보조술 등 재생산 관련 기술의 개발과 활용이 남성중심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경우 여성의 몸이 도구화하고 재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즉, 인구문제가 중요해질수록 여성을 재생산하는 몸으로 인식하면서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 건강권에 대한 침해가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바. 저성장의 장기화와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

1) 여성의 경제적 불안정성 증가

많은 전문가들은 저성장 경기침체가 이미 성별화되어 있는 여성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성을 악화하여 여성 집중 일자리의 질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하였다. 고용불안정과 소득 감소는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강화하여 여성 노동의 경제적 불안정성 증대에 일조하게 된다.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지위는 다시 무급노동 수행의 성 불평등 강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여성들의 가족 내 무급노동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여성에게 부과되는 무급노동의 책임과 의무는 여성들은 2차 노동자로 규정하여 노동시장 내 낮은 여성 지위를 정당화한다. 노동시장과 가정 내에 존재하는 성역할 규범과 인식이 상호작용하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의 사회적 기제를 강화하고 재생산하는 데 일조한다.

2) 여성 내부 계층 격차 심화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는 여성 내부의 격차를 심화시켜 소수의 엘리트 여성과 다수의 저임금, 빈곤 여성들로 구분되는 여성 내부의 양극화 현상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때 성평등의 수혜와 혜택은 소수의 상층 여성들에게, 성차별로 인한 불이익과 폭력적 경험은 다수의 하층 여성들에게 집중되어 성평등과 성차별의 경험 역시 양극화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다수 여성이 경험하는 경제적 불안정은 노후의 빈곤으로 이어져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 노인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강화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다수 여성들의 불평등과 차별 경험은 감추어져 잘 드러나지 않는 반면, 소수 엘리트 여성의 경험과 성취는 주목을 끌어 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실제 여성의 삶과 경험 사이의 간극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사.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

1) 여성 고용의 질적 수준 악화

기술혁신으로 인해 서비스, 단순 노무, 사무직 등 전통적 여성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전체적인 여성 고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유연근무 확대, 플랫폼 노동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 고용률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대체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해당하므로 여성 고용 현실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플랫폼 노동의 증가는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을 높이므로 향후 여성 노후의 빈곤과도 연관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는 여성 내부의 양극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었다. 소수의 여성들은 고부가가치 산업 노동에, 다수의 여성들은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여성 내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낮은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가 더해져 여성 간의 격차가 남성 내부의 격차보다 더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2) 기술혁신 분야 수직적 성별 분리 심화

다수의 전문가들은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가 성평등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일자리 변화의 수혜가 남성들에게 집중하고 여성들은 소외되면서 여성 노동의 불안정성과 낮은 질적 수준은 유지되는 반면 성별 격차는 증가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진다.

특히 기술혁신의 시대가 창출한 새로운 일자리에서도 전통적 성별 직종분리 현상이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했다. 남성들은 디지털 분야 고소득 전문직군에, 여성들은 단순노동직에 집중되어 산업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성별화된 노동시장 구조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구조에서 이공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보다 늘어나고 여학생들의 이공대 진학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남성 중심의 이공계 문화가 기업문화로 이어져 여성의 관련 산업 진입과 고위직 진출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는 의견도 살펴볼 수 있었다.

3) 여성의 이중 부담 증가

많은 전문가들은 비대면 기술혁신으로 노동과 생활의 경계를 재구성하면서 여성의 이중 부담이 증가할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하면서 늘어난 돌봄노동 부담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상황은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혁신은 돌봄노동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지만, 돌봄과 정서적 분야의 일자리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고 필수적 돌봄노동을 인간이 수행해야 할 수가 있어 여성의 이중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4)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여성 진출 확대

전반적으로 기술혁신이 여성 노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일부 소수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술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여성 진출 확대에 대해 낙관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성들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의 필요성 증대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여성 진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기술기반 산업이 음악, 영화, 디자인 등 비기술 영역과 결합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여성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상황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일부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 상승과 직업 안정성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신(新)산업이 부상하면서 여성 창업자, 여성 기업가 등 새로운 기술혁신의 개발자로 여성들이 나설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전망도 있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술혁신으로 인한 성별 직종분리 완화 가능성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국방, 시큐리티, 경찰 등 전통적 남성중심적 직종으로 여성들이 진출하면서 성차별적 조직 문화가 변화하고 성별 직종분리 완화의 가능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이공계 분야로의 여성 진출 역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아. 기후변화와 재난

1) 여성의 돌봄 부담 심화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재난의 부정적 효과가 취약계층과 여성에게 집중될 것을 우려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속성상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성에게 더 많은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성의 돌봄 부담을 증가시키고, 유급 노동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재택수업을 받는 미성년 자녀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의 급격한 증가는 돌봄노동의 사회화 및 시장화가 지닌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향후 남성의 무급노동에 대한 요구와 책임은 더욱 획기적으로 증가해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이를 공론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감염병 예방 맥락에서 일상적 삶과 생활에 개입하는 국가적 통제의 증가가 여성들에게 개방되었던 자유를 축소하고 남성중심적인 사회의 젠더 질서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보였다.

2) 성평등 의제의 주변화

다른 한편 방역과 경제적 손실이 위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가 되는 재난 상황에서 성평등 의제가 사소화, 주변화하는 경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UN, WHO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팬데믹의 발생과 지속이 가구 내 긴장 수준을 높이고 가정폭력의 맥락

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을 증가시켜, 여성들의 폭력 노출 위험의 증가와 전체적인 성평등 수준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UN Women, 2020; WHO, 2020). 재난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과는 별도로, 그러한 노력이 성평등의 가치를 저해하거나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적 상황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여성 환경 리더십의 부각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기후변화와 재난이 성평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크게 우려했지만, 일부 긍정적 요소를 발견한 전문가도 있었다. 여성 환경운동 지도자가 부각되고 국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환경 운동에서의 여성 리더십이 주목받고 확장하는 상황이다. 환경과 재난 이슈에서 발휘하는 여성 리더십과 페미니즘의 영향력은 성평등의 진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상기후와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태와 환경에 대한 인식과 삶의 방향성이 변화하는 데 영향을 미쳐, 현대사회의 발전주의 및 물질주의적 인식에 제동을 걸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등장은 산업화 사회의 '이상적 근로자' 규범의 약화와 돌봄과 안전의 가치 부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의견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자. 전통적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1) 여성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 확대

온라인을 통한 정치 참여와 직접민주주의가 확대되면서 여성의 발언권이 높아진 상황은 많은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양한 여성들의 정치 참여는 공적 의사결정에 대한 여성의 영향력을 높이고, 나아가 여성주의 정치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대뿐 아니라 공적 의사결정기구에 진출하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성 유권자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회의원 등 정치 엘리트 영역으로의 여성 진출보다 여성 유권자의 조직과 참여 활동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 최근 나타나는 청년 여성들의 정치 참여와 직접적 의사 표현의 확대는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여성 세력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전통적 정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여성들의 정치의식과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연고에 기반하는 폐쇄적이고 권력적인 남성 중심 정치 문화는 점차 퇴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 감수성 확장과 연동하면서 성 불평등의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 극우 선동주의 정치의 영향력 확대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 정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먼저 여성들의 정치 참여와 지형의 변화는 오히려 기존의 정치 세력들이 위협적인 상황으로 여겨 정치적 지형을 더욱 극단적으로 분화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성 불평등 문제는 방치되거나 더욱 심화할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도 있었다. 정치적 지형의 분화 속에서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의 발전은 극우를 포함하여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를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 유포할 수단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 외에도 일국주의의 강화, 난민이나 글로벌 이슈에 대해 부정적인 신인종주의나 국가주의가 공고해질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차. 페미니즘의 대중화

1) 성평등 사회로의 진전을 위한 구심적으로서 페미니즘

전문가들의 의견에서도 페미니즘의 대중화가 성평등 실현에 미치게 될 큰 영향력과 높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전문가들은 페미니즘의 대중화가 기존의 성 불평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가능하게 하고 성평등 사회로의 진전을 위한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다. 과학기술 등 기존에 페미니즘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했던 분야로 페미니즘 의식 확장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점도 중요한 긍정적 요인 중 하나로 여겼다.

또한 페미니즘의 대중화는 성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의 증진에 기여하여 성차별적 규범과 실천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하였다. 페미니즘 대중화와 함께 젠더 이슈가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는 등, 여성들의 세력화 양상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는 점도 긍정적 영향 중 하나이다. 그동안 페미니즘의 대중화는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취약한 위치에 처해있던 여성들에게 저항의 언어를 제공하였고, 젠더 관련 이슈에 대한 직접적이고 집단적인 영향력 행사를 통해 의견을 주장하고 관철하는 경험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정책에 대한 여성들의 영향력 확대와 새로운 성평등 의제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토대가 될 뿐 아니라, 집단적 행동의 경험과 인식의 공유를 통한 임파워링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흐름에 대한 남성들의 백래시가 발견되기도 하지만, 이는 과도기적인 양상으로 젠더 폭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성차별적 규범의 변화 속에서 결국에는 남성들의 변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찾아볼 수 있었다.

2) 성평등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왜곡

페미니즘 대중화가 성평등에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페미니즘의 대중화와 연관되는 여러 부정적 영향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신자유주의적 가치 확산으로 인해 '평등'의 가치가 약화하여 당사자 중심의 차별에 대한 민감성으로 페미니즘의 의미를 제한할 경우, 집단으로서 평등과 차별 문제의 해결로 나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여성정책이 '이익집단 갈등'의 장이 될 우려, 우파 포퓰리즘과 페미니즘의 결합으로 인한 보수화 경향의 가능성, 20~30대를 넘어서는 다양한 세대 경험이나 복합적인 성 불평등 의제가 전면으로 등장하지 못하는 것 등을 한계점으로 제시하였다.

여성혐오로 대표되는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의 심화도 페미니즘 대중화의 부정적 영향 중 하나로 여겨진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남성들의 성차별주의 인식이 10대 남성에게까지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젊은 세대 여성과 남성의 대립이 더욱 강화되는 등 연대가 아닌 갈등 상황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카. 사회적 소수자 정치 활성화

1) 위계를 정당화하는 '정상성'에 대한 도전

급속한 개인화와 네트워크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성 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 정치가 활성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성평등과 대체로 긍정적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소수자 정치는 정상가족, 남성중심성, 순혈주의, 엘리트 중심주의 등 기존의 정상적이면서 이상적으로 규정되었던 한국 사회구조의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나 패러다임 전환과 연관하며,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여 위계화하는 정상의 보편성에 도전한다. 따라서 소수자 정치의 활성화는 여성 의제와 직접적으로는 무관해 보일지라도 대체로 성평등의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소수자 정치와 페미니즘의 갈등

반면 사회적 소수자들 간의 경쟁과 정체성 다툼으로 인한 갈등과 고립, 사회적 보수화 가능성과 가짜 정보로 인한 소수자 혐오와 백래시 등은 부정적 영향으로 제시되었다. 정치적인 올바름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피해와 차별에 공감하기보다 도덕과 규범의 문제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살펴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소수자 정치의 흐름에서 여성을 소수자 중 하나로 보고 경쟁상대로 여기는 경향도 등장하면서 소수자 정치가 페미니즘 운동을 잠식하거나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런 경우 소수자 정치는 오히려 여성혐오를 재생산하고 성 불평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젠더 정치를 약화하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3 거시환경변화와 주요 성평등 이슈

조사 결과를 보다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 전문가들의 개방형 응답 자료에 대한 연결망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각 답변지의 문장을 표 I-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2040년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11개 영향 요인별로 분류하였고 총 925개의 답변 문장을 취합하였다. 이후 넷마이너 S/W를 통해 명사를 기준

으로 형태소를 추출하였고, 추출한 키워드는 연구진의 검토를 통해 최종 데이터 정제 작업을 수행하여 분석과 연관성이 없는 단어를 제거하였다.

분석은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각 답변지에서 추출한 키워드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한 1-mode(동종 변수) 분석 및 추출된 키워드와 해당 키워드가 속한 11개 영향 요인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한 2-mode(이종 변수) 분석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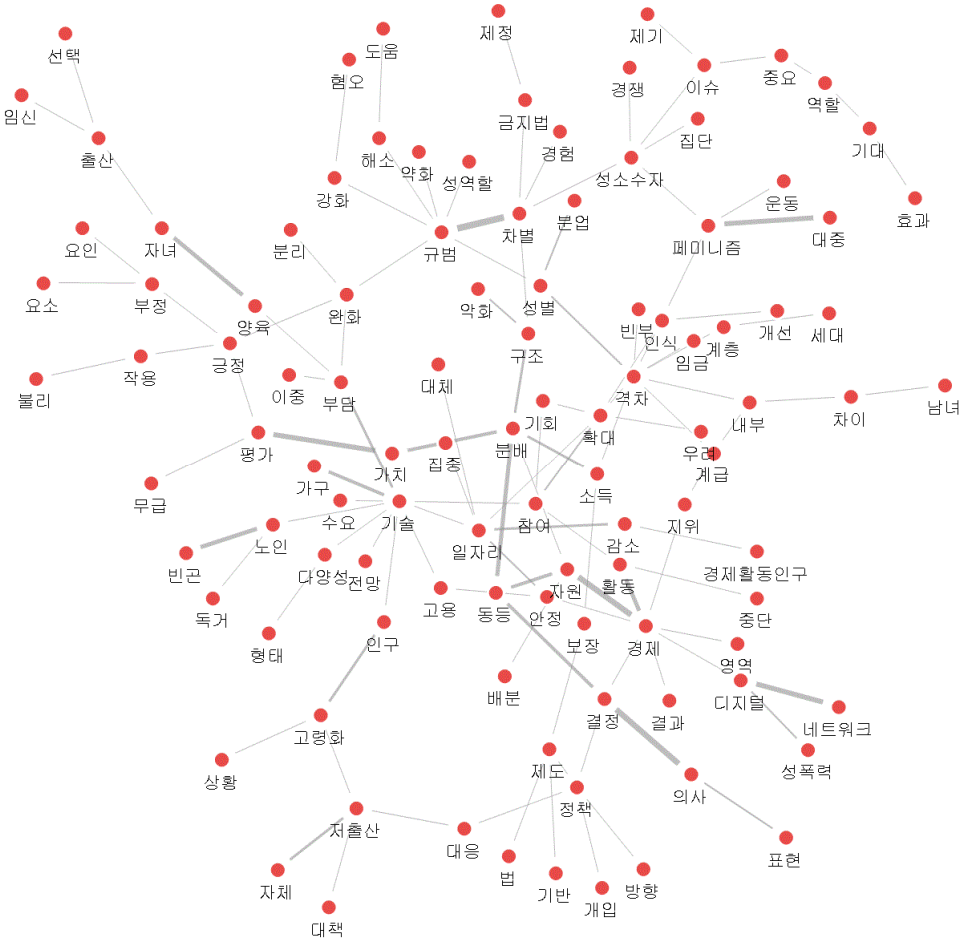
먼저 추출된 키워드의 출현 빈도를 직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어 구름(word cloud)를 그려본 결과, [그림 4-6]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 기술, 분배, 일자리, 디지털, 차별, 성 소수자, 페미니즘 등의 단어 출현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11개 영향 요인의 분류를 기준으로 볼 때 디지털 전환을 포함한 기술혁신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 구조 변화와 관련된 단어의 출현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분석 키워드가 성평등 관련 전문가의 설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인한 성평등 관점의 정책 논의와 준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출현 빈도 기준으로 상위 20개 키워드를 추출한 〈표 4-4〉의 결과와도 경향은 동일하다.

[그림 4-6] 전문가 설문조사 키워드에 대한 단어 구름

〈표 4-4〉 전문가 설문조사 출현 빈도 기준 상위 20개 키워드

키워드	출현빈도	키워드	출현빈도
기술	111	성별	64
차별	99	이슈	61
경제	98	규범	61
페미니즘	88	확대	60
일자리	87	분배	58
디지털	83	긍정	57
노인	81	상황	56
정책	79	폭력	55
성 소수자	70	격차	55
저출산	65	강화	55

[그림 4-7]은 전문가 설문 답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1-mode 네트워크를 그린 것이다. 앞서 단어 구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 분배, 차별, 경제, 페미니즘 등의 키워드가 비교적 많은 다른 키워드와 연결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기술과 연결 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 키워드로는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한 “인구 구조”, 자녀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부담”, 경제적 양극화와 연계되는 “일자리” 등의 하부 네트워크와 연계가 되고 있었다.



[그림 4-7] 전문가 설문조사 키워드 네트워크(1-mode)

분배와 관련하여서는 성 소수자, 차별, 성 규범 등으로 이어지는 “사회 구조”와 관련된 네트워크 및 남녀 양극화, 격차 등으로 연결되는 “소득”과 관련한 네트워크가 주요하게 연결된 네트워크로 분석되었다. 특히, “페미니즘”은 차별, 격차, 성 소수자 등의 키워드를 매개한 것으로 볼 때 성평등 및 여성 권익의 향상을 위한 주요한 이념적 수단으로 역할하고 있음을 네트워크상에서 추정해 볼 수 있었다.

1-mode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전문가들은 인구구조, 기술발전, 일자리 등의 이슈가 성평등적 관점에서 미래 정책의 설계 및 개선 과정에 고려해야 할 중

요한 이슈라고 응답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정책적·제도적 개선이 미흡할 경우 분배, 양극화, 성차별적 상황과 페미니즘이 맞물려 사회적 갈등과 관련된 주변 키워드(혐오, 운동, 악화 등)의 영향이 강해질 수도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키워드 네트워크 간 중심성(centrality) 분석을 위해 연결(degree)중심성, 매개(betweeness)중심성, 근접(closeness)중심성, 위세(eigen-vector)중심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결중심성은 이슈를 장악하고 있는 중심 키워드를 나타내며, 매개중심성과 근접중심성은 네트워크서 내에서 이슈와 이슈를 매개하거나, 특정 이슈와 관련하여 같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이슈들을 나타내준다. 마지막으로 위세중심성은 네트워크상에서 중요도가 높은 키워드와 연결되어있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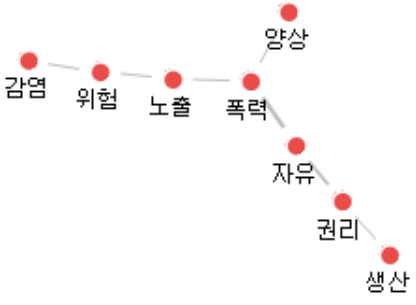
먼저 연결중심성은 기술, 정책, 페미니즘, 강화, 경제, 성별, 일자리, 제도 등의 단어가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 경제, 일자리 등은 사회, 경제 변화와 관련한 성평등 관점의 우려를 나타낸 것이고, 정책, 페미니즘, 강화, 제도 등은 이에 대한 미래 정책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보인다. 네트워크를 통해 살펴본 주요 키워드의 해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매개중심성과 근접중심성을 통해 살펴본 키워드 역시 연결중심성과 크게 양상은 다르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폭력” 키워드가 상위 순위에 등장하는 특징을 보였다.

〈표 4-5〉 전문가 설문조사 키워드 중심성 분석 상위 20개 키워드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위세중심성	
기술	0.102819	기술	0.073556	기술	0.438687	결정	0.463484
정책	0.087894	정책	0.063837	경제	0.432687	의사	0.390295
페미니즘	0.082919	강화	0.053815	페미니즘	0.417652	자원	0.366019
강화	0.08126	일자리	0.049541	강화	0.417362	경제	0.36192
경제	0.079602	경제	0.046901	정책	0.417073	동등	0.348253
성별	0.079602	페미니즘	0.046366	성별	0.414484	분배	0.240656
일자리	0.076285	제도	0.042197	제도	0.411363	규범	0.161113
제도	0.063018	성별	0.039572	영역	0.411082	차별	0.157039
상황	0.059701	상황	0.0336	일자리	0.409123	활동	0.150179
확대	0.059701	저출산	0.031675	확대	0.404988	가치	0.108147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위세중심성	
차별	0.058043	차별	0.031321	상황	0.403628	기술	0.077831
긍정	0.056385	디지털	0.028689	저출산	0.403628	구조	0.073835
디지털	0.056385	확대	0.027889	안정	0.401739	영역	0.070656
생산	0.054726	집단	0.026962	차별	0.401471	소득	0.070508
저출산	0.054726	방향	0.025738	노인	0.399868	표현	0.067502
삶	0.053068	삶	0.024343	인식	0.398807	참여	0.065221
집단	0.05141	영역	0.024199	개인	0.397488	평가	0.063953
개인	0.049751	폭력	0.023783	생산	0.396439	노인	0.063845
영역	0.048093	개인	0.023637	참여	0.394099	안정	0.063171

상대적으로 출현 빈도가 높은 주요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표시한 이유로 [그림 4-7]의 네트워크에는 “폭력”과 관련한 네트워크가 없어, [그림 4-8]에 관련 세부 네트워크를 별도로 나타내었다. 감염, 위험, 노출, 양상, 자유, 권리, 생산 등의 키워드를 폭력이 매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전문가의 답변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여성 종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콜센터 등의 직업 특성에서 오는 차별 및 감염병으로 인한 실업, 가정 경제의 파탄 등이 젠더 폭력으로 변질될 상황에 대한 우려 등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앞의 키워드들이 폭력의 원인과 관련한 상황들이라면, 자유, 권리 등은 이러한 폭력적 상황으로부터 성평등적 관점의 접근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의 마련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규범적 키워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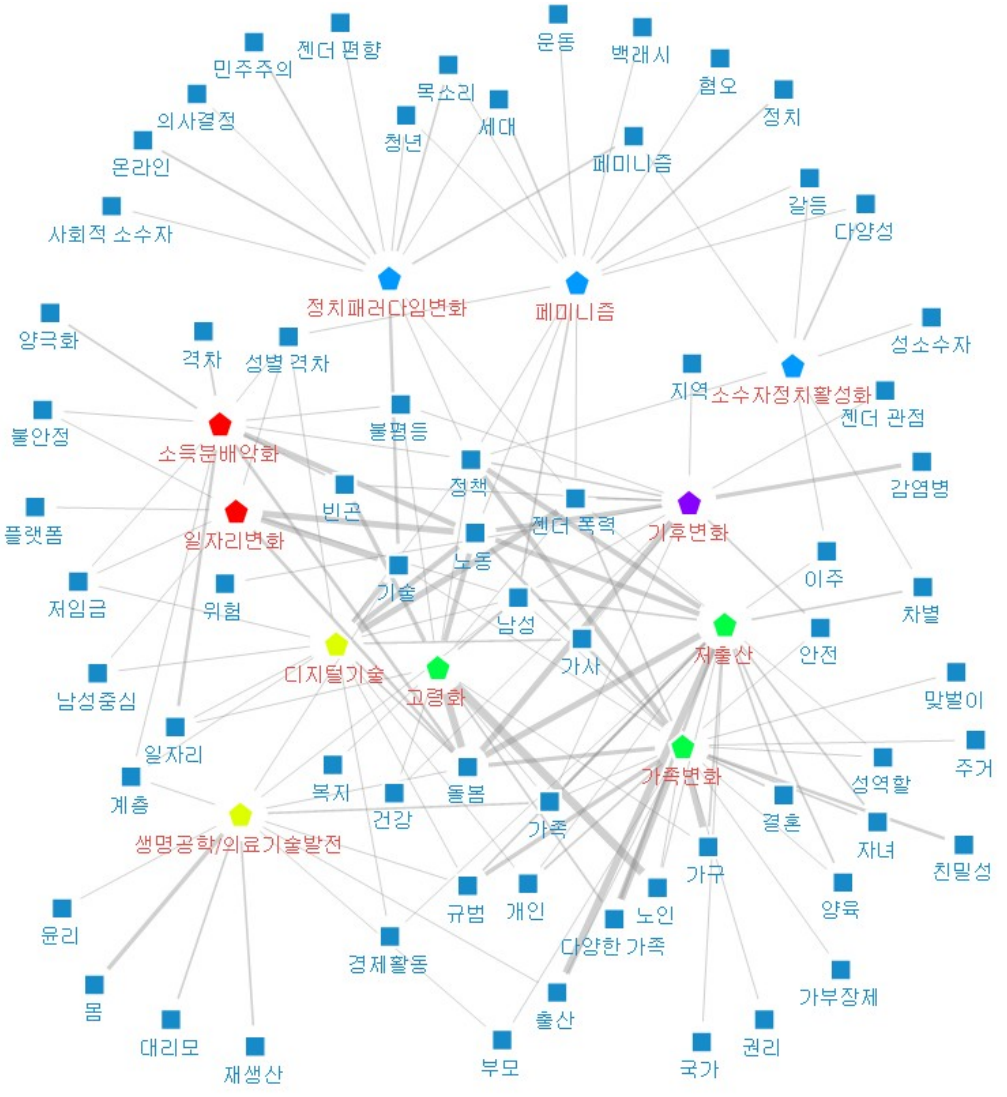


[그림 4-8] ‘폭력’ 관련 세부 네트워크

마지막으로 [그림 4-9]는 11개의 영향 요인과 이를 구성하는 세부 키워드를 네트워크로 표시한 것이다. 우선, 대다수의 11개 영향 요인과 연관성 있는 공통 키워드의 등장이 두드러진다. 즉, 네트워크의 중심에 모여 있는 키워드들로 불평등, 빈곤, 기술, 노동, 정책, 젠더 폭력, 남성, 가사 등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키워드 간 분석과 키워드 출현 빈도를 통해 살펴본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복지, 건강, 돌봄, 가족, 규범, 개인, 경제활동 등 고령화, 생명공학, 가족 변화의 영역과 주로 연관성을 갖는 키워드도 네트워크상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각 주요 영향 요인별 키워드를 살펴보면, 디지털 기술 관련 저임금, 남성 중심, 일자리, 계층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남성 중심의 경제구조 등에 대한 여성의 상대적 차별 등에 대한 우려가 보인다. 이는 일자리 변화, 소득분배 악화 영향 요인과도 주로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는데, 즉, 앞서 언급한 그러한 일자리, 경제구조의 문제가 성별 양극화를 더욱 악화할 수 있으므로 성평등적 관점의 정책 접근이 필요한 분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에서는 소수자, 청년, 젠더 편향 등 상대적 소수, 사회적 약자로서 정치적 의사결정에 활발히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페미니즘, 소수자 정치 활성화 등의 영향 요인과 관련하여 다양성, 소수자, 젠더의 목소리가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다양성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4-9] 11개 영향 요인과 키워드 간 네트워크(2-mode)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감염병이 사회, 경제적 모습을 전례 없이 바꾸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이 젠더폭력, 불평등 관점으로 나타나는 점과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가사, 돌봄에 대한 책임을 상대적으로 여성의 몫으로 전가하는 점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상으로 성평등 전문가의 델파이 설문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미래 정책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여전히 경제, 사회 변화 속에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평등과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디지털 전환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급변이 이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하거나 고착화할 수 있음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4절 2040년 미래 성평등 전망

1 2040년 예상되는 성평등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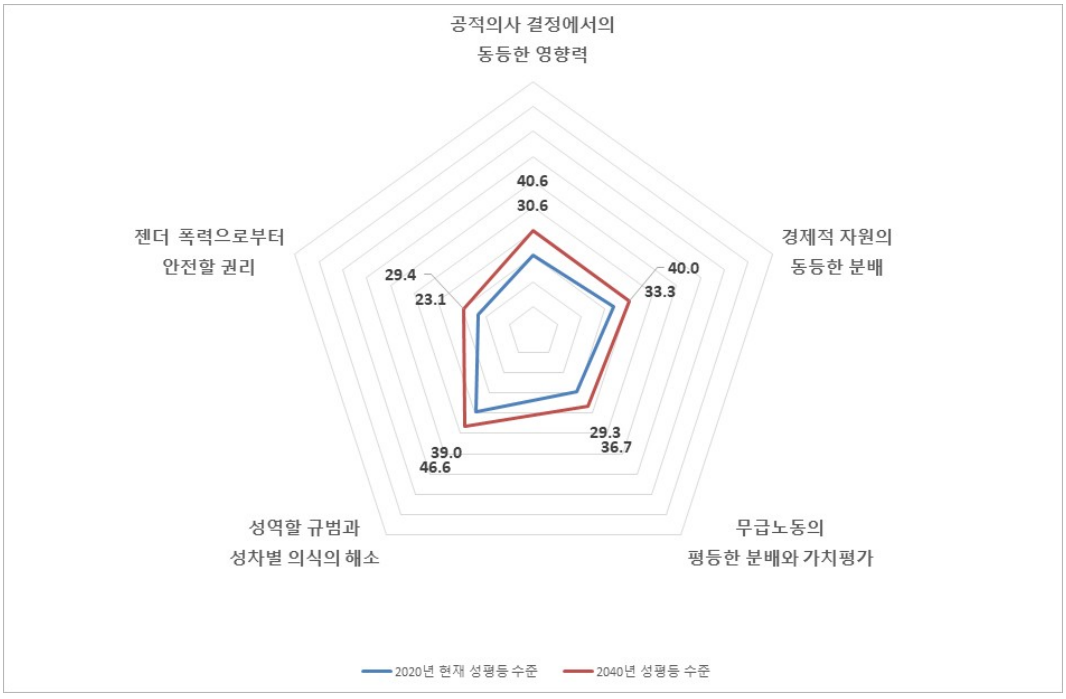
정책이나 제도적 노력이 현재와 같다고 가정하고, 거시환경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2040년 예상되는 성평등 수준의 전체 평균 점수는 38.7점으로 성평등 수준 '약간 낮음(30점~50점)'에 해당한다. 2020년 전체 평균값인 31.1점과 비교할 때 약간 증가했지만 그 폭이 미미하여, 전문가들은 2020년 현재의 낮은 성평등 수준이 향후 20년간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평등 영역별 2040년 성평등 수준의 순위는 공적 의사결정에서의 동등한 영향력 차원의 증가 폭이 다소 크다는 점을 제외하면, 2020년 현재 성평등 수준과 대체로 유사한 패턴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가 46.6점(2020년 현재 39.0점)으로 가장 높고, 공적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영향력은 40.6점(2020년 30.6점),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40.0점(2020년 33.3점),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36.7점(2020년 29.3점),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29.4점(2020년 23.1점) 순이다. 2040년의 성평등 상황을 전망해 보면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측면에서 성평등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자원과 영향력은 여전히 불평등한 상황이 지속되며, 젠더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영역별 변화의 정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50점 미만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전망되는 가운데에서도 2020년 현재 대비 가장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본 영역은 공적 의사결정에서의 동등한 영향력으로 2020년 대비 10점이 높았다. 2040년의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환경변화 중 다양한 측면에서 정치적 여건의 변화가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러한 전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젠더 폭력과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는 2020년 대비 각각 6.3점, 6.7점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대적으로 가장 변화가 느릴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구조의 변화 등 기술 발전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평가는 각각 7.6점, 7.4점 정도 향상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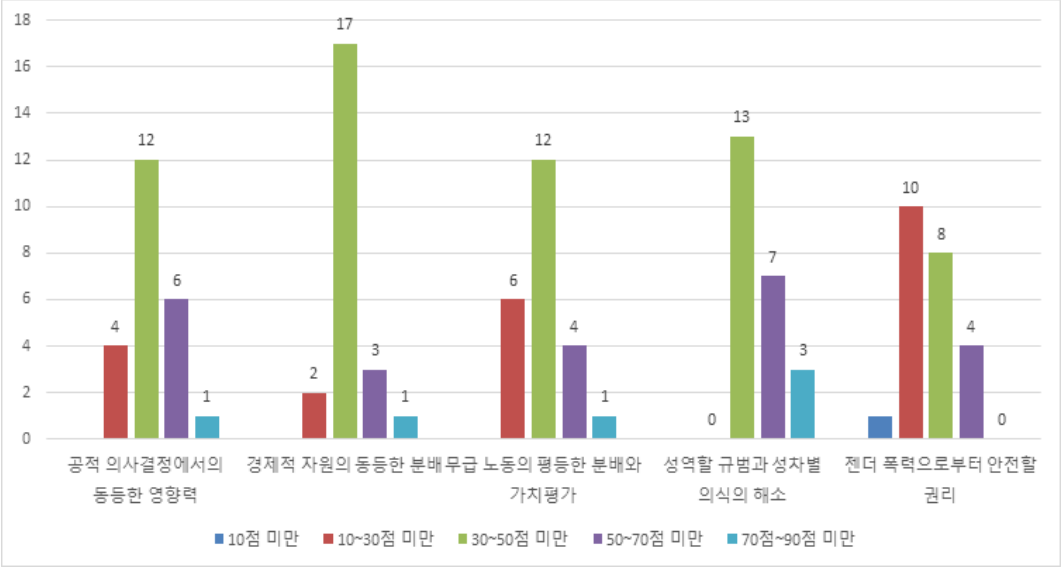
[그림 4-10] 2020년 현재 및 2040년 미래 성평등 수준 비교

2020년 현재와 2040년 미래에 대한 전문가 응답값 분포의 변화를 보면, 전체적으로 2040년에 대한 전망에서 값의 범위가 넓어지고, 최빈값에 응답이 집중되지 않거나 최빈값이 두 개인 경우도 있어 2020년 현재와 비교해 볼 때 2040년 미래 사회의 모습에 대한 인식의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2020년 10~30점 미만에 대한 응답 수가 30~50점 미만으로 이동하고, 50~70점 미만의 응답 수가 증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2040년은 2020년 현재보다 나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6〉 2020년 현재 및 2040년 미래 성평등 수준 점수 분포 비교

		공적 의사 결정에서의 동등한 영향력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20년	40년	20년	40년	20년	40년	20년	40년	20년	40년
평균(점)		30.6	40.6	33.3	40.0	29.4	36.7	39.0	46.6	23.1	29.4
최빈값(점)		30	60	30	30, 40	20	30	40	40, 50	20	20, 30
최댓값(점)		60	70	70	80	50	70	65	80	50	50
최솟값(점)		10	15	15	20	20	20	20	30	5	5
범위(점)		50	55	55	60	30	50	45	50	45	45
구간별 빈도 (명)	10점 미만	0	0	0	0	0	0	0	0	1	1
	10점~30점 미만	8	4	6	2	12	6	5	0	16	10
	30점~50점 미만	12	12	13	17	9	12	13	13	5	8
	50점~70점 미만	3	6	3	3	2	4	5	7	1	4
	70점~90점 미만	0	1	1	1	0	1	0	3	0	0

(단위: 명)



[그림 4-11] 2040년 미래 성평등 수준 점수 분포

2 영역별 성평등 전망에 대한 논거

가. 공적 의사결정에서의 동등한 영향력

공적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영향력은 주로 기술, 정치, 환경 영역의 변화로부터 영향받는 것으로 언급되었다. 즉, 공적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영향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의 배경에는 디지털 기술 기반 정치의 활성화에 따른 전통적 정치 패러다임의 쇠퇴, 페미니즘의 대중화, 사회적 소수자 정치의 활성화 등 정치 영역의 거시적 환경변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디지털 기술 기반 공론장의 형성, 직접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남성 중심의 연고형, 폐쇄형 정치는 점차로 쇠퇴할 것이다. 대신 온라인을 통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가시화되고 글로벌 연대의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경을 넘는 온라인 공론장의 등장은 여성 주체들의 목소리를 전파하는 배경이 되었고 “#미투” 태그 등 글로벌 온라인 연대의 양상으로 이어져 여성들의 세력화와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해본 경험이 이러한 낙관의 근거가 된다. 반면 디지털 공간의 남성중심성, 조직적 댓글, 가짜뉴스 등을 여과 없이 전달하는 온라인 공론장의 왜곡과 자본과 로비에서 자유롭지 않은 온라인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민주주의 원칙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다른 한편 교육 수준 증가에 따라 여성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할 것이며, 디지털 공간에서 여론을 조성하며 디지털 여론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익숙한 세대의 정치적 효능감 경험은 이들의 정치적 주체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페미니즘 대중화를 경험한 여성들의 젠더 이슈 관련 집단 활동의 일상화, 다양성과 젠더 이분법에 도전하는 소수자 정치의 활성화는 공적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흐름으로 평가했다.

21세기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환경과 재난 이슈는 환경운동에서 여성 리더십이 부각되는 효과를 낳아 여성 리더십, 페미니즘이 주목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기후변화와 재난은 궁극적으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목소리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등장한 여성 리더십과 페미니즘의 영향력은 향후 공적 의사결정 영역에서 더욱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소수의 엘리트 여성이 주목받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평등의 착시효과와 성평등 의제의 주변화, 소수자 정치와 페미니즘 사이의 갈등이나 우파 포퓰리즘과 결합한 페미니즘 보수화의 가능성, 여성혐오 및 성차별주의의 심화가 초래한 백래시의 등장 등은 미래 한국 사회 성평등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인식했다.

나.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에 대한 미래 성평등 전망과 관련하여, 경제, 기술, 사회 영역의 변화는 상호작용하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여성의 고학력화와 산업 및 임금구조 변화에 따른 가구 내 단독 생계부양자 구조가 쇠퇴하면서 맞벌이의 필요성이 커지고, 저출산으로 여성 노동력 수요가 증가하고,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이 나타나 상호작용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이로 인한 임금구조의 변화 역시 경제적 자원의 동등 분배 차원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특히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이 등장하고, 이 분야에 대한 여성 진출이 증가하여 여성들의 경제 사회적 지위와 직업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남성 중심 직장이었던 국방, 경찰 등의 직종에 여성 진출이 증가하면서 성차별적 조직문화의 변화와 성별 직종분리 완화의 가능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반면 디지털 기반 자동화의 증대로 인해 판매, 서비스, 단순 노무 등 기존의 전통적 여성적 일자리가 줄어들고, 여성들이 고용불안과 실직, 불안정 노동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증가하여 경제적 자원의 동등 분배 차원에서의 성평등이 오히려 악화할 가능성도 생겼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소득 불평등이 강화되면서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에 집중된 여성들의 노동시장 배제가 심해지는데, 이는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 노후의 빈곤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여성들의 경제적 취약성을 강화하는 사회적 기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여 여성들의 경제적 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화와 기술발달로 고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돌봄노동에 대한 낮은 가치평가와 돌봄노동의 여성화 현상이 지속하여 여성노동자들의 경제적 자원 획득

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고소득 전문 직종의 남성 편중 현상과 디지털 시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성별 직무분리 역시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차원에서 성평등 실현을 저해하는 주요 거시환경 영역의 변화로 간주하고 있었다.

다. 무급노동의 동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무급노동의 동등한 분배와 가치평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미래전망은 거시적 환경변화의 모든 영역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구성되고 있었다.

일례로 사회 및 기술 분야의 결합 양상을 들 수 있다. 저출산 및 가족의 변화와 기술발전은 전통적 성역할 규범의 변화를 촉진하고, 자동화는 가사노동 부담을 낮춰 전체적으로 여성의 가사노동 및 양육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기술 발전으로 인한 가사노동 경감의 효과는 기존의 불평등한 성역할 규범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지 않고 단순히 여성들의 무급노동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성평등 실현으로 이어지기 어려우며, 오히려 여성들의 기술관리 노동을 추가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한편 고령화와 기술 발전의 결합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경우 부정적인 양상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생명공학·의료기술의 발달은 고령화를 심화시키고, 고령인구 증가는 돌봄 수요의 증가로 이어져 현재에도 성별화되어 여성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는 돌봄노동에 대한 여성들이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디지털 기술발달로 인한 비대면 학습과 재택근무의 일상화는 노동과 생활의 경계를 흐려 여성들의 이중부담을 늘릴 것으로 평가하였고 직장에 대한 여성들의 종속도를 낮춰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양상에 더해 현재 예상하기 어려운 돌발변수가 발생한다면 거시적 환경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그 효과를 설명하는 경우의 수는 더욱 증가한다.

무급노동의 동등한 분배와 가치평가에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거시환경 요인들의 복잡한 효과는 높은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미래연구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무급노동의 동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영역은 그 불확실성과 다양한 가능성의 정도가 다

른 성평등 영역에 비해 더욱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성 평등한 무급노동의 수행과 새로운 가치평가 영역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논의해 왔으나 아직 실현하지 못한 성평등의 난제 중 하나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본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은 거시적 환경변화 또는 돌발변수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라.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이 영역의 미래 성평등 수준 전망에 중요하게 고려한 거시환경 변화의 영향으로는 사회, 기술, 정치 영역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다양한 가족의 등장, 페미니즘 대중화, 인간 증강 기술의 발전 등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성별분업의 완화, 독립적인 삶의 추구, 페미니즘 의식의 확장, 남성의 변화 등으로 이어져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부정적 영향으로는 전통적 성역할 규범이 변화하는 데 따른 반작용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증가, 디지털 사회 젠더 및 소수자 편견을 답습하는 알고리즘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성차별적 지식의 재생산, 과학 기술의 남성중심성 지속 등에 대한 의견들이 제출되었다.

마.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는 2040년 미래에도 가장 전망이 어두운 성평등 분야이다. 최근 급속히 증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려와 심각성은 기술 영역의 거시환경 변화가 젠더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에피소드적 섹슈얼리티의 증가, '가족'의 법적, 제도적 틀이 없는 성적 친밀성과 친밀한 관계의 추구, 섹슈얼한 만남을 위한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산업의 발달 속에서 딥페이크 포르노, 불법촬영, 사이버 괴롭힘, 스토킹 등 다양한 젠더 폭력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실직 등 노동시장에서 남성 실패와 젠더 폭력 증가와의 연관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

기술 영역의 영향력에 덧붙여 여성 폭력의 시장화(디지털 촬영, 편집 기술, 리얼돌 등), 여성의 몸, 감정에 대한 새로운 형식의 상품이나 산업이 생겨나고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더욱 보장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회 영역의 경우,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고령인구의 증가로 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돌봄노동자들이 남성 돌봄 대상자로부터의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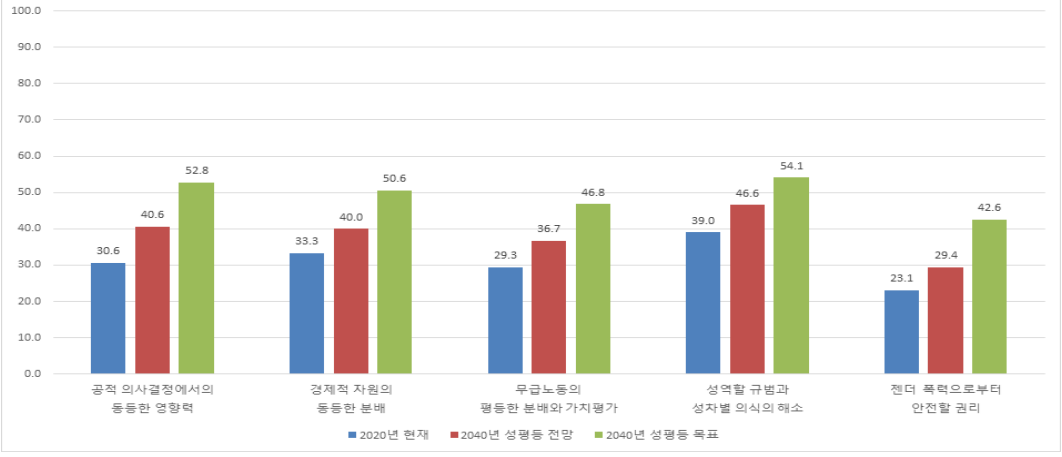
제5절 2040년 달성가능한 성평등 목표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4절에서는 현재의 정책과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거시환경변화의 효과만을 고려할 때 2040년 예상되는 성평등 수준에 대한 전문가 응답 결과를 분석했다. 이 절에서는 국가가 성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전개할 때 달성가능한 성평등 수준에 대한 전문가의 기대를 분석한다.

조사 결과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54.1점, 공적 의사결정에서의 동등한 영향력은 52.8점,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는 50.6점으로 다섯 개 영역 중 세 영역이 50점 이상의 "약간 높음" 수준이 될 것이고,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46.8점,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42.6점으로 두 영역은 50점이 채 못되어 여전히 "약간 낮음"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었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정치, 경제, 규범적 수준에서의 평등은 어느 정도 달성될 것이지만, 여성의 역할로 전가된 무급노동의 분배나 젠더 폭력의 문제는 정책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수준의 향상이 상대적으로 느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단위: 점)



[그림 4-12] 2020년 현재, 2040년 성평등 전망, 성평등 목표

특히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는 다른 성평등 영역에 비해 2020년 현재, 2040년 예상되는 성평등 수준, 2040년 달성가능한 목표치 모두 가장 낮게 설정되어 현재뿐 아니라 20년 후까지 지속적으로 가장 논의가 많은 영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예상되는 성평등 수준보다 목표치가 13.2점 더 높아서 정책적 노력의 성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공적 의사결정에서의 동등한 영향력,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평가는 2040년 예상되는 성평등 수준이 목표치와 비교할 때 대략 10점,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는 7.5점을 향상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절대적 수준에서 평등에 이르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는 요원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제5장

성평등 미래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제1절 공적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영향력

제2절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제3절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제4절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제5절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제1절 공적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영향력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2020년 현재 진단 및 2040년 전망

가. 2020년 현재 진단

앞서 지난 20년간 성평등 추이와 전문가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공적 의사결정에서의 동등한 영향력 측면에서 2020년 현재 성평등 수준에 대한 진단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국회의원, 장관, 3~4급 이상 공무원, 교장·교감 등 정치, 행정, 교육 등 영역에서 여성 비율이 증가하고, 판검사 등 법률, 경찰, 군인 등 전통적인 남성집중 영역으로 진출하는 여성도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점진적인 변화는 사회 전반적인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상승으로 여성의 교육 수준도 함께 상승한 사회 변화의 산물이다. 그러나 동시에 공공부문에서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해 1990년대 후반 이후 부분적으로 전개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 지표로 가시화된 영역뿐 아니라 그 밖의 많은 사회 영역에서 여성의 비율은 30%라는 임계치에 미달하고 있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관심과 이해가 공적 의사결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동안 불평등을 가시화할 수 있는 통계도 생산되지 않았다. 최근에야 관심을 받으면서 가시화한 민간 기업 임원 중 낮은 여성 비율은 견고한 남성중심 조직 문화와 유리천장의 견고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며,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양적 대표성의 측면에서도 필요한 과제가 적지 않지만, 이와 함께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것이 실제로 성평등 관점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대표성(substantial representation)이다. 여성이 진출한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의사결정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2020년 현재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전반적 평가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남성 다수 영역으로 진출한 여성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의 권한과 자원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 대표성보다 상징적 존재로서 생물학적 '여성'을 활용하는 시행 방식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나. 2040년 전망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전통적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페미니즘의 대중화에 따라 시민사회 내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늘어나고, 공적 의사결정에 대한 여성의 영향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은 제도 정치권 내에서 자신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찾지 못하는 여성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 공간을 제공하고, 제도 정치에서 성평등 의제가 중심적 위상을 차지하도록 만드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이는 다시 제도 정치권을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와 여성 정치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페미니즘 대중화의 효과로서 성 불평등 문제 해소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표방하며 여성이 주축이 되어 구성하는 정당 정치, 성평등 의제를 당론의 중심에 놓는 정당의 세력화도 기대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저성장의 장기화, 기후변화와 재난 등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위기가 지속하면서 당면한 긴박한 위기 자체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성평등 의제는 주변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최근 코로나에 대한 대응에서도 나타났듯이 남성 중심의 의사결정은 여성이 경험하는 불평등과 위기를 주변화함으로써 그동안 이루어 온 성과가 후퇴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사회 전반의 소득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여성들 내부 양극화도 강화되어 '여성'이라는 집단의 단일한 이해를 정의하는 것은 점차로 더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여성들 내부에서도 소득 수준 및 직업 지위, 장애, 출신 국가, 지역, 학력 등에 따라 성평등에 대한 이해와 욕구, 우선시하는 정책 수요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 소수자, 이주여성, 비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정치의 활성화는 한편으로는 인권 개념의 확장, 폭력과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과 서로 경쟁하는 소수자로 보는 경향도 등장하면서 페미니즘 운동을 잠식하거나 젠더 정치가 약화할 가능성도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각자도생의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가 심화되면서 능력주의 신화에 기반한 공정성 개념이 확산하고 성평등 정책이 이익집단 갈등의 장으로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

2 단기적 정책 과제와 미래 정책 방향

가. 단기적 정책 과제

1) 다양한 영역의 의사결정직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도입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여성 비율 확대를 위해서는 국회, 행정, 사법, 교육 등 공공부문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민간 부문까지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은 중앙 및 지방 과장급 이상, 공공기관 임원 및 관리자, 지방 공기업 관리자, 국립대 교수 등 12개 분야에 대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사립대학이나 기업 등 민간영역으로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별다른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간기업 관리직에서 여성 비율은 공공부문보다 더디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현재 상장법인 임원 중 여성 임원 비율은 4.5%(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6.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8년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및 상장법인의 임원 성별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고, 2020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기업은 이사회 이사 전원을 특정 성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향후 기업 이사회 구성에서 여성 임원 비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비교 지표를 통해 볼 때 기업 이사 중 여성 비율은 2019년 현재 3.3%로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이며 이는 OECD 평균 25.4%[21]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과 유사한 방식으로 민간기업 여성 임원 비율 목표제를 도입하여 관리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그동안 논의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 대한 강제력이 가장 낮은 수단으로는 정부가 목표제 참여 기업과 협약을 맺고 여성 비율 확대를 위한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몇 해 전에 사회적으로 논의된 바 있으나 시행되지 못한 공적 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와 같은 기업 투자 지표에

21) The Economist, 「The glass-ceiling index」, https://infographics.economist.com/2020/glass-ceiling/ (최종 검색일: 2020. 11. 20.).

‘이사회 여성 비율’과 ‘관리자 여성 비율’을 추가하는 방안(강민정 외, 2018: 146)도 추진해야 한다.

다양한 공적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영향력 확보를 위한 이러한 노력은 전반적인 성평등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의 정치적 요구와 관심을 반영하는 민주적 정치와 공공정책, 기업의 성과 제고에 필수불가결한 요인이 될 것이다.

2) 여성의 실질적 대표성 보장

남성중심적 의사결정 영역에서 여성 비율의 양적 확대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로 진출한 여성들이 성 불평등 문제 해결과 성평등의 증진을 위한 의사결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생물학적 여성이 아니라 젠더 이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여성들의 진출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들은 단순히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이유로 젠더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젠더 전문성은 “생물학적 여성”이 아닌 성 불평등 문제의 구조적 원인과 유지·재생산 기제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는 점이 여성 대표성 보장을 위한 정책에서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다양한 의사결정 구조 내에서 성별 비율에 대한 규정은 양적인 비율뿐 아니라 “젠더 전문성”을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자격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를 위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제21조에 근거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 각종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법률이나 조례를 개정하고 여성 위원 비율 확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데, 위원의 자격 조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자격 조건에 “성평등에 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공적 의사결정 지위에 오른 여성들의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정의함으로써 양적 확대에 집중함으로써 간과되는 실질적 영향력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미래 정책 방향: 포용 민주주의(inclusive democracy)의 제도화

2040년 예견되는 다차원적 정치환경의 변화가 공적 영역의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과 젠더 이슈에 대한 정치적 관심의 확대를 제한하는 요인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한편으로는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 증가라는 긍정적 전망,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양극화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이 더욱 주변화될 부정적 전망을 동시에 고려할 때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접근은 사회불평등의 다차원적 속성에 대한 이해에 기반할 필요가 있다. 성별은 사회불평등의 핵심적 차원이지만, 이 외에도 사회경제적 지위, 장애, 출신 국가, 성적 지향 등 다양하다. 전문가들은 “공적 결정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구성원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자기지배 원칙이 정부와 민간을 총망라한 모든 의사결정 단위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점을 장기적인 정책 방향으로 제안했다.

현재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공적 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이 미흡하여 2040년 성평등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 의사결정직으로의 여성 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장애인, 성 소수자 등 사회불평등의 다중적 속성을 고려한 대표성 제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정체성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성별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 장애,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차원의 사회 불평등 문제와 교차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조사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아이디어는 포용 민주주의(inclusive democracy)로 개념화할 수 있다. 포용 민주주의는 “소수의 엘리트가 정치적 의사결정을 독점하지 않고, 의사결정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시민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사회”(마경희 외, 2017: 83)이다. 이때 사회적 소수자는 소수의 엘리트가 결정하는 복지 급여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시민이 된다.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해서는 이를 위한 합리적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제2절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1 2020년 현재 진단 및 2040년 전망

가. 2020년 현재 진단

지난 20년간 여성 고용률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었고,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여성 취업 분야는 과거에 비해 다양화되었다. 이와 함께 고소득 전문 직종으로 진출하는 여성이 증가한 것도 긍정적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용상 성차별, 유리천장,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불이익, 경력단절, 성별 직종분리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다. 높은 성별 임금격차, 여성 노동자 중 저임금, 불안정 직종 노동자의 높은 비율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성별화된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교육의 성별격차가 해소되어 주관적 평가가 개입할 여지가 적은 자격시험 등을 통해 고소득 전문 직종으로 진출하여 남성 중심 조직에서 생존하는 데 성공한 일부 여성들의 신화가 평등의 상징처럼 부각하여 착시효과를 일으키는 현실의 문제를 지적했다. 점진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여성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점 등, 여전히 많은 여성이 열악한 일자리에 놓여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부모의 경제적, 문화적 자본이 자녀의 교육을 통해 세습되고, 학력에 따른 노동시장 내 지위 격차로 이어져 극심한 사회 양극화가 재생산되는 상황에서 이미 고착화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여성 내부 계층화는 노동시장 정책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사회, 경제적 자본이 많은 계층의 여성은 성별에 따른 제약 조건 없이 교육을 받고 부모로부터 세습한 경제·문화적 자원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내에서도 성공적으로 생존하고 있으나, 더 많은 여성들은 서비스, 성산업, 돌봄 등 저평가된 여성 직종에서 성차별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결국 성평등의 수혜는 상층부, 성 불평등의 불이익은 하층부 여성에게 집중하여 여성 내부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나. 2040년 전망

미래의 환경변화가 소득을 비롯한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전망이 교차했다.

저출산과 가족의 변화는 성 불평등 문제의 핵심 요소로서 성별분업에 기반한 이성애 중심 핵가족의 기능을 약화함으로써 자녀양육, 돌봄에 대한 여성의 부담을 완화하고, 남성과 동등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은 업무의 공간적 제약을 해소함으로써 여성의 유연한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음악, 영화, 디자인 등 여성의 감수성이 유효한 산업 영역이 기술기반 산업과 접목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여성 진출을 확대할 여건도 조성될 것이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경찰, 국방, 보안 등 남성 중심 직업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도 증가하여 궁극적으로 성별 직종분리 현상이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기술혁신과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방식의 일자리의 증가에 따라 여성 노동환경의 질적 수준이 크게 저하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적지 않았다. 인공지능, 자동화 등 기술혁신에 따라 서비스, 사무, 단순 노무 등 전통적인 여성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고 긱 경제의 확대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노동의 증가로 노동계약 없는 불안정 일자리로 여성이 유입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여성 노동 환경의 수준 저하는 결국 성별 소득격차를 심화하고, 여성을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놓이게 만든다. 더욱이 이른바 '4차산업혁명'에 따라 정보통신, 생명의료공학 등 신산업 분야 일자리가 새롭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핵심 기술 분야의 성별 격차로 인해 기술노동, 디지털 산업 내에서 새로운 방식의 성별 분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제시하였다. 정보통신, 기술혁신 분야에 대한 의사결정 및 핵심 기술 직종의 남성중심성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에서도 남성은 중심부, 여성은 주변부 노동에 머무를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도 위계적 성별 분리는 지속할 전망이다.

2 단기적 정책 과제와 미래 정책 방향

가. 단기적 정책 과제

1)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접근

성별화된 노동시장 구조와 성별 임금격차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경제적 자원을 획득할 기회를 차단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을 악화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의 위치는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쉬우며, 이는 노동시장 및 가족 내 성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지속하는 주요 기제로 작동하기 때문에 성별화된 노동시장 구조와 성별 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은 1990년대 후반 고용상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에서 출발했으나, 여성 인적자원 활용의 필요성, 경력단절 여성 등 직접적인 취업지원 정책을 강화하면서 성차별 근절을 위한 정책의 비중은 급격히 낮아졌다(마경희 외, 2017, p. 47). 지난 몇 년 사이 민간 대기업뿐 아니라 공기업의 채용에서 공공연하게 채용상 성차별이 있음이 드러났고 직장 성희롱 피해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미흡했고,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만큼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법, 제도적 대응은 거의 없었다.

성차별, 성희롱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이 최근에야 마련되기 시작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고, 성차별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절차 마련을 위한 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10.20.).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고용상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고용상 차별이 직접적이고 노골적이기보다는 명확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간접차별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의 정립이 중요하다. 노동위원회가 성차별, 성희롱 구제 업무를 실제 시행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성차별, 성희롱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노동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 등 인프라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일-생활 균형의 탈성별화, 탈계층화

전문가들은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유연근무, 재택근무가 탈성별화, 탈계층화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 중심적 삶에서 가족에 대한 책임을 비롯한 다양한 삶의 영역 간 균형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일-생활 균형 제도는 처음에는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제도에서 출발했다. 2007년 3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도입, 2014년 육아휴직 특례제도 도입 등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를 위한 제도가 확대되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다양한 일-생활 균형을 보장하는 제도를 점차적으로 확대·도입하였다.

일-생활 균형 제도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급여 수준이 확대된 것은 자녀 양육, 돌봄 등 가족에 대한 책임 있는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이용자가 뚜렷한 성별화, 계층화된 양상을 띠는 한계가 있다. 즉, 이용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이며, 고용조건이 양호한 정규직에 집중되어 있다. 육아휴직 특례제도의 급여 수준을 확대하면서 남성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기업, 공공부문의 정규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에게 제한되는 경향이 있고, 중소기업에서는 실질적인 활용도가 낮아 계층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 안정적 직업을 가진 근로자 뿐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근로자들을 위한 일-생활 균형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성별 격차 해소

기술혁신에 따른 자동화는 전통적인 여성 일자리를 감소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이미 과학기술 분야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직업군에서 수직적, 수평적 성별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보통신, 생명의료공학 등 신산업 분야 일자리가 새롭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핵심 기술 분야의 성별 격차로 인해 기술노동, 디지털 산업 내에서 새로운 방식의 성별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혁신 분야에 대한 의사결정 및 핵심기술 직종의 남성 중심성으로 인해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에서도 남성은 중심부, 여성은 주변부 노동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전통적으로 남성 집중 분야라는 특성상 임신·출산·양육 등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장

시간 근로 문화,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정보통신 분야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강도 높은 노동 등의 요인은 여성의 진입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산업 분야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일-생활 균형 정책이 정착되지 않는 한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에 진입한 여성의 경력단절, 성별 분업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본다.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중고등학교에서의 성별화된 전공 선택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과거에 비해 이공계 분야에서 여학생의 비중은 높아졌으나, 공학 분야에서의 성별 격차는 여전히 크다. 성별화된 전공 선택은 새롭게 부상하는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로 여성 진입을 제한하는 첫 번째 장벽이 된다. 스템(STEM) 분야에 여학생이 진입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나. 미래 정책 방향: 전통적 고용관계 기반 사회보험제도의 재설계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은 대면적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분야에서의 대량 실직과 더불어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긱 경제(gick economy) 등 새로운 불안정 노동의 증가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도 가속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플랫폼 노동, 긱 경제의 활성화에 따른 불안정 노동자의 증가는 전통적 노-사 관계에 기반한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확대할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등 고용 형태가 다변화할 것이다. 일하는 방식에서 시간과 장소 귀속성이 약화하면서 한 사람이 여러 직업을 가지므로 고용주를 특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용 관계가 분명한 임금 노동자를 전제로 설계된 사회보장제도는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처하게 될 실업, 고용불안, 빈곤, 재해 등 소득 상실의 위험에 적절한 안전망을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노대명, 2020b, pp. 31~32).

코로나19를 계기로 불안정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전 국민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자격 중심' 사회보험 시스템을 유지한 상태에서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을 단계적으로 자격을 확대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고용보험 확대를 통해서만 해소하려는 접근도 제한적이다. 실업뿐 아니라 산업재해까지도 포괄해야 한다. 노동

시간, 노동방식, 노동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하나 이상의 일자리를 가지는 노동자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동자 지위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사회안전망이 보호하는 사회보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최현수, 2020. 9. 8.).

제3절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1 2020년 현재 진단 및 2040년 전망

가. 2020년 현재 진단

가사와 양육, 돌봄 등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급노동의 분배와 가치평가는 전문가들로부터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다음으로 성평등 수준이 낮은 영역이다. 무급노동을 여성의 역할로만 여기지 않고, 남성의 참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데 대한 규범적 공감대를 형성한 점, 최근 남성의 자녀 양육 참여 확대를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결과 남성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절대적인 수준에서 여성 무급노동의 총량이 남성에 비해 과도하게 많으며,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는 안정적인 노동 조건에 있는 노동시장 상층부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경제활동 참여와 무관하게 가사와 돌봄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여성에게 있다는 사회적 인식과 이에 기반한 실천에서 근본적인 변화는 지체되어 있다. 장시간 근로 문화와 가족 책임이 없는 노동자를 전제하는 조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가족 돌봄 휴가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실질적 활용은 대부분 여성에게 집중되고 이는 다시 조직 내에서 여성을 주변화하는 논리로 작용하는 악순환의 고리도 등장하고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가족 돌봄 휴가 등을 당연시하는 조직 문화는 계층화하여 대기업, 공공기관의 정규직 근로자 이외의 사업장 근로자까지 확장하지 못하고 있다. 무급노동의 일차적 책임에 대한 규범과 실천, 그리고 남성 중심 유급 노동시장 환경의 복합적 영향이 OECD 국가 중 무급노동시장 성별 격차가 가장 큰 국가인 점에서 드러난다. 이는 다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경력단절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성 불평등의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영유아 보육,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확대에 따라 아동과 노인 돌봄에서 공적 서비스가 강화되었다. 이는 가족 내에서 여성이 수행하던 돌봄 부담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사회화된 돌봄의 가치는 적절한 방식으로 평가되지 않았다. 보육교사, 장기요양보호사 등 공적 영역에서 아동과 노인을 돌보는 노동자들은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 조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 2040년 전망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영역의 성평등에는 저출산, 가족의 변화, 로봇 자동화 기술의 발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소자녀화 및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가족의 부상, 로봇 기술의 발전은 여성이 집중적으로 수행하던 가사와 자녀 양육 부담의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노인 인구의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일상화로 인해 여성의 돌봄 부담은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보다 우세했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대비한 돌봄 로봇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정서적 교감과 관계 지향적인 노인 돌봄의 특성상 로봇 기술이 노인 돌봄을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염병으로 인한 공적 돌봄 공백,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건강악화 등 재난은 일상생활의 유지와 존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드러났듯이 당분간은 가족 내 여성의 돌봄 부담이 증가하고, 경제활동 참여가 제약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성애 핵가족이 감소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이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구성원을 돌볼 가족 자원은 부족해질 것이므로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수불가결하다. 이에 따라 돌봄의 사회화는 더욱 진전할 것이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여성집중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를 통해 제공된다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돌봄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로봇 기술이 가사노동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과 관련해서는 기술관리 노동이 추가됨으로써 가사노동의 총량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거나 경제력에 따라 가사노동을 지원하는 로봇 기술활용 자체가 계층화할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2 단기적 정책 과제와 미래 정책 방향

가. 단기적 정책 과제

가) 필수노동으로서 돌봄의 재평가

최근 코로나19는 필수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필수노동자는 "국민의 생명·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서비스를 중단없이 수행하는"(관계부처합동, 2020: 1) 노동자로 정의하고 감염으로부터의 안전, 과로 방지 등 근무 여건 개선, 안전망 확대 등의 보호 대책이 마련되었다. 보건의료, 택배, 배달, 환경미화원 등과 함께 돌봄 서비스 종사자도 필수노동자로 정의하고 보호와 지원 대책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코로나19가 계기가 되어 돌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의 필수노동자 정의는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재난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재난상황에서 돌봄의 욕구가 더욱 커지고 긴박해지는 것은 물론이며 아동, 노인, 장애인, 환자 등 타인의 돌봄 없이 스스로 자신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민에게 돌봄은 항상 필수 서비스이다. 영유아기, 아동기 동안 육체적, 정신적 성장을 위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면 삶을 유지할 사회·경제적 자립도 어려워진다. 일시적 질병 또는 영구적으로 장애를 가진 시민은 타인으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면 생존 자체가 위협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타인의 돌봄 없이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점에서 돌봄 욕구는 보편적이며 필수적이다. 재난 위기상황에서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모든 시민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노동이다.

이처럼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노동임에도 여성 집중적으로 사회화된 돌봄노동의 가치는 평가절하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페널티도 크다. 보육교사 중 99%, 요양보호사 중 95.1%, 가사 및 육아 도우미 중 99%가 여성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들은 저임금,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 등 열악한 조건하에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열악한 돌봄 조건은 '좋은 돌봄'을 주고받을 권리를 제한하며,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 모두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만든다.

정부는 '좋은 돌봄'의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에게 무급으로 전가되어 온 돌봄의 책임을 탈가족화해야 하고, 탈가족화된 돌봄의 가치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보상이 필요하다. 돌봄은 노동이지만 타인의 복리를 우선하며 정서적·감정적 유대를 포함하는 특수한 형태의 노동이며 성과를 화폐 가치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전형적 유급노동과 달리 규범적, 사회적 가치평가가 중요한 노동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마경희, 2020).

타인의 건강과 복리, 욕구에 우선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임금 및 근로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돌봄노동자는 안정적으로 소득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보험 적용, 건강권, 휴가권 등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돌봄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교육 훈련과 경력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2)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공적 돌봄 체계 정착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생긴 공적 돌봄 체계의 균열이 여성의 무급 돌봄노동 부담을 가중하고, 경제활동을 중단시킴으로써 지금까지 이루어 온 성평등의 성과가 후퇴할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감염 위험으로 어린이 집, 유치원, 학교가 중단하거나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사회화된 돌봄 시스템을 중지시키고, 돌봄의 재가족화를 초래했다. 가족에게 떠맡겨진 돌봄의 대부분은 여성의 몫으로 할당되고, 육아를 이유로 하는 비경제활동 인구는 코로나 확진자의 등락과 연동하였다.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 육아가 원인인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잠시 확산세가 소강상태에 이르면 이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여 비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양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감염 예방 위주의 돌봄 서비스 정책은 지난 10년간 서서히 줄여왔던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쉽게 후퇴시킨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은 일시적인 재난으로 보기 어렵다.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주기적으로 반복하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일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는 보다 안전한 공적 돌봄 체계가 정착되어야 한다. 감염병 확산을 대비한 상시 방역 및 예방 체계를 일상화해야 하며, 감염 위험으로부터 돌봄을 제공하는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방역물품 공급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 미래 정책 방향: 돌봄경제(care economy)에 대한 투자

무급노동의 동등 분배와 가치평가 영역은 성평등 실현의 측면에서 가장 지체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영역 중 하나이다. 여성과 남성의 주된 일과 역할을 분리하여 성별에 따라 위계적으로 배치하는 근대적 성별분업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남성들의 가사 참여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이루어지는 현상은 '지연된 혁명(stalled revolution)', '미완의 혁명(unfinished revolution)'으로 명명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 돌봄에 내재화된 불평등과 부정의를 문제 삼고 돌봄의 우선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모든 인간은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타인으로부터의 돌봄을 통해서만 생존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돌봄 요구는 소득 상실보다 더 긴박하고 우선적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인정해야 한다.

최근 IL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돌봄 경제(care economy)에 주목하고 있다. 가사, 양육, 돌봄 등 가족 내에서 무급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은 화폐 가치로 환산되지 않지만,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뿐 아니라 사회재생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무급노동을 통해 거시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이다.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급노동이 가족 밖에서 이루어질 때에 GDP를 증가시켜 비로소 가시화된다(ILO, 2018, p. 37; 마경희, 2020, p. 73에서 재인용). ILO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은 무급노동의 76%를 수행하며, 전 세계 여성의 하루 평균 무급노동 시간은 1일 평균 4시간 25분으로 남성(1시간 23분)에 비해 3.2배 더 많다. 한국 여성의 무급노동 부담은 더 커서 전체 무급노동의 82%를 수행하며, 하루 평균 무급노동 시간은 남성의 4.8배에 이른다(ILO, 2018, p. 43; 마경희, 2020, p. 73에서 재인용). 전 세계 53개 국가 무급노동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이고 여성은 6.6%, 남성 2.4%이며, 한국의 경우 무급노동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이고 여성 7.1%. 남성 1.5%로 여성의 기여도가 전 세계 국가 평균에 비해 높다(ILO, 2018, p. 50; 마경희, 2020, p. 73).

UN Women은 오래전부터 지속한 돌봄의 위기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하는 상황에서 과감한 돌봄 경제에 대한 투자를 통해 돌봄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돌봄 경제에 대한 투자는 향후 인구 고령화 등 거시사

회환경변화에 따라 더욱 증가할 돌봄 수요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돌봄을 매개로 한 선순환 경제를 구축할 기회가 될 것이다. 공적 돌봄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획기적 투자는 일자리를 잃은 여성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회복을 견인할 동력이 될 것이며, 무급노동과 유급노동의 불평등한 분배를 개선함으로써 성평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UN Women, 2020, p. 2).

돌봄 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경제는 좋은 일자리로서 유급 돌봄노동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 시민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돌봄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 시민이 어떻게, 어떠한 조건하에서 분배할 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돌봄 관계에 있는 시민들의 참여는 돌봄으로 인한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나아가 돌봄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Tronto, 2013).

제4절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1 2020년 현재 진단 및 2040년 전망

가. 2020년 현재 진단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 해소는 5개의 성평등 영역 중 전문가 평가에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영역으로 평가되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전통적 성역할 규범이 완화하였고, 과거에는 당연시하던 노골적인 성차별적 관행이나 표현에 대한 사회 전반의 문제의식이 증가한 점이 긍정적 평가의 주된 논거였다. 특히 학교, 직장, 그리고 사회 전반의 뿌리 깊은 성차별적 관행에 도전하는 20~30대 여성들의 문제 제기를 고무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청년 여성에 비해 지체된 동세대 남성의 성평등 의식, 그리고 이로부터 비롯한 청년 남성들의 여성혐오와 높은 적대적 성차별주의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청년 남성들의 이러한 현실이 디지털 공간이나 온라인 게임 등에서 새로운 형태의 여성혐오, 성차별 표현, 여성비하와 적대적 태도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 전통적 성별 분업과 가부장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성세대의 변화 지체는 법과 제도,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또한 여성의 취업은 결혼이나 임신 출산과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필요성은 남녀 모두에게서 높은 동의를 얻었는데 이에 비해 양육의 일차적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전통적 사고방식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문제로 삼았다.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여성이 취업도 하고 자녀 양육도 책임지는 신전통적 성별 분업의 등장에 대해 우려했다.

나. 2040년 전망

저출산, 가족의 변화, 과학 기술의 발전, 페미니즘의 대중화는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저출산, 전통적 핵가족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성역할 규범, 성별분업이 완화하고 가족 내 역할과 독립적으로 삶의 경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있었다. 또한 과학 기술의 발전은 생물학적 성별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며, 이로 인해 여성과 남성의 성별 이분법을 새로운 젠더 규범이 대체할 것이다. 페미니즘의 대중화는 성평등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구심점으로서 성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확대하고, 사회 전반의 성평등, 인권 의식의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과도한 공정성, 기회의 평등에 대한 기대와 능력주의 신화가 중요해지면서 구조적 수준의 차별과 불평등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약화하거나 변질할 가능성도 나타났다. 페미니즘 대중화의 흐름 속에서 성 소수자, 난민,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혐오하면서 “생물학적 여성”의 이해만을 중시하는 페미니즘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등장한 것은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과도하게 생존 경쟁에 내몰린 청년 현실의 단면을 보여준다. 청년 남성의 여성혐오나 적대적 성차별주의 역시 부분적으로는 청년의 불안정한 현실의 산물이다.

전문가들은 2040년을 전망하면서 현시점에서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대비해야 할 문제로 디지털 기술에 의한 젠더 편향을 꼽았다. 기업의 직원 채용, 일상생활에서의 음성 서비스, 안면 인식 등 이미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내재한 차별과 편견은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사람의 지적 활동을 대신하여 인공지능을 수많은 의사결정에서 활용할 것이지만, 이미 불평등한 인간의 삶을 기반으로 수집한 데이터에 기반하면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고착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인공지능 개발자와 데이터 자체의 젠더 편향성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기술과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젠더 편향적 디지털 기술에 의한 일상의 지배는 불가피하며, 기존의 성불평등한 권력관계 재편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2 단기적 정책 과제와 미래 정책 방향

가. 단기적 정책 과제

가) 보편적 성평등 교육

2030 청년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성차별, 성 불평등, 젠더 이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젠더나 페미니즘 이슈는 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일상 대화나 토론의 주제이며, 이를 둘러싼 의견 대립과 갈등도 적지 않게 일어난다(마경희 외, 2020, pp. 242~243). 우리 사회 성 불평등 문제의 속성이나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에서 성별 격차도 커서 온-오프라인을 가로지르면서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 청소년 세대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갈등이 더욱 깊어질 수도 있다.

20~30대뿐 아니라 10~20대 세대에 이르기까지 재생산할 수 있는 젠더 인식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차별과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 유치원, 초중등, 대학교 등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성 불평등 문제의 구조와 이를 유지·재생산하는 사회적 실천과 관행을 이해하도록 하는 성평등 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 양성과정에서 역시 젠더 이슈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 하는 성평등 교육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

2) 가족 구성권 보장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추락하고 있는 한국의 출산율은 경기변동이나 가족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 성역할 규범 등 어느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매우 복합적인 사회변동의 산물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성세대가 생애 과정의 필수적인 과업으로 받아들인 결혼과 출산이 청년들, 특히 청년 여성들에게는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는 점이다. 전통적 성별 분업에 기반한 이성애 중심 가족 구성의 전형성이 이미 해체되고, 청년 여성들은 청년 남성과 마찬가지로 평생 노동을 중심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즉자적 지원을 통해 출생아 수를 증가시키려는 정책은 이성애 핵가족의 전형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친밀한 관계를 기획하는 청년들의 삶의 지향과 커다란 괴리가 있다. 저출산에 대한 대응은 출생아 수 증가를 목표로 하기보다

는 표준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생애 과정을 기획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청년들의 변화된 욕구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가족의 해체로 보면서 문제 삼는 경향이 적지 않으나,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으며 전통적 규범에 따르는 것보다 개인이 원하는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가족의 의미와 내용의 변화로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결혼이나 성관계가 아닌 인공수정을 통해 자녀를 출산한 연예인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가족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에 기반한 사람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러한 행동을 비난했으나, 가부장적 결혼과 가족제도에 비판적인 청년 여성들은 연예인의 선택을 지지하고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족에 대한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한다면, 혼인과 혈연 관계에 기반한 전통적 가족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복지체계는 개인 단위로 재편하여야 한다. 이성애 부부 중심의 주거 지원, 세대주에 대한 재난 지원금, 사회복지 급여 자격을 박탈하는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세제 지원 등은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를 비롯해 혼인과 혈연을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복지의 사각지대에 둔다. 혼인과 혈연이 아닌 방식으로 친밀한 관계를 주고받는 개인들이 재산, 돌봄, 가족 의례 등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도록 법·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3)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거시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전통적 이성애 중심의 성역할 규범이 점차로 와해할 것이라는 데에 전문가들은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였으나, 이를 대체하는 규범이 더 나은 규범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이성애 중심의 규범이 쇠퇴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규범이 인권과 평등의 가치에 기반하려면, 성별뿐 아니라 연령, 장애, 학력, 혼인상태, 출신 국가, 성적 지향 등 모든 형태의 차별, 복합적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법 앞의 평등과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는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은 2007년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한 이후 13년간 6번 발의(한겨레신문, 2020. 6. 29.) 하였으나 일부 보수 기독교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기를 반복해 왔다.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의 사유로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하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일부 기독교계 반대의 주된 논거이다. 그러나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주장이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종교의 자유가 양립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이준일, 2017, p. 69).

헌법상 보장된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기본적 권리 실현을 위한 법률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은 오랫동안 '동성애 찬반'의 문제로 축소·왜곡되어 오면서 생산적인 논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김지혜, 2017: 90)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다시 발의하였으나 여전히 동성애 찬반 프레임에 갇혀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한 토론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우려와 달리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의 동의 수준은 매우 높다. 2020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88.5%의 국민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며(국가인권위원회, 2020: 57),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현안조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도자료, 2020. 6. 15.)에서도 유사한 비율인 87.7%의 국민이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다양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시급한 과제가 틀림없다. '동성애 찬반'과 같은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시민의 권리를 일상생활에서 정착시킬 제도적 장치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 미래 정책 방향: 과학 기술의 젠더 편향 해소

인공지능의 젠더 편향은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는 개발자의 편향과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되는 데이터 자체의 편향에서 비롯된다. 어느 경우든 인공지능은 한 사회에 내재화된 편견과 차별의 정직한 반영물이다. 아마존의 채용 프로그램이 남성을 더 많이 선별해 내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은 남성을 선호해 왔던 채용 관행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이러한 편견에 내재한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어느 정도 전개하고 있으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공정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인공지능의 젠더 편향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알고리즘 설계의 공정성, 설명 가능성, 투명성 증진 등의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이를 실제 개발과 활용에서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예상한다.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기업의 영업비밀일 수 있는 알고리즘 공개 요구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한애라, 2019).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인공지능 연구 개발 및 관련 산업에서 여성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개발자가 가진 편견에 의한 인공지능의 젠더 편향을 감소할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로 여성 고용 비율을 포함하는 등의 방식으로 ICT, STEM 관련 기업에서의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한애라, 2019). 둘째, 성차별의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개관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술로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암묵적인 형태로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차별과 편견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발견하기 위한 도구로서 인공지능을 인식하는 것이다(한애라, 2019).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내재한 젠더 편향과 성별 격차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은 사회 자체를 성찰하는 수단이자 정의로운 방식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학 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주체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전문가, 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계층과 이해관계자 및 여성 소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과학 기술의 발전 자체를 가치중립적으로 보는 관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위계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제5절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1 2020년 현재 진단 및 2040년 전망

가. 2020년 현재 진단

젠더 폭력은 전문가들로부터 2020년 현재, 그리고 2040년 미래 전망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점수를 받은 영역이다. 직장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등 최근 몇 년 사이에 젠더 폭력 이슈가 급격하게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젠더 폭력은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물리적 힘의 불균형이 아닌 여성의 노동시장 내 취약한 지위와 남성의 성적 욕구에 관대하고,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는 남성 중심 문화 등 체계적인 불평등 구조의 산물이라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응에서 근본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여성의 몸을 놀이 문화로 소비하는 남성 문화는 디지털 자본주의와 결합하여 불법촬영물에 의한 여성의 성 착취와 젠더 폭력의 상품화를 가속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오프라인에서 전개했던 젠더 폭력이 디지털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 여성의 일상을 심각하게 통제하고 있다.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필수불가결한 일상적 삶의 일부가 된 만큼 수많은 여성들이 길거리, 공중화장실, 탈의실 등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공간에서조차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폭력의 발생률 자체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직장뿐 아니라 아주 사적이고 일상적인 공간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안전한 삶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부족하고, 젠더 폭력을 둘러싼 급속한 환경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법·제도의 문제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나. 2040년 전망

1990년대 후반 이후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를 도입했으나, 분절적 접근 때문에 법의 보호와 처벌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폭력이 점차로 드러났다. 소라넷, 다크웹, 최근에 N번방에 이르는 디지털 성범죄를 크게 사회문제로 인식하면서 뒤늦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도 마련하였다.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젠더 관계의 맥락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젠더 폭력은 더욱 심해지고 진화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진단이다.

젠더 폭력이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 산업의 재료가 되는 한 앞으로 디지털 공간에서의 젠더 폭력의 위험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저출산, 가족의 변화에 따라 이성애 기반의 결혼이나 가족 구성을 당연시 하지 않는 청년 여성들은 전통적 틀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성적 관계와 친밀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벗방, 일탈계, 익명채팅 등 에피소드적 방식의 섹슈얼한 만남을 위한 플랫폼 기술의 발전 속에서 자유로운 방식으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여성들의 시도가 성범죄를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발달과 결합하여 젠더 폭력의 위험을 증폭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여성의 몸, 감정에 대한 새로운 형식의 산업화는 더욱 빠른 속도로 전개될 것이며, 리얼돌 등 섹스 로봇의 상용화 압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비인격체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와 성적 학대가 결국은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존엄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더욱이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세계에서 폭력과 혐오를 일상적 놀이로 인식하며 성장한 세대에게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젠더 폭력은 더욱 위험한 방식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는 깊은 우려가 있었다.

2 단기적 정책 과제와 미래 정책 방향

가. 단기적 정책 과제

1) 젠더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전문가들은 젠더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동의 인생에 치명적 결과를 미친 성범죄자가 12년의 형량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 이후 피해자와 국민의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CCTV 설치를 비롯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형량 자체에 이미 문제가 배태되어 있었다는 문제의식을 법 적용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속에서 신기술과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젠더 폭력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최근의 판례나 미디어는 여전히 가해자에게 온정적 태도를 취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이 지속한다. 또한 고위 공직자 및 사회적 영향력이 큰 권력자에 의한 성범죄는 피해자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2) 디지털 플랫폼 규제 강화

디지털 공간은 현실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젠더 폭력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며, 디지털 성범죄는 성희롱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속성을 지닌다. 디지털 성범죄를 통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 산업은 젠더 폭력의 확장과 재생산의 중심에 있으며, 많은 이용자들을 끌어들여 연결하고 콘텐츠를 축적하는 산업을 통해 수익이 창출되는 한 디지털 성범죄 산업은 지속될 것이다(김소라, 2019, pp. 18~19).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의 문제로 인식되어 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나타나고 있으나, 젠더 폭력을 근절해야 할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면 이는 보장해야 할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젠더 폭력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가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적 접근을 통해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술사회 젠더 폭력은 기술의 기획, 개발 단계에서부터 젠더 관점의 개입이 필요하며, 기술 사용에 있어 플랫폼 규제 등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적극적 제도 개입이 필요하다(송봉규, 2020).

3) 인간대체물의 인격권과 로봇 규제 원칙 확립

포스트휴먼시대 사람의 권리로서 인권은 인간의 대체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와 관행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섹스 로봇 산업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보았다. 인간 행위와 정서를 모방한 유사 대체물을 통한 성적 쾌락은 섹스 로봇을 인격체가 아닌 사물로 대하도록 하고,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와 성 착취를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섹스 로봇을 성적 쾌락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면 인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섹스 로봇을 둘러싼 이슈는 단순히 판매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넘어 인간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대체물을 학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윤리적 원칙에 대한 논의로 확장해야 한다.

4) 재생산 기술 이용에 대한 윤리적, 법적 근거 마련

생명의료과학 기술의 발전에 기반한 재생산 기술은 인체 밖에서 성적 결합 없는 임신을 가능케 함으로써 이성애 가족제도 밖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가족을 상상하고 구성할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와 재생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김은애, 2008, pp. 275~276). 육체의 자기조절로 자연스럽게 수행되던 임신은 의료적 기술의 개입으로 분절하고, 파편화하며,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몸은 대상화하고 타자화한다. 여성의 몸은 재생산 기관으로 환원하고 임신·출산만을 대리하는 대리모 산업 발전으로 모성까지 난자 공여자, 자궁 대리자, 양육자로 파편화한다(정인경, 2015, p. 20). 재생산 기술은 빈곤층, 빈곤국 여성의 몸을 출산을 위한 도구로 착취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산 기술의 이용에 대한 윤리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여 여성의 몸과 재생산권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재생산 기술의 사용에서 여성의 안전성은 일차적 고려 대상이 아니며,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 평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생산 의료기술을 실용화하고 있는 것이다(정인경, 2015, p. 23).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확대된 난임 지원 사업은 2017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서 시술이 크게 확대되었고 대상 여성의 연령과 횟수 제한도 사라졌다. 이 과정

에서 난임 시술이 여성과 태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또한 여성만 신청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재생산의 압력과 책임을 우선적으로 여성에게 부과하고 있다. 여성이 과배란 주사를 맞기 시작해야 난임 시술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보험을 적용한다. 대리모를 이용한 출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대리모 계약과 관련된 법, 제도는 공백 상태에 있다. 현재 대리모는 불법도 합법도 아닌 상태에 있으며, 금전 지급 의무 및 아동 인도·인수 의무 등을 둘러싼 분쟁, 아동의 국적·친자관계·입양·상속 등 대리모 계약과 관련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현소혜, 2018).

나. 미래 정책 방향: 젠더 폭력에 대한 포괄적 접근

젠더 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 등 젠더 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법·제도적 대응이 긴박하게 필요한 것은 사실지만, 뿌리깊이 내재화된 성 불평등 구조의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젠더 폭력에 대한 효과적 대응은 다양한 차원의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김소라, 2019, p. 25). 위계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미투운동이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한 이래 젠더 폭력은 성 불평등 구조의 최종적 산물이라는 데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왔다. 즉,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물리적 힘의 불균형이 아니라 여성의 노동시장 내 취약한 지위, 남성의 성적 욕구에 관대하고,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는 남성 문화 등 체계적인 성 불평등 구조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폭력예방과 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교육을 2010년대 초반 이후 다양한 법률을 통해 의무화하였지만,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젠더 폭력의 근원이 되는 불평등한 젠더 관계의 문제에 대한 인식보다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지식이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의 한계는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젠더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은 젠더 폭력을 초래하는 사회 구조의 문제와 폭력을 내재화하는 문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가능케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폭력과 혐오, 차별을 놀이를 통해 습득하는 남성성과 남성 문화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에 기반해야 한다.

참고문헌

1. 문헌 자료

2. 웹 사이트

참고문헌

1 문헌 자료

강민정 외(2018), 『기업 내 여성임원 비율 확대를 위한 전략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이수(2018),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성별 격차: 여성노동의 쟁점과 현실」, 『페미니즘 연구』, 18(1), 한국여성연구소, pp. 143~179.

경찰청(2020), 『2019 경찰통계연보』.

고용노동부(각년도), 『고용노동백서』.

_____(각년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공현(2020), 「18세 선거권, 그리고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의미와 과제」, 『월간 복지동향』, 258,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pp. 30~34.

교육부(각년도), 『교육통계분석자료집-유초중등교육통계편』.

국가인권위원회(2020),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국회예산정책처(2019), 『육아지원 재정사업의 특성 분석 및 재정소요 전망』.

권현지 외(2017), 『21세기 디지털 기술변동과 고용관계: 이론과 현실』, 한국노동연구원, pp. 117~133.

김난주·이선행(2020), 『코로나19 이후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여성노동자 위기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상배(2019), 「미래 한국정치의 비전: 분권과 중앙집권이 새로운 균형을 이루다, 이근 외(편)」, 『 디지털 사회 2.0: 분권화 트렌드와 미래 한국』, 21세기북스.

김선혜(2019), 「재생산의료 영역에서의 남성: 한국의 보조생식기술과 난임 남성의 비가시화」, 『경제와사회』, 2019(12), 비판사회학회, pp. 12~43.

김소라(2019),「디지털 자본주의와 성폭력 산업」,『여/성이론』, 41, 도서출판여이연, pp. 10~26.

김숙희 외(2018),「디지털 성폭력 피해 영상물 삭제와 처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화젠더법학』, 10(1), 이화여자대학교젠더법학연구소, pp. 41~66.

김애라(2019),「'탈코르셋', 겟레디위드미 (#getreadywithme): 디지털경제의 대중화된 페미니즘」, 『한국여성학』, 5(3), 한국여성학회, pp. 43~78.

김유빈 편(2018),『미래영향 환경변수 및 시나리오 도출연구 [13대 분야별 연구결과]』, 국회미래연구원, pp.2~6.

김은경(2001),「사이버 성폭력의 현실과 쟁점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7,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pp. 72~117.

김은애(2008),「생명의료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여성의 재생산권리에 관한 연구: 생식세포 기증 및 보조생식술에 관한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이화여대 법학논집』 13(1), 이화여자대학교법학연구소, pp. 279~280.

김은지 외(2020),『 중장기 저출산 대책 수립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종미·박혜림(2020),「생명공학정책의 진단과 발전방안 연구: 사회적 수용 및 시민참여를 중심으로」,『한국공공관리학보』, 34(3), 한국공공관리학회, pp. 1~23.

김주현(2016),「한국여성 노인의 가족 돌봄과 생활만족도」, 『한국인구학』, 39(2), 한국인구학회, pp. 49~70.

김중혁·황기식·송문석(2019),「한국의 단일민족주의와 다문화 수용방안」,『사회과학연구』, 35(4),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 177~202.

김지혜(2017),「모두를 위한 평등: 구조적 차별과 공동체의 책임」,『 2017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국제학술회의 자료집(2017. 9. 21.~22)』, pp. 89~104.

김지형·김효민(2014),「과학기술 젠더 불균형: 현황과 과제」,『과학기술학연구』, 14(2), 한국과학기술학회, pp. 251~280.

김진리(2020),「코로나19 이동 제한 시기에 급증한 가정폭력문제와 프랑스의 정책 대응」,『국제사회보장리뷰』, 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119~123.

김한균(2017),「사이버성범죄·디지털성범죄 실태와 형사정책」, 『이화젠더법학』, 9(3), 이화여자대학교젠더법학연구소, pp. 27~57.

_____(2020), 「디지털 성범죄 양형과 양형기준의 규범적 조정」, 『형사정책』. 32(2), 한국형사정책학회, pp. 7~39.

김혜경(2013), 「부계 가족주의의 실패?: IMF 경제위기 세대의 가족주의와 개인화」, 『한국 사회학』, 47(2), 한국사회학회, pp. 101~141.

김혜련(2010), 「여성주의 연구방법으로서 젠더분석과 기술혁신」, 『가톨릭철학』, 14, 한국가톨릭철학회, pp. 199~232.

노대명(2020a), 「재난기본소득 논의를 통해 본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2020(3), pp. 64~84.

_____(2020b), 『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 방안 연구: 제도 간 연계·조정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다나 J. 해러웨이(1991),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자연의 재발견』, 민경숙 역, 동문선.

대검찰청(각년도), 『범죄분석』.

독일 연방노동사회부(2016), 『2016 백서: 노동4.0』, 미간행.

마경희(2020),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적 돌봄의 재조직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여성노동 현실 진단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성평등 노동으로 자료집(2020. 9. 6.)』, 한국여성노동자회·전국여성노동조합.

마경희 외(2017),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여성가족부.

마경희 외(2018a), 『「국방 양성평등정책서」 마련을 위한 연구』, 국방부.

마경희 외(2018b), 『성 불평등과 남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마경희 외(2020), 『청년 관점의 '젠더 갈등' 진단과 포용국가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마은정(2014), 『공학교육과 젠더혁신』,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머브 엠리 외(2019), 『재생산에 관하여: 낳는 문제와 페미니즘』, 박우정 옮김, 마티.

민영단(2018), 「미래 여군의 역할정립과 효율적 인력운영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전공 훈련결과보고서』.

박선희(2019), 「포스트휴먼의 젠더화와 관계론적 소외」, 『한국언론정보학보』, 94, 한국언론정보학회, pp. 65~91.

박성원 외(2016), 『트랜스휴머니즘 부상에 따른 과학기술 정책 이슈의 탐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예은·조미라(2019), 「포스트휴먼 시대의 여성 주체성」, 『철학탐구』, 56,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pp. 153~179.

배은경(2010), 「현재의 저출산이 여성들 때문일까?」, 『젠더와 문화』, 3(2), 계명대학교여성학연구소, pp. 37~75.

백수원(2020), 「전자인격체로서 반려로봇(섹스로봇)의 규제 기준 마련을 위한 시론적 고찰」, 『법학논총』, 32(3), 국민대학교법학연구소, pp. 97~134.

석재은·장은진(2016), 「여성독거노인과 남성독거노인의 관계자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71(2), 한국노인복지학회, pp. 321~349.

석희정(2014), 「남성독거노인의 홀로 살아가는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복지학』, 66(3), 한국사회복지학회, pp. 29~53.

손동진·김혜경(2017), 「소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 전략 연구: 올레드 TV 글로벌 디지털 캠페인 사례를 중심으로」, 『광고 PR 실학연구』, 10(2), 한국광고PR실학회, pp. 64~95.

손승영(2005), 「한국 사회 저출산 원인과 가족친화적 정책대안」, 『가족과 문화』 7(2), 한국가족학회, pp. 285~316.

_____(2006), 「한국의 가족주의와 사회적 과시: 지속과 변화」, 『담론201』, 9(2), 한국사회역사학회, pp. 245~274.

송봉규(2020), 「불법·유해 웹사이트 연결 실태와 대응방안: 배너광고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2(1), 한국경찰학회, pp. 121~150.

송윤진(2018), 「생명공학기술과 여성의 몸 그리고 권리: 생명의료윤리에서의 관계적 자율성론 소고」, 『젠더법학』, 9(2), 한국젠더법학회, pp. 63~87.

신경아(2010), 「저출산대책의 쟁점과 딜레마: 여성 없는 여성정책」, 『페미니즘 연구』, 10(1), 한국여성연구소, pp. 89~122.

신상규(2013), 「과학기술의 발전과 포스트 휴먼」, 『지식의 지평』, 15, 대우재단, pp. 128~149.

신윤정(2020), 「국내 코호트 합계출산율의 장기 추이 분석」, 『보건사회연구』, 4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534~562.

심영희(2001),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단체연합·대안사회정책연구소·한국성폭력상담소.

심예리(2020), 「[국제리뷰] 코로나19 최전선의 여성들과 돌봄 위기: 새롭고도 오래된 과제」, 『젠더리뷰』 5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 73~82.

안미영(2017), 「고령화와 젠더 불평등」, 『여성연구』, 9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 7~34.

양옥경·정익중·배은경(2019), 『아동청소년 인권의식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엄태완(2007), 「노인 자살관련 요인: 무망감과 우울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 통제감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복지학』, 59(2), 한국사회복지학회, pp. 335~379.

오은진 외(2020), 『기술발전에 따른 여성 일자리 전망과 대응전략(II): 플랫폼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미라(2013), 「여성독거노인의 우울증 경험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재언 외(2019), 『 젠더 관점에서의 인구정책 분석: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나영·정지혜(2019), 「성매매 알선· 후기 사이트: 변화하는 성착취 유비쿼터스, 『젠더와 문화』, 12(2), 계명대학교여성학연구소, pp. 193~230.

이다혜(2019), 「4차 산업혁명과 여성의 노동: 디지털 전환이 돌봄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법과 사회』, 60, 법과사회이론학회, pp. 365~397.

이미정(2020), 「코로나19와 가정폭력: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제4차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코로나19와 젠더폭력: 가정폭력 현황과 대응 자료집(2020. 7.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 1~27.

이민식(2003), 「범죄의 기회와 사이버성폭력 피해」,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 51~87.

이상수(2019),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기술』, 바른북스.

이순미(2016), 「비혼 청년층의 가족의식에 나타난 가족주의의 변형과 젠더 차이」, 『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 40(3), 사회과학연구소, pp. 1~30.

이원태·차미영·양해륜(2011), 「소셜미디어 유력자의 네트워크 특성-한국의 트위터 공동체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48(2), 언론정보연구소, pp. 44~79.

이재경(2015), 「가부장제 이후의 한국 가족: 정상성에서 유연성으로」, 『한국문화연구』, 29, 한국문화연구원, pp. 283~310.

이정필·박진희(2010), 「젠더 정의 관점에서 본 기후 변화 대응 정책」, 『한국환경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10. 11. 12.)』, pp. 3~18.

이준일(2017),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의 역하와 방향.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의미와 쟁점」, 『2017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국제학술회의 자료집(2017.9.21.~22)』, pp. 69~86.

이지언(2012), 「과학기술에서 젠더와 몸 정치의 문제: 다나 해러웨이(Donna J. Haraway)의 사이보그 페미니즘(Cyborg Feminism)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17, 한국여성철학회, pp. 97~121.

이진옥(2018), 「여성 정치와 페미니즘 정치 사이 : 촛불혁명 이후 젠더 민주주의 구축을 위한 모색」, 『기억과 전망』, 39(0), 한국민주주의연구소, pp. 193~242.

이효빈·김해도(2017), 「과학기술의 젠더혁신 정책 방향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0), 한국콘텐츠학회, pp. 241~249.

인사혁신처(각년도), 『국가공무원 인사 통계』.

_____(2020),『2020 인사혁신통계연보』.

인사혁신추진위원회(2016), 『인사비전 2045』.

장혜경 외(2012), 『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 전망(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혜경 외(2013), 『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Ⅲ)』,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둘순(2018), 「[기획특집] 젠더관점에서 본 고령화정책」, 『젠더리뷰』, 5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 28~36.

정인경(2015), 「재생산 기술과 여성의 시민권」, 『 오토피아』 30(1), 인류사회재건연구원, pp. 5~34.

정창권 외(2019),『미래 대한민국의 저출산과 일자리에 숨겨진 피드백 루프와 시나리오』, 국회미래연구원.

조영미(2006),「불임기술과 의료권력 그리고 여성」, 『여/성이론』. 14, 도서출판여이연, pp. 56~77.

채여라 외(2017),『미래 기후 및 사회경제 여건 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정책 이슈 발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최세림·정세은(2019),『성별 직종분리와 임금격차 현황 및 임금공개의 기대효과』, 한국노동연구원.

최정인·전윤정(2020),『국제의회연맹(IPU) 성인지적 코로나19 대응 제안의 배경과 주요 내용』, 국회입법조사처.

클라우스 슈밥(2016),『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송경진 역, 새로운 현재.

통계청(각년도),『지역별고용조사』.

_____(각년도),「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_____(2019),『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_____(2020),『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한국고용정보원(2017),『고용보험통계』.

_____(2018),『 고용보험통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7),『2015년도 우리나라 여성과학기술인력 현황』.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한애라(2019),「인공지능과 젠더차별」,『이화젠더법학』 11(3): 1~39.

현소혜(2018),「대리모를 둘러싼 쟁점과 해결방안 – 입법론을 중심으로」,『가족법 연구』, 32(1), 한국가족법학회, pp. 107~148.

허성원(2019),「정치를 새롭게 읽어내는 퀴어정동정치: 한국 퀴어퍼레이드를 중심으로」,『문화와 사회』, 27(3), 한국문화사회학회, pp. 7~48.

허소영(2009),「쪽방지역에 홀로 사는 남성노인의 삶의 경험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허재준(2017), 『4차 산업혁명의 충격과 일자리의 미래- 디지털 기술의 심화와 일자리』, 미발간 원고.

황정미(2005), 「'저출산'과 한국 모성의 젠더정치」, 『 한국여성학』, 21(3), 한국여성학회, pp. 99~132.

후지사키요시애·강신재·진영재(2019), 「온라인 정치적 활동이 성 소수자 이슈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58(0), 한국의회발전연구회, pp. 33~67.

D.S.O(2017), 「매체별로 보는 디지털 성폭력 실태·양상」, 『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 자료집(2017. 9. 26.)』.

Zhou, G, Li L. and Meng, L.(2018),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중국의 경험」,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 대전환: 불평등, 새로운 상상과 만나다 자료집(2018. 10. 31.)』, pp. 29~55.

Bennett, W. L. and A. Segerberg(2011), "Digital media and the personalization of collective action: Social technology and the organization of protests against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4(6): pp. 770-799

Bertram, Hans u.a.(2006), *Wem gehört die Familie der Zukunft?*, Expertisen zum 7. Familienbericht der Bundesregierung, Verlag Barbara Budrich.

Buhrkart, Günter(2007), "Zukünfte des Geschlechterverhältnisses", *Zeitschrift für Soziologie,* Jg 36(5), ff. 401-405.

Childs, Sarah and Mona Lena Krook(2008), "Critical Mass Theory and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Political Studies,* 56, pp. 725–736.

Blickenstaff, J. Clark(2005), "Women and science careers: leaky pipeline or gender filter?", *Gender and education* 17(4): pp. 369-386.

Cockburn, C. and S. Ormrod(1993), *Gender and Technology in the Making*, SAGE Publications Ltd.

Esping-Andersen, Gosta and Francesco C. Billari(2015), "e-theorizing Family Demographic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1), pp. 1–31.

Gerson, K(2010), *The unfinished revolution how a new generation is reshaping family, work, and gender in America,* Oxford University Press, Inc.

Glick Peter and Susan T. Fiske(2001), An Ambivalent Alliance: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s Contemporary Justifications for Gender Inequality, *American Psychologist,* 56(2), pp. 109-118.

Griffiths, M. and K. Moore(2010), "'Disappearing Women': A Study of Women Who Left the UK ICT Sector", *Journal of technology management & innovation,* 5(1), pp. 95-107.

Halberstam, J. and I. Livingston(Eds.)(1995), *Posthuman Bodies*, Indiana Universtiy Press.

Hall, J. V. and A. B. Krueger(2018), "An analysis of the labor market for Uber's driver-partners in the United States", *ILR Review,* 71(3), pp. 705-732.

ILO(2018), *Care Work and Care Jobs for the Future of Decent Work.*

___(2020), *The COVID-19 response: Getting gender equality right for a better future for women at work.*

Judd, R. C(1972), "Use of Delphi methods in higher education",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4(2), pp. 173-186.

Kelshaw, T(2016), "AI & gender", *A Maxus survey.*

McDonald, Peter(2006), "Low Fertility and the State: The Efficacy of Polity", *Population Development Review,* 32(3), pp. 485-510.

Mckinsey Global Institute(2015), "The Power of Parity: How Advancing Women's Equality can add $12Trillion to Global Growth".

_____(2018), "The Power of Parity: Advancing Women's Equality in Asia Pacific".

Montgomery, Alexandra(2008), "US Families 2025: In search of future families", *Futures* 40: pp. 377-387.

OECD(2017), “The Pursuit of Gender Equality: An Uphill Battle“.

_____(2020), *OECD Employment Outlook 2020*.

Schiebinger, L(2010), *Gender, science and technology, Background paper for the Expert Group meeting on Gender, Science and Technology*, United Nations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DAW, part of UN Women) and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Skolnick, Arlene S. and Jerome H. Skolnick(2007), *Family in Transition : rethinking marriage sexuality child rearing and family organization*, Boston: Allyn and Bacon.

Tronto, Joan C(2013), *Caring Democracy: Markets, Equality, and Justice*, New York University Press: New York.

UNDP(2019), *Human Development Report 2019: Beyond income, beyond averages, beyond today*, Inequalities in human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Wajcman, J(2004), *Technofeminism*, Cambridge, UK; Oxford Polity Press.

_____(2006), “women and technology to gendered technoscience. Information”, *Community and Society,* 10(3), pp. 287-298.

Wallman, James(2016), *The Future of Gender Equality,* Yell Business.

WHO(2019), *Gender equity in the health workforce: Analysis of 104 countries.*

World Economic Forum(2018), *The Future of Jobs report 2018, Geneva*: World Economic Forum.

_____(2019), *Global Gender Gap Report 2020.*

2 웹 사이트

경찰청(2018. 12. 20),「최근 5년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검거 인원 현황, 최근 5년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피해자 현황 국회 제출자료」, 2020. 8. 10 접근,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32&q_bbscttSn=1B000006152020000&q_tab=&q_searchKeyTy=sj___1002&q_searchVal=%EC%B9%B4%EB%A9%94%EB%9D%BC&q_rowPerPage=10&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

경향신문(2019. 12. 30.),「경찰, 2023년부터 남녀 구분없이 순경 통합모집」, 2020. 10. 28 접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230163700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 10. 20.),「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 구제절차 도입,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및 재직자 체당금 신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 등」, 2020. 11. 20 접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534).

관계부처합동(2020. 11. 20.),「코로나19 사회의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 2020. 12. 5 접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751).

백혜련 의원 보도자료(2017. 9. 27.),「'사법부 유리천장 견고' - 고위법관 여성 비율 제자리, 여성 관리자 공무원 수도 정부·국회보다 훨씬 적어」, 2020. 8. 10 접근, (https://blog.naver.com/100hyeryun/221106389609).

신상규(2020. 11. 23.),「포스트휴먼과 포스트휴머니즘, 그리고 삶의 재발명」, 2020. 12. 17 접근, (https://horizon.kias.re.kr/12689).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 6. 29.),「자산총액 2조 이상 기업 중 여성임원이 있는 기업 66.7%로 전년 대비 6.8%p 증가」, 2020. 11. 20 접근,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04).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 7. 25.),「매출액 500대 기업 여성임원비율 3.6% - 2018년 사업보고서 바탕 여성임원 현황 조사·분석 결과 발표」, 2020. 11. 20 접근,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468).

최현수(2020. 9. 8.), 「'전 국민 고용보험'을 넘어 '전 국민 사회보험'으로, 시사인 677호」, 2020. 11. 20 접근,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53).

통계청 보도자료(2019. 3. 28.),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 2020. 12. 17 접근」,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3873).

4차산업혁명위원회(2018. 3. 8.), 2016~2030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 전망」, 4차산업혁명위원회 5차 회의 보고안건 1호, 2020. 12. 17 접근, (https://www.4th-ir.go.kr/article/detail/238?boardName=internalData&c ategory=).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도자료(2020. 6. 15.), 「국민 10명 중 9명,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법, 스토킹 방지법 제정 필요해」. 2020.12.17. 접근. (https://www.kwdi.re.kr/plaza/bodoView.do?s=searchAll&w=21%EB%8C%80&p=1&idx=125864)

한겨레 신문(2020.6.29.), 「'차별금지법' 천신만고 끝 10명 모아 발의」. 2020.6.29. 2020.12.17. 접근.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51448.html).

한겨레 신문(2019.10.24.), 「'딥페이크' 활용해 영화도 자동더빙」. 2020.12.17. 접근. (http://www.hani.co.kr/arti/science/future/914385.html).

The glass-ceiling index, 2020. 11. 20. 접근, (https://infographics.economist.com/2020/glass-ceiling/).

UN Women(2020), COVID-19 and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2020. 12. 17 접근, (https://www.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s/2020/04/issue-brief-covid-19-and-ending-violence-against-women-and-girls).

WHO(2020), Joint Leaders' statement - Violence against children: A hidden crisis of the COVID-19 pandemic, 2020. 12. 17 접근. (https://www.who.int/news-room/detail/08-04-2020-joint-leaders-s-statement---violence-against-children-a-hidden-crisis-of-the-covid-19-pandemic).

열린국회정보: https://open.assembly.go.kr/portal/mainPage.do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http://org.go.kr/orgnzt/chart/viewGvrn.do

통계청 KOSIS: https://kosis.kr/index/index.do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GSIS) DB:
https://gsis.kwdi.re.kr/gsis/kr/main.html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main.do

IPU Parline: https://data.ipu.org/women-ranking?month=5&year=2020

OECD data: https://data.oecd.org/

OECD Stat: http://stats.oecd.org

Abstract

A study to derive future policy directions based on gender equality issues and predictions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Gender equality is essential to the full realization of human rights, democracy and social justice, an important value that our society should aim for, and a prerequisite for a sustainable future in terms of human development, economic growth, and population reproduction.
- This study aims to forecast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in Korean society in the long-term future (2040) in consideration of future macro-social changes, and to present long-term policy tasks and directions to improve it.
- An analysis of the trend of gender equality in Korean society over the past 20-30 years was performed, and policy tasks and directions were suggested to improve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in the future through the prospect of gender equality as of 2020 and the prediction for 2040.
- The analysis of gender equality trends over the past two decades found that there had been gradual improvements in areas such as public decision making, economic resource allocation, unpaid labor distribution, gender norms, gender discrimination awareness, sexual violence, and more.
- As an effect of macro-environmental change on gender equality, it is expected that positive effects will be seen in the political domain (change of traditional political paradigm, popularization of feminism, revitalization of social minority politics) and in the social domain (change of family, low birthrate).
-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expected level of gender equality in 2040, an overall level of less than 50 points is seen, but the improvement of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in public decision-making is expected to progress at the

fastest rate compared to the present, while reductions in gender violence are expected to progress at the slowest rate. To improve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in the future, short-term policy tasks and long-term policy directions are separately presented.

성평등 이슈와 예측 기반 미래 정책방향 도출 연구

인 쇄	2020년 12월 27일
발 행	2020년 12월 31일
발 행 인	김 현 곤
발 행 처	국회미래연구원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2층 222호
전 화	02)786-2190
팩 스	02)786-3977
홈페이지	www.nafi.re.kr
인 쇄 처	주식회사 동진문화사 (02-2269-4783)

ⓒ2020 국회미래연구원

ISBN 979-11-90858-31-1 (93300)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